

## 표지

### ■ 앞면

2007년 평화재단 활동보고서

# 주제 1안) 갈등을 넘어 평화로 다양성속의 조화로

# 주제 2안) 화해와 평화를 위한 발걸음



### ■ 세네카

2007년 평화재단 활동보고서    갈등을 넘어 평화로, 다양성속의 조화로    (재)평화재단

### ■ 뒷면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137-875)  
TEL | 02)581-0581 FAX | 02)581-4077  
E-mail | [staff@peacefoundation.or.kr](mailto:staff@peacefoundation.or.kr)  
Homepage | [www.peacefoundation.or.kr](http://www.peacefoundation.or.kr)

2007 평화재단 활동보고서

# 갈등을 넘어 평화로 다양성속의 조화로

펴낸 날 | 2008년 2월 25일 (월)

펴낸 이 | 법 료

펴낸 곳 | 재단법인 평화재단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137-875)

전 화 | 02) 581-0581

전 송 | 02) 581-4077

홈페이지 | [www.peacefoundation.or.kr](http://www.peacefoundation.or.kr)

이 메 일 | [staff@peacefoundation.or.kr](mailto:staff@peacefoundation.or.kr)

## 목차

- I. 인사말
- II. 평화재단 소개
- III. 평화재단 활동일지
- IV. 사업별 활동 보고
  - 1) 연구정책 활동
  - 2) 교육 활동
  - 3)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섭·조정 활동
  - 4) 사이버 활동
- V. 평화재단 발간물 목록
- VI. 언론보도 및 인터뷰 기사로 보는 2007년 평화재단
- VII. 함께 하는 사람들

※ 사진이 중간 중간 해당되는 곳에 들어갑니다.

※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은 각각 자료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 I. 인사말

아래는 2006년 인사말임, 참고자료로 남겨둠.

## 갈등을 넘어 서로 살리는 관계로

그렇지 않았던 해가 어디 있었겠냐 마는, 특히 올해는 남북관계가 더욱 심하게 요동했던 해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남북간, 북미간 북일간의 긴장과 갈등이 심했고,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극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시민사회단체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아울러, 인도적 지원단체들과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겐 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할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재단은 이제 출범한지 불과 3년밖에 안된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례보고서에 기록된 평화재단의 일지는 참으로 많은 활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재단의 활동이 2006년 특별히 활발했다는 점은 그 만큼 남북문제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평화재단의 활동이 의미가 크다고 하지만, 그것이 남북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2006년 평화재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노력했고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제 2007년은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6자회담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수가 있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작년의 홍수와 기근, 전염병으로 다시 심각한 기아와 죽음의 비극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저희가 할 일을 찾고자 합니다.

2006년 평화재단의 활동이 남남갈등과 남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평화, 서로 살려나가는 살림의 큰 방향으로 사회의 중심을 이동시키는데 작은 힘이 되어, 새해에도 이 힘이 더욱 증폭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평화재단 활동에 도움과 관심을 주신 많은 분들 일일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7년 1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 II. 평화재단 소개

- 평화재단은 이런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을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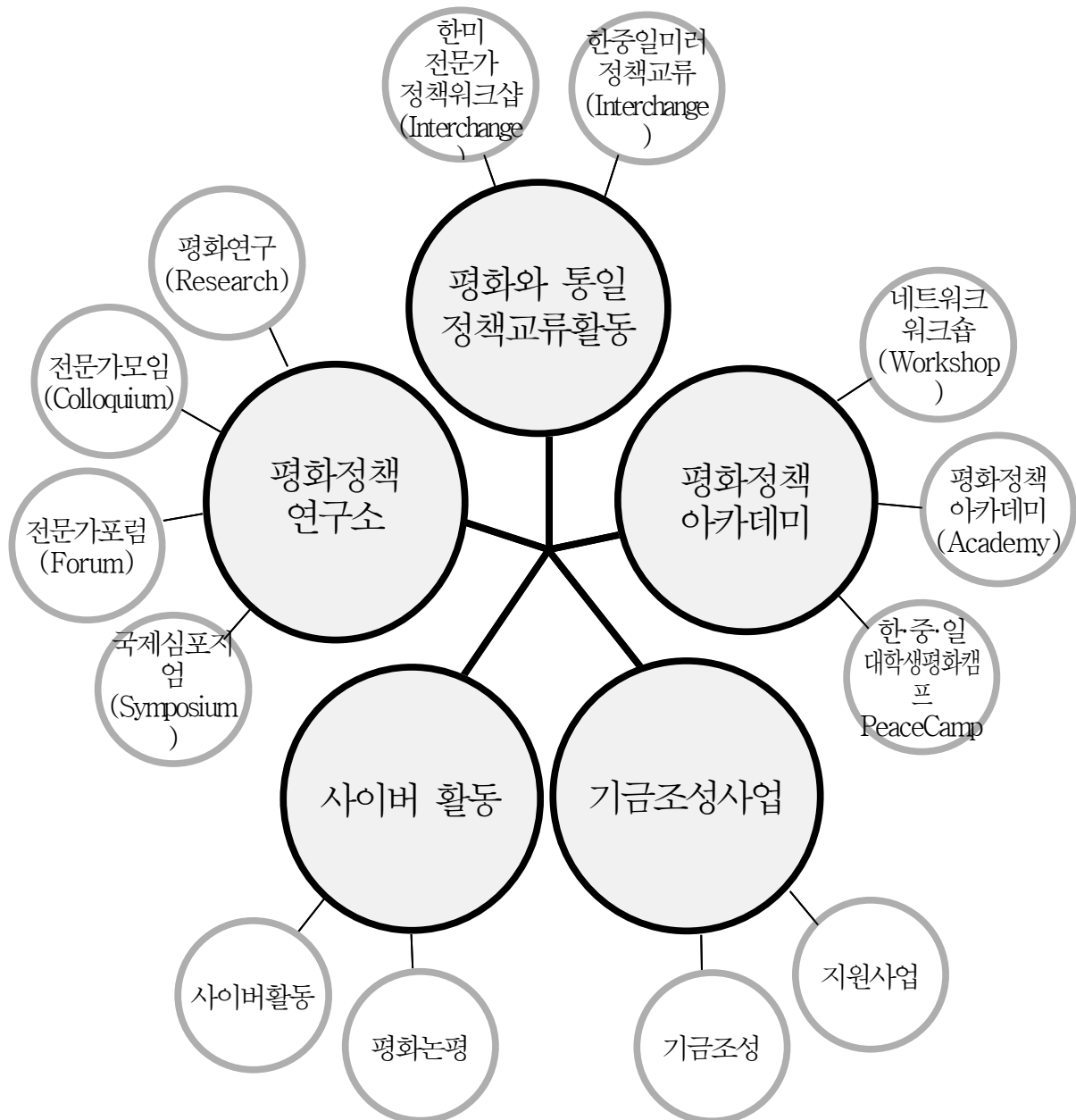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 평화재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고  
해방 직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서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관계 속에 체제경쟁을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되어온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평화재단의 활동구상



### Ⅲ. 활동일지

1월

01.10(수) 15:00 화해상생마당 <2007 종교시민사회단체인사 새해모임>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

01.18(목) 07:30 화해상생마당 제9차 운영위원회 | 뉴서울호텔 2층 송죽 | 6명 참가

① 2007 화해상생마당 사업에 대한 논의 ② 2007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과 회원 영입

01.22(월) 19:30 제13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대북인도적지원법안”· 워크샵에서 제출된 의견 발표 | 김동균(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관계자 의견 보고 | 박주민(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②“한반도 평화협정안”· 워크샵에서 제출된 의견 발표 |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③ 모임 일정 및 운영 관련 | 김동균

01.25(목) 19:00 제11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2007년 정세정리와 대응 ② 전문가모임(콜로키움) 운영관련 논의

01.29(월) 17:00 북한인권평화포럼 간사모임 | 정토회 세미나실

01.30(화) 17:00 제10차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① 평양방문보고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② 2006년 활동 평가 및 2007년 운영 계획

01.30(화) 19 : 30 제1차 전문가모임 좌장회의 | 법륜

01.31(목) 19 : 30 제10차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①“2007년도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모임의 연구주제 및 운영방향-워크샵에서 제출된 의견 발표 ②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모임 연구진 추가 추천

2월

02.05(월) 19:30 제14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한반도 평화협정안” 관련 세미나 및 법안 논의 · 세계 평화협정 사례들에 대한 검토로부터 얻는 시사점들-“한반도평화협정”(초안) 제5장과 제6장을 중심으로 | 주정립(평화재단 상임연구원) · 평화협정과 북미간 합의(북미관계) |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

02.05(월)~10(토) 미국 워싱턴 방문 | 법륜

02.14(수) 07:30 화해상생마당 제10차 운영위원회 | 뉴서울 호텔 2층 송죽 | 4명 참가

① 2007 화해상생 셋째마당 마당 운영 논의 ② 2007 화해상생마당 앞으로의 사업계획

- 02.26(월) 19:30 제15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한반도 평화협정안” |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남북 통일조약안” ③  
 대북인도적지원법안 ④ 미국방문보고 | 법륜 ⑤ 추가 참가자 추천
- 02.27(화) 19:00 제12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워싱턴DC 방문 보고 | 법륜 ② 전문가포럼 내용 요약 발표및 조율 논의 | 조성렬(국  
 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2.28(수) 19:00 2007년 제3기 평화재단 정기이사회 | 정토회관 세미나실  
 ① 보고사항 : 2006년 사업실적보고 ② 2006년 결산보고(안) 심의 ③ 2007년 사업계  
 획(안) 심의 ④ 2007년 예산계획(안) 심의

### 3월

- 03.02(금) 07:30 화해상생마당 제11차 운영위원회 | 뉴서울호텔 2층 송죽 | 8명 참가  
 ① 2007 화해상생 셋째마당에 대한 운영 논의 ② 화해상생 셋째 마당 예산(안) ③  
 2007 화해상생마당 앞으로의 사업계획 ④ 3. 27(화) 예정된 화해상생 넷째 마당 온실  
 가스 저감 실천기업 사례 및 실태보고'연기(안) ⑤ 화계사 '퓨전 문화 예술제' 기  
 획(안) ⑥ 워싱턴 DC 방문 보고 | 법륜 ⑦ 화해상생마당 전체회원 워크샵 개최 여부
- 03.02(금) 19:00 제11차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 서강대학교 사무처장 회의실 | ①  
 미국방문 보고와 정세분석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교수), 법륜 ② 2007년  
 월별 연구주제 계획 ③ 포럼 계획
- 03.08(목) 14:00 화해상생마당 셋째마당 “화해상생노사’ 어떻게 가능한가-기업별 노사협력  
 사례보고 모임” |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03.09(금) 17:00 제11차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① 2007년 연구 주제 ② 추가 참가자 추천
- 03.13(화) 14:00 제7차 평화재단 3월 전문가 포럼.“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 프레스센터 19  
 층 기자회견실
- 03.19(월) 19:30 제16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한반도 평화협정안”②“남북통일협약안” |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③ 제  
 8차 전문가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기획 논의
- 03.20(목) 07:30 제13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한나라당의 ‘신포용정책’의 기조와 파장 | 구해우(미래재단 상임이사)
- 03.23(금) 07:30 화해상생마당 제12차 운영위원회 | 뉴서울호텔 2층 송죽 | 7명 참가  
 2007년 화해상생마당 운영방법(성격, 조직, 재정)
- 03.23(금) 19:00 실무자 교육(강연회) | 최상용(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4월

- 04.02(월) 19:30 제17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 제8차 전문가포럼 관련 논의 • 진행 관련 • 발표문“한반도 평화협정안”점검



|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04.05(목) 07:30 제12차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① 최근 한반도 정세관련 토론 | 이도향(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② 2007년 월별 연구주제(계획) ③ 포럼 계획

04.05(목) 16:00 북한인권평화포럼 간사모임 | 정토회 세미나실

04.09(월) 19:30 제18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 제8차 전문가포럼 발표문 점검 |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② 제9차 전문가포럼“남북통일협약안”논의

04.12(목) 제5차 북한인권평화포럼 | 한기총회의실 2007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운동의 전망 |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04.16(목) 화해상생마당 2006년 활동보고 자료집 발간

04.18(수) 14:00 제8차 전문가 포럼“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04.25(수) 18:00 제12차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04.26(목) 07:00 화해상생마당 제13차 운영위원회 | 코리아나호텔 3층 사카에 | 5명 참가

① 2007년 화해상생마당 운영방법 : 사무국을 평화재단에서 생명과 평화의 길로 옮김

04.26(목) 19:00 제14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전체토론

① 애틀란틱 카운슬 북한실무단 보고서 검토

04.30(월) 19:30 제19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통일협약안” |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②“한반도 평화협정안”수정보완 관련 |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③ 전문가 포럼 기획안 점검 · 제9차 전문가포럼“남북통일협정안” · 제10차 전문가포럼“대북인도적지원법안”

5월

05.04(금) 07:30 제13차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① 북한 금융문제(특히 BDA)와 최근 북한 정세 |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05.04(금) 14:00 제9차 북한인권평화포럼 간사모임 | 정토회 세미나실

05.08(화) 평화논평 제12호 “남북관계, 출구론적 발상에서 벗어날 때”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05.09(토)~12(토) 제8차 북경 한민족포럼 참가 |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 이사, 연구위원 등 10명, 실무자 5명 총 15명 참가

05.16(수)~22(화) 미국 워싱턴 방문 | 법륜

05.17(목) 18:00 평화재단 워싱턴 사무소 개소

05.14(월) 19:30 제20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남북 통일협약안” |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수 변호사) ②“통일프로세스” |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5.21(월) 19:30 제21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남북 통일협약안” |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05.25(금) 19:00 제15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중국의 역할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② 미국방문 보고 | 법륜

05.28(월) 14:00 제9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05.31(목) 평화논평 제13호 “BDA문제를 분석하면 북핵문제 해법이 보인다” | 구해우(미래재단 상임이사)

6월

06.01(금)~02(토) 2007 NGO 전문가 집중토론 워크숍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06.08(금) 07:30 제14차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①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경협 효과성 분석 (1) |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06.08(금) 17:00 제13차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② 전문가 포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안)”기획

06.08(금) 21:00 평화법제연구전문가모임 MT | 윤영환 변호사 댁

① 8, 9차 전문가포럼 평가, 관련 논의 ② 향후 활동 방향 및 과제

06.11(월) 18:00 제6차 북한인권평화포럼 | 북한인권운동의 단체별 성격분석 | 북한인권시민연합 강당

06.18(월) 제10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 다케사다 히데시(방위성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 | 정토회관 세미나실

06.19(화) 14:00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06.20(수) 제10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 평화변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의 방향 " | 이즈미 하지메(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정토회관 세미나실

06.21(목) 제10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 평화변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의 방향 " | 조호길(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정법부교수) | 정토회관 세미나실

06.25(월) 평화논평 14호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자” | 노옥재(좋은벗들 사무국장)

06.26(화) 07:30 제15차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①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경협 효과성 분석 (2) 전체토론

7월

- 07.05(목) 19:00 제16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2.13합의 이후 한반도 비핵화로드맵과 향후과제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07.09(월) 19:30 제22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 “한반도 평화협정안”·“한반도 평화협정안”수정안 | 운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전문가 집중토론회 기획 논의
- 07.10(화) 14:00 제14차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① 전문가포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안)”기획 논의 일정 변경  
 ② 향후 운영 방향
- 07.13(금)-14(토) 제6차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실천적 쟁점” | 바람과 물 연구소
- 07.19(목) 평화논평 제 15호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대한 단상(斷想)” |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 07.20(토)-21(일) 제7차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북한인권운동, 더 나아가기” | 바람과 물 연구소

## 8월

- 08.02(목) 07:30 제16차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①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경협 효과성 분석 (3) 전체토론 ② 2007년 하반기 일정 ③ 대북인도적지원법안 수정안" 점검
- 08.02(목) 14:00 제15차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① 북한 구금시설 현황 | 오경섭((한세정책연구원 연구원) ② 전문가포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안)”일정 무기 연기(비공개 집중토론회 포함)
- 08.02(목) 19:00 제17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한국군의 위상과 미래 |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②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관련 논의
- 08.02(목) 17:00 평화안보를 위한 한국·미국 전문가 정책워크숍 1차 준비모임  
 ① 각 워크숍 한국측 주제발표자 선정
- 08.10(금) 평화논평 제16호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져다줄 도전과 기회”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08.20(월) 평화논평 제17호 "남북 통합은 북한의 시장진입 기반 조성으로부터" | 박정원(국민대 법대 교수)
- 08.23(목) 평화논평 제18호 “북한 재난과 참사, 복구에 관한 몇 가지 단상 발행” |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08.23(목) 19:00 제11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2)”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08.27(월) 평화논평 제19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연구와 실행 시차 인정하자” |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08.31(금) 17:00 평화안보를 위한 한국·미국 전문가 정책워크숍 2차 준비모임

① 원고, 번역, 편집 마감일

9월

09.03(월) 19:30 제23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전체 토론

①“대북인도적지원법안”②“한반도 평화협정안”제2차 수정안

09.04(화) 평화연구 총서 07-01 발간 |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결과자료집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09.04(화) 14:00 제12차 전문가 포럼 “대북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 |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공동주최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09.04(목) 19:00 제18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국제적 긴장과 갈등에서의 UN 평화유지역역할의 성과와 한계 | 김학린(단국대 분쟁 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09.06(목) 17:00 평화안보를 위한 한국·미국 전문가 정책워크숍 3차 준비모임

① 자기 소개서, 명함 점검 ② 평화체제에 대한 의견 교환

09.06(목) 22:10 “한반도 평화협정안”제2차 수정 건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관계자 회의

09.11(화) 평화논평 제20호 “북미관계 관망법” | 길정우(중앙 m&b 대표이사)

09.13(목) “한반도 평화협정안”제2차 수정안 제출 |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09.16(일)-23(일) 제1회 평화 안보를 위한 한국·미국 전문가 정책 워크숍 | 워싱턴 DC, 뉴욕, LA  
| • 미국참가자 : Korea Society, 국무부, 미국 의회,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 연구소, CSIS, USIP, LA 한반도 관련 전문가 등 • 한국참가자 : 조민, 김영수, 조성렬, 백승주, 동용승, 이영훈, 정안숙, 박지나, 강여경

09.18(화) 평화논평 제21호 “대북지원의 효율적 방안 탐색” |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27(목) 평화논평 제22호 “북·미관계 정상화, 개방, 그리고 북한인권” |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0월

10.05(금) 20:30 제1회 평화안보를 위한 한국·미국 전문가 정책워크숍 평가 모임

10.06(토) 08:00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1차 수정 건 평화법제연구전문가모임 관계자 회의

10.08(월) 평화논평 제23호 “ 「10·4 공동선언」 :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이중주 ” |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10(수) 14:00 제13차 전문가 포럼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 |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곤의원 공동주최 | 전경련회관 제1회의실

10.11(목) 19:00 제19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2007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응

10.12(금)-13(토) 제8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숍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관

계와 시민사회의 대응” | 바람과 물 연구소

- 10.15(월) 평화논평 제24호 “1004공동선언과 평화체제의 남북 당사자주의” |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
- 10.16(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2차 수정안 제출 | 박주민(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10.17(수) 17:00 제16차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① 지원개발과정에서의 인권문제 ② 제16회 전문가포럼“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 방안”기획 논의
- 10.18(목) 19:30 제24차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① 집중토론회“남북 통일협정안을 제안한다”관련 논의 • “남북 통일협정안”1차 수정안 :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집중토론회 진행방식
- 10.22(월) 평화논평 제25호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인권문제의 전개방향”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10.24(수) 14:00 제14차 전문가 포럼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원효, 최제우, 함석헌 사상을 중심으로-”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0.26(금)-27(토) 제9차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 | 바람과 물 연구소
- 10.29(월) 19:00 전문가집중토론회 “남북통일협정안을 말한다(2)” |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평화재단 회의실
- 10.29(월)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제2차 수정안 및 관련 참고자료 올림  
※ 참고자료 : • 시안 : 2005년 11월 평화재단 창립 1주년 심포지엄 발표 • 제1차 수정안 : 2007년 9월 제12차 전문가포럼 발표 • 제12차 전문가포럼 토론내용 요약정리문
- 10.30(화) 평화논평 제26호 “이제 대 북한개발협력기구의 발족을 준비해야” |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11월

- 11.01(목) 14:00 제15차 전문가 포럼 “북한경제의 변화실태와 주민들의 삶” |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
- 11.01(목) 19:00 제20차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①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발표내용 검토 • 1주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2주제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3주제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1.05(월) 평화논평 제27호 “워런 버핏의 북한투자 전망을 새겨 들어야” |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11.11(일)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자 모임 | 발표문 점검

- 11.15(목) 평화논평 제28호 “사그러든 ‘북풍’과 한국 대선, 그리고 미국은?” | 길정우(중앙 m&b 대표이사)
- 11.15(목) 14:00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1.21(수) 제16차 전문가 포럼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 방안”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11.23(금) 평화논평 제29호 “총리회담 이후 남북경협외 과제” |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 11.24(토)–25(일) 제10차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2008년 남북관계의 새 국면, 무엇을 할 것인가” | 바람과 물 연구소
- 11.28(수) 평화논평 제30호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 북한의 태도와 효과” |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11.28(수) 14:00 제17차 전문가 포럼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토대와 성분”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11.28(수)–12.01(토) 일본 동경방문(9조 아시아종교인 회의) | 법륜, 장옥희(평화재단 국제부 간사)

## 12월

- 12.03(월) 17:00 제17차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① 2007년 연구활동 평가 및 2008년 계획
- 12.11(화) 평화논평 제31호 “대선 보이콧? 평화와 대선” |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
- 12.12(수) 제18차 전문가 포럼 “서해평화협력지대는 NLL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12.13(목) 07:30 제19차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① 2008년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② 송년회
- 12.13(목) 11:30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 | 법륜 | 서울세종호텔 3층 세종홀
- 12.13(목) 19:00 자원봉사자 송년회
- 12.18(화) 평화논평 제32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정립의 필요성”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12.24(월) 평화논평 제33호 “남북관계의 발전은 법제도화에 못지않게 약속이행이 중요하다” | 박정원(국민대 법대 교수)
- 12.25(화) 17:00 전문가모임 ① 대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
- 12.27(목) 평화연구 총서 07-02 발간 | 2007년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결과자료집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모색>
- 12.28(금) 19:00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송년모임 | 이경주 교수 택
- 12.31(월) 평화논평 제34호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거는 기대” |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 IV. 사업별 활동 보고

# 1. 평화정책 연구

(비전과 전망모색)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제시한다.

(통합적 대안제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간에 정례적인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며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전문가 네트워크) 화해와 평화연구의 각 분야별 연구자 및 전문가들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한다

(연구주제)

- 평화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연구
- 통일 · 남북한의 통일 미래를 대비한 통일방안 연구
- 인권 ·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
- 한민족 네트워크 · 70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공동체 네트워크 연구
- 동북아 평화 ·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갈등·분쟁 · 세계 분쟁지역의 갈등과 그 해결에 관한 연구
- 위의 활동을 위한 전문가모임, 전문가포럼, 심포지엄 등

## (1) 전문가 모임 (Colloquium)

### ● 목적

- 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대안제시를 위한 정책연구
- ② 전문가 연구팀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

### ● 운영

주제별 약 10여명 전후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이상의 토론모임을 갖고 토론의 주요주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연 1회의 포럼을 개최한다.

### ● 구성

교수, 연구위원, 박사급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정책보좌관, 정부정책실무책임자, 평화통일 관련 활동가, 북한출신연구자 등 약 10여 명의 전문가

### 좌장회의

01.30(화) 19 : 30 제1차 전문가모임 좌장회의 | 9명 참가 | 참가자, 진행, 섭외 관련 논의

### 제 1

### 콜로키

### 움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 연구모임

남북의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의 평화, 외교안보, 국방, 통일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 ① 연구위원

- 1) 좌장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2) 연구위원 : 윤여준(전 환경부장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조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린(단국대학교 분쟁해결 연구센터 연구교수), 구해우(미래재단 상임이사),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법 루(평화재단 이사장)



3) 실무 : 유정길(평화재단 기획실장)

② 세부일정 및 내용

차수	일시장소	발표	내용
11	01.25 (월) 19:00 평화재단		① 2007년 정세정리와 대응 ② 전문가모임(콜로키움) 운영관련 논의
12	02. 27 (화) 19:00 평화재단	법 른	① 법률크스님의 워싱턴DC 방문 보고 ② 전문가포럼 내용 요약 발표및 조율 논의 (조성렬, 조민)
13	03. 20 (목) 07:30 평화재단	구해우	① 한나라당의 '신포용정책'의 기초와 파장
14	04. 26 (목) 19:00 평화재단	전체 토론	① 애틀란틱 카운슬 북한실무단 보고서 검토
15	05. 25 (금) 19:00 평화재단	조성렬	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중국의 역할 ② 미국방문 보고 : 법률크스님
16	07. 05 (목) 19:00 평화재단	조성렬	① 2.13합의 이후 한반도 비핵화로드맵과 향후과제
17	08. 02 (목) 19:00 평화재단	백승주	① 한국군의 위상과 미래 ② 11월 15일 창립3주년기념 심포지엄관련 논의
18	09. 04 (목) 19:00 평화재단	김학린	① 국제적 긴장과 갈등에서의 UN 평화유지역역할의 성과와 한계
19	10. 11 (목) 19:00 평화재단		① 2007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응
20	11. 01 (목) 19:00 평화재단	조성렬 백승주 조민	①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발표내용 검토 • 1주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 2주제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 3주제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제 2 콜로키움

북한 현실의 이해 연구모임

북한사회구조와 체제 그리고 구체적인 북한민중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① 연구위원

1) 좌장 : 김영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 연구위원 :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길정

우(중앙 m&b 대표이사),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법륜(평화재단 이사장),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교수), 이도향(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철(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 실무 : 김정님 (평화재단 조사자료부장)

② 세부 일정 및 내용

차수	일시·장소	발표자	내용
10	01.31(목)19:30 평화재단		①“2007년도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모임의 연구주제 및 운영방향 - 워크샵에서 제출된 의견 발표 ②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모임 연구진 추가 추천
11	03.02(금) 19:00 서강대학교 사무처장 회의실	양문수 /법륜	① 양문수교수와 법륜스님 미국방문 보고와 정세분석 ② 기타토론 : 2007년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월별 연구주제 계획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 모임 포럼 계획
12	04.05(목)07:30 평화재단	이도향	① 최근 한반도 정세관련 토론 ② 기타 : - 2007년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월별 연구주제(계획) -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 모임 포럼 계획
13	05.04(금)07:30 평화재단	김광진	① 북한 금융문제(특히 BDA)와 최근 북한 정세
14	06.08(금)07:30 평화재단	이종무	①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경험의 효과성 분석 (1)
15	06.26(화)07:30 평화재단	전체토 론	①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경험의 효과성 분석 (2)
16	08.02(목)07:30 평화재단	전체토 론	①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경험의 효과성 분석 (3) ② 기타 - 2007년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모임 하반기일정 - 대북인도적지원법안 수정안" 점검
17	09.04(화)07:30 평화재단	양문수	① 변화된 북한의 경제구조와 북한주민들의 삶 ② 기타 - 북한현실의이해모임 주관 전문가포럼 프로그램 기 획 - 제16회 전문가포럼 기획점검

차수	일시장소	발표자	내용
18	10.05(금) 07:30 평화재단	동용승	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평가
19	12.13(목) 19:00	김영수	① 2008년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 제 3 콜로키움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모임

남북의 화해를 도모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활동 연구

#### ① 연구위원

- 1) 좌장 :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2) 연구위원 : 김동균(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김원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법륜(평화재단 이사장),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룡(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
- 3) 실무 : 장옥희 (평화재단 국제부간사)

#### ② 세부 일정 및 내용

차수	일시장소	발표	내용
10	01.30(화) 17:00 평화재단	윤여상	① 평양방문보고 ② 2006년 활동 평가 및 2007년 운영 계획
11	03.09(금) 17:00 평화재단		① 2007년 연구 주제 ② 추가 참가자 추천
12	04.25(수) 18:00 평화재단	윤여상	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13	06.08(금) 17:00 평화재단	김수암	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② 전문가포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안)”기획
14	07.10(화) 14:00 평화재단		① 전문가포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안)”기획 논의 일정 변경 : 7. 10 → 9. 4 ② 향후 운영 방향
15	08.02(목) 14:00 평화재단	오경섭	① 북한 구금시설 현황 ② 전문가포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안)”일정 변경 : 9. 4 → 무기 연기 (비공개 집중토론회 포함)

차수	일사장소	발표	내용
16	10.17(수) 17:00 평화재단		① 지원개발과정에서의 인권문제 ② 제16회 전문가포럼“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기획 논의
17	12.03(월) 17:00 평화재단		① 2007년 연구활동 평가 및 2008년 계획

#### 제 4 콜로키움 통일을 위한 평화법제 연구모임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화해를 위해 남북화해법이나 평화협정, 통일협정, 인도적 지원법 등과 같은 법안연구를 통해 대안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한다.

##### ① 연구위원

- 1) 좌장 : 김동균(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2) 연구위원 : 김성훈(김성훈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서진(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박정원(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박주민(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법 루(평화재단 이사장),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일예(수원지법 판사)
- 3) 실무 : 남연우 (평화재단 연구실장)

##### ② 세부 일정 및 내용

차수	일사장소	발표자	내용
13	1.22(월) 19:30 평화재단	김동균 박주민 윤영환	①“대북인도적지원법안” •워크샵에서 제출된 의견 발표 •관계자 의견 보고 ②“한반도 평화협정안” •워크샵에서 제출된 의견 발표 ③ 모임 일정 및 운영 관련
14	2.5(월) 19:30 평화재단	주정립 이경주	①“한반도 평화협정안” 관련 세미나 및 법안 논의 •세계 평화협정 사례들에 대한 검토로부터 얻는 시사점들 -“한반도평화협정”(초안) 제5장과 제6장을 중심으로 •평화협정과 북미간 합의(북미관계)

차수	일시장소	발표자	내용
15	2.26(월) 19:30 평화재단	조 민 법 른	①“한반도 평화협정안” ②“남북 통일조약안” ③ 대북인도적지원법안 ④ 미국방문보고 ⑤ 추가 참가자 추천
16	3.19(월) 19:30 평화재단	송상교	①“한반도 평화협정안” ②“남북통일협약안” ③ 제8차 전문가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기획 논의
17	4.2(월) 19:30 평화재단	윤영환	① 제8차 전문가포럼 관련 논의 •진행 관련 •발표문 “한반도 평화협정안” 점검 ② MT 일정 논의 : 4.20(금) 20:00-4.21(토) 10:00
18	4.9(월) 19:30	윤영환	① 제8차 전문가포럼 관련 논의 •진행 관련 •발표문 “한반도 평화협정안” 점검 ② 다음 일정 및 과제 •제9차 전문가포럼“남북통일협약안” •MT 일정 : 연기, 재논의
19	4.30(월) 19:30 평화재단	송상교 윤영환	①“통일협약안” ②“한반도 평화협정안”수정보완 관련 ③ 전문가 포럼 기획안 점검 •제9차 전문가포럼“남북통일협정안” •제10차 전문가포럼“대북인도적지원법안” ④ MT : 6.8(금) 20:00 윤영환변호사덕(집들이 겸)
20	5.14(월) 19:30 평화재단	송상교 조 민	①“남북 통일협약안” ②“통일프로세스”
21	5.21(월) 19:30 평화재단	송상교	①“남북 통일협약안” ② MT 시간 조정 : 20:00 → 21:00
	6.8(금) 21:00 윤변호사 덕		① MT • 8, 9차 전문가포럼 소감 나누기 및 평가, 관련 논의 • 향후 활동 방향 및 과제

차수	일시장소	발표자	내용
22	7.9(월) 19:30 평화재단	윤영환	①“한반도 평화협정안” •“한반도 평화협정안”수정안 • 전문가 집중토론회(8.23 목 19:00) 기획 논의 ② 신규 참가자 심의 및 승인 : 김성훈 변호사 ③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 위상, 향후 방향 및 과제
23	9.3(월) 19:30 평화재단		①“대북인도적지원법안” ②“한반도 평화협정안”제2차 수정안 ③ 향후 법제모임의 방향, 과제
	9.6(목) 22:10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안”제2차 수정 건 관계자 회의
	9.13(목)	윤영환	“한반도 평화협정안”제2차 수정안 제출
	10.6(토) 08:00 평화재단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1차 수정 건 관계자 회의
	10.16(화)	박주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제2차 수정안 제출
24	10.18(목) 19:30	송상교	① 집중토론회“남북 통일협정안을 제안한다”관련 논의 •“남북 통일협정안”1차 수정안 • 집중토론회 진행방식 ② 신규참가자 심의 및 승인 : 윤복남변호사
	10.29(월)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제2차 수정안 및 관련 참고자료 게시 ※ 참고자료 •시안 : 2005년 11월 평화재단 창립 1주년 심포지엄 발표 •제1차 수정안 : 2007년 9월 제12차 전문가포럼 발표 •제12차 전문가포럼 토론내용 요약정리문

### 제 5 콜로키움 북한의 지속가능한 장기개발계획 연구모임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 될 남북간 경제협력과 개발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근거한 건강한 장기적인 계획이 되도록, 북한개발의 그랜드디자인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구한다.

구성 준비 중

## 제 6 콜로키움 평화사상과 이념 연구모임

서구의 평화사상뿐 아니라, 동양과 한국 전통속의 평화사상을 연구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평화사상과 이념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구성 준비 중

## (2) 전문가 포럼 (Forum)

### ● 목적

- ① 전문가모임에서 논의 연구된 내용을 대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제안하며, 다른 전문가들을 초치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② 해당 시기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과 의제를 앞서 제시하고 토론하여 문제의식과 관점, 해법을 제안한다.

### ● 운영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사안과 필요에 따라 2-3회 개최한다. 형식은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의제에 맞게 선택한다.

### ● 활동

## 제 7차 전문가포럼

###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일시 | 2007년 3월 13일 (화) 오후 2:00-6:00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 1)취지

‘2.13합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북 및 북·일 관계개선이 급속히 진전되면 동북아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 만들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는 1990년대 초 한·중, 한·러 관계정상화를 넘어서는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재편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한국이 소외된 채 강대국들만이 주도할 경우 자칫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분단고착화와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동북아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이 절실합니다.

이에 평화재단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의 바람직한 국가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전문가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 2)프로그램

14:00 개 회



- 인사말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사 회 송대성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원)
- 14:10 주제발표  
 발표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질서재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발표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남북관계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15:00 지정토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윤덕민 (한국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16:00 휴식시간  
 16:20 플로어 토론  
 17:50 폐 회  
 닫는말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3) 참가인원 : 80여명

## 제8차 전문가포럼

###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일시 | 2007년 4월 18일 (수) 오후 2:00-5:00

장소 | 배재정동빌딩 A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L층 세미나실

#### 1) 취지

지난 평화재단 7차 전문가포럼에서는 2.13 합의 이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재편 시 한국이 소외된 채 강대국들만이 주도할 경우 자칫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분단고착화와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과 구축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제8차 전문가포럼은 제7차 전문가포럼에 이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안)은 변호사, 학자 중심의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모임의 연구성과물입니다. 이 시안을 통해 당사국인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잃지 않고, 주변 강대국과의 이해를 해치지 않으며, 남북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오셔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2) 프로그램

14:00 개회 사 회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14:05 인사말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14:10 주제발표 한반도 평화협정(안)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4:40 지정토론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15:40 종합토론

16:50 닫는말 법 룬 (평화재단 이사장)

3)참가인원 : 80여명

## 9차 전문가포럼

###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

일시 | 2007년 5월 28일 (월) 오후 2:00-6:00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L층 세미나실

#### 1)취지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 최근 BDA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비전과 과정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될 경우 분단고착화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평화재단에서는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을 주제로 제9차 전문가포럼을 열고자 합니다. 통일협정(안)은 지난 4월 18일 제8차 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평화협정(안)과 마찬가지로 평화법제연구 전문가모임이 연구하여 내놓은 성과물입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상상력과 함께 엄밀하고 냉정한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부디 오셔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2)프로그램

14:00 개회 사회 김동균(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14:05 인사말 법 룬(평화재단 이사장)

14:10 주제발표

##### 1.남북한 통일 프로세스

조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남북통일협정(안)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4:50 지정토론

김학성(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제성호(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최대석(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6:00 휴식

16:20 종합토론  
17:50 폐회

3)참가인원 : 88명

## 10차 전문가포럼

### 평화변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의 방향

일시 | 2007년 6월 18일 (월) / 20(수) / 21(목) 오후 7:00-9:30

장소 | 정토회 세미나실

- 1)취지
- 2)프로그램

6/18(월)



▲ 다케사다 님

초청 :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교수)

토론 : 김낙중 (평화통일운동가)

법 른 (평화재단 이사장)

이도향 (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사회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6/20(수)



▲ 이즈미 하지메 님

초청 : 이즈미 하지메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토론 : 권영경 (통일연구원 교수)

법 른 (평화재단 이사장)

사회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6/21(목)

초청 :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교수)

토론 :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



▲ 조호길 님

법 른 (평화재단 이사장)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이사)

사회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3) 각 좌담회별 참가인원 : 15-20명

## 11차 전문가포럼

###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2)

일시 | 2007년 8월 23일 (목) 오후 7:00-9:30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L층 세미나실

#### 1) 취지

평화재단에서는 지난 4월 18일 제8차 전문가포럼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일 제안된 토론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평화재단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모임 연구위원들과 이 분야의 전문가 10여분을 초대해서 라운드테이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화협정의 역할과 의미, 당사자, 체결시점, 유엔사, 평화 관리 문제 등 쟁점토론을 통해 남북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보고자 합니다.

#### 2) 프로그램

7:00 개 회

7:05 인사말 법 른 (평화재단 이사장)

7:10 발 표 “ 한반도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

운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7:30 토 론

※ 사회 :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토론 (가나다순)

김낙중 (평화통일운동가,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박명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박서진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송상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서면토론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

9:30 폐 회

3)참가인원 : 35명

## 12차 전문가포럼 대북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

일시 | 2007년 9월 4일 (화) 오후 2:00-6:00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주최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 평화재단

### 1)취지

북한은 지난 10년간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부터 북한의 전국 각 도, 시, 군 등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양상은 지난 1995년 대홍수 이후 1998년까지 300여만 명이 대량아사했던 때의 초기상황과 흡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의 홍수피해를 아직 다 복구하지 못했는데 지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쏟아진 4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평양 등 북한 전역에서 또다시 심각한 수해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피해는 뚝배기 근절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뚝배기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북한이 인도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식량난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늘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대북인도적지원법안의 핵심내용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향후 3년 내지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집중지원 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반복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10년 넘게 겪고 있는 극심한 생존권 문제의 해결은 인도주의적 입장 뿐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여야, 진보·보수, 이념을 떠나서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는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과 평화재단 공동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책임지고 참여하고 발의하는 대북인도적지원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 2) 프로그램

2:00 개 회

※ 사회 : 김동균 (법문법인 다산 변호사)

2:05 인 사 말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2:10 영상보고 “ 북한의 식량상황 ”(좋은벗들)

2:25 발 표 1 “ 대북인도적지원법(안) 1 ”

정형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2:45 발 표 2 “ 대북인도적지원법(안) 2 ”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평화재단 연구위원)

2:55 지정토론 김성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박종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정의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

4:00 휴 식

4:15 종합토론

5:30 폐 회

3)참가인원 : 75명

## 13차 전문가포럼

###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

일시 | 2007년 10월 10일 (수) 오후 2:00-6:00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제1회의실 (T : 3771-0276)

주최 | 평화재단 ·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곤

### 1) 취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이 때, 한국군도 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눈에 보이는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재난을 구호하는 활동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국위를 선양해가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재단과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공동주최로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미래지향적인 한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비전,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2) 프로그램

2:00 개 회

※ 사회 :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2:05 인사말 1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인사말 2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2:20 발 표 1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즈음한 한국군의 대비 ”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2:40 발 표 2 “ 전환기 국제정세와 한국군의 위상 및 새로운 역할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3:00 지정토론 이상철 (국방부 현안안보정책TF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찬석 (국회 국방위원)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4:00 휴 식

4:15 종합토론

5:45 폐 회

3)참가인원 : 80명

## 14차 전문가포럼

###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 원효 · 최제우 · 함석헌 사상 중심으로 —

일시 | 2007년 10월 24일 (수) 14:00-17:30

장소 |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 (20층)

### 1)취지

전 세계적인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동북아, 그 안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보다 깊고 풍성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민족 역사 속에 고유의 평화 사상의 가치를 주목하며 이를 새롭게 인식, 해석하여 21세기의 미래를 열고 전 세계적인 평화구현에 있어 보편적 세계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의 불교사상과 동학사상, 그리고 기독교사상을 대변하는 원효, 최제우, 함석헌 등 세분의 사상 속에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 2)프로그램

2:00 개 회 사회 : **최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5 인 사 말 **법 른** (평화재단 이사장)

2:15 발 표 1 **“화쟁(和靜)과 일심(一心): 원효사상에서의 평화와 통일”**

**김석근**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40 발 표 2 **“동학에서 보는 생명과 평화”**

**박맹수**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3:05 발 표 3 **“함석헌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3:30 지정토론 **배병삼** (영산대 매스컴학 교수)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화재단 연구위원)

**이동수** (경희대 NGO 대학원 교수)

4:15 휴 식

4:30 종합토론

5:30 폐 회

3)참가인원 : 200명

## 15차 전문가포럼

### 북한 경제의 변화 실태와 주민들의 삶

일시 | 2007년 11월 1일 (목) 오후 2:00-5:00

장소 |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1층 프란시스홀

### 1)취지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이뤄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새 접근방안이 제기됨으로써 기능주의적 해결에 비중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선 북한 경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목적만 좋다고 이뤄지는 문제가 아니며, 의지만 있다고 성취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가 아닙니다. 동독 경제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던 서독도 통일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고 시작한 동서독 통합도 10년의 시간 속에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의 새로운 장은 분명히 열리고 있습니다. 양 체제의 상호의존성도 예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북한체제의 구성원들은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긴급구호가 북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남쪽의 경제지원에 대해 북한 당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인도적 지원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향후 대북지원과 경제교류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마련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변화상을 정확하게 읽고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향후 대북 경제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북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해나가는데 필요한 현실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 2) 프로그램

2:00 개 회

※ 사회 :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5 인 사 말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2:15 발 표 “북한 경제의 변화실태와 주민들의 삶”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45 지정토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4:00 종합토론

5:00 폐 회

3)참가인원 : 120명

## 16차 전문가포럼

###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 방안

일시 | 2007년 11월 21일 (수) 오후 2:00-5:00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L층 세미나실

### 1) 취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이행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인권문제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그 간극을 좁혀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인권비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도 이제는 반복적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남북화해를 앞세워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해왔던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북한인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을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재단은 위와 같은 취지 속에서 북한인권문제 중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소(일명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한 구금시설 내에서 수감원을 대상으로 일상적·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이미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나아가 남북화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북한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2) 프로그램

2:00 개 회

※ 사회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2:05 인 사 말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2:15 발 표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 방안”

김수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연구위원)

2:45 증 언 신동혁 (북한 14호 관리소 완전통제구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3:00 지정토론 김병로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4:00 종합토론

5:00 폐 회

3)참가인원 : 65명

## 17차 전문가포럼

###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② 토대와 성분

일시 | 2007년 11월 28일 (수) 오후 2:00-5:00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L층 세미나실

### 1) 취지

‘토대’와 ‘성분’은 북한사회에서 삶의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은 북한주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북한사회는 원래 모든 주민의 평등을 내걸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교시에는 평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로 변해 왔습니다. 토대와 성분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교도 결정되고, 직장도 결정됩니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당원 자격을 심사 받을 때도 예외 없이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나쁘면 원하는 좋은 대학과 직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승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사회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차별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북한동포들의 탈북배경에는 바로 이 토대와 성분의 차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가는 두 번째 주제로 ‘토대와 성분’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 2) 프로그램

2:00 개 회

2:05 인 사 말 ●법 료 (평화재단 이사장)

2:15 발 표 ●사회 및 기초발제 |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② 토대와 성분

●발표 1 | 김영림 (대외업무 담당,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 새터민의 경험을 통해 본 토대와 성분

●발표 2 | 김병욱 (경제업무 담당,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새터민의 경험을 통해 본 토대와 성분

3:10 토 론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명하 (새터민)

●장영철 (새터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석사과정)

4:10 종합토론

5:00 폐 회

3)참가인원 : 85명

18차 전문가 포럼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일시 | 2007년 12월 12일 (수) 오후 2:00-5:00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L층 세미나실

### 1) 취지

1999년과 2002년, 두차례나 서해상에서 남북간 군사충돌이 있었습니다.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을 향해 가려면 무엇보다 NLL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도 NLL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문제의 우회적 해법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 NLL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공동어로수역 설정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도 늦춰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이 NLL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 2) 프로그램

2:00 개 회

- 사회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2:05 인 사 말 •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2:15 발 표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2:50 토 론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정옥임 (선문대 유엔국제학 교수)

-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4:00 종합토론

5:00 폐 회

3)참가인원 : 108명

## 전문가 집중토론회

### 남북통일협정(안)을 제안한다 2

일시 : 2007년 10월 29일(월) 19:00-21:30

장소 : 평화재단 회의실

#### 1) 취지

평화법제연구전문가모임에서 준비해온 여러 과제 중 남북통일협정(안)은 지난 5월 28일에 비공식으로 진행된 평화재단 제9차 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토론자분들로부터 명칭, 연방과 연합의 성격, 위헌적 요소, 통일협정안을 맺는 시점 등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평화법제연구전문가모임에서 처음 이 안을 준비할 때의 취지는 평화와 통일을 추동하고 가져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평화협정, 통일협정안을 준비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매이기보다 미래의 이익을 고려해서 현실을 타개하는 입장에 서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전문가집중토론회는 지난 제9차 전문가포럼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제1차 수정안을 갖고 열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 분단고착화가 아닌 통일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대단한 상상력을 요구하는 남북통일협정안에 반드시 답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상대방과 주변정세 등을 고려할 때 현실가능한 안이 되기 위해서 내용이나 수준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등 집중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2) 프로그램

19:30	개회	사회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9:35	발표		송상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9:55	토론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1:30	폐회		

#### 3)참가인원 : 15명

## 해외석학초청포럼

### 독일통일 이전 서독정부의 역할과 국제정세

일시 : 10월 30일 (화) 오후 7:00-9:30

장소 : 만해NGO센터(우리함께빌딩) 대교육장(3호선 동대입구역 2번출구)

주최 : 화해상생마당 | 주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 평화재단

초청석학 : 하이너 팀머만 (Heiner Timmermann)  
(독일 예나 대학 유럽역사학 교수)

#### 1) 프로그램

19:00 개회

사회 :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19:05 인사말

마크 지맥(주한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소장)

19:10 강연 “독일통일 이전 서독정부의 역할과 국제정세”

하이너 팀머만 (독일 예나 대학 유럽역사학 교수)

20:00 토론

민병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김형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0 플로어토론

21:30 공지사항 및 폐회

2)참가인원 : 48명

## (3) 심포지엄 (Symposium)

### ● 목적

- ① 연 1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동북아평화나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 ② 연 1회 평화재단의 창립을 맞아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시기적 중요사건이나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논점을 정리하며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다.

### ● 운영

연 1회 상반기는 국제심포지엄으로 개최한다. 또한 연 1회 하반기에는 평화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으로 진행한다.

### ● 활동

## 2008년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 2. 일시 및 장소

2007년 6월 19일 (화) 오후 2:00 - 6:3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 3. 취지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도 의미 있는 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식량부족·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현재의 북한 상황을 진단하여 그 변화의 가능성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 4. 프로그램

2:00 개회식

2:05 인사말 - 법 룬 (평화재단 이사장)

2:12 축사 - 마크 치맥 (Marc Ziemek) (아데나워재단 한국지부 대표)

2:20 기조발표 - 윤여준 (전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소 소장)

## 2:40 제1마당 |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과 북한의 선택

사회 :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발표 1 : 다른 위기국가와 북한체제의 비교, 그리고 그 변화의 가능성들  
피터 백 (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

발표 2 : 북한의 전략적 선택(Option)과 체제의 전망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교수)

토론 1 :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교수)

토론 3 :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50 휴식

## 4:10 제2마당 |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정세와 한국의 대응

사회 :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발표 3 : 북한체제의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즈미 하지매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교 교수)

발표 4 :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토론 1 : 서재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토론 3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5:10 질의응답

5:30 전체토론

6:00 마무리토론

6:30 마무리

5. 참가인원 : 440명

## 평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한다 -

#### 2. 일시 및 장소

2007년 11월 15일(목) 14:00 - 19: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3. 취지

탈냉전 이후 지금, 동북아질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과제를 두고 커다란 재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강대국이 주도하는 변화의 급물살에 휩쓸려갈 수도 있고, 하나 된 민족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기정부가 새울 국가전략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앞으로의 국가전략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주변정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 새로운 민족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적극 찾아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전략의 총체적인 점검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에 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염두에 두고, 외교·안보·국방·통일 정책의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을 평가해 보고, 차기정부 5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줄기 속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4. 프로그램

14:00 여는 의식

14:04 평화재단 활동보고

14:10 축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14:25 인사말 및 내빈 소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사회 | 오재식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14:35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14:40 발 표 :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발표 1 : (외교안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발표 2 : (국방정책)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발표 3 : (통일정책)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10 휴식 (Tea break)

16:30 지정토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7:30 종합토론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장영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정형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19:00 마무리 및 폐회

#### 5. 참가인원 : 300 여 명

## 2. 평화 아카데미

(대화소통)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간, 또는 대립되는 입장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의식을 상호침투, 공유 교류하여 보다 시야를 확장시키고, 상대를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통합적인 입장을 공유하도록 한다.

(네트워크) 보다 깊은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 상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이후 자기분야의 주요의제를 만들어나가도록 한다.

(교육훈련) 향후 대북관련 활동을 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경험 하게 한다.

### (1)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Workshop)

#### ● 목적

1박 2일동안 활동가, 연구자, 정책결정자 등,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간 충분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대립되거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소통하게 하고 상대를 통해 자신의 시야를 확장시켜, 궁극적으로 각자 자신의 현실에서 통합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후 참가한 전문가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해 나가도록 한다.

#### ● 운영

- ① 진행 : 1박 2일 (15:00 - 다음날 12:00)
- ② 참가자 : 각계 분야별 전문가 약 25명-30명

#### ● 활동

###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대북인도적지원단체와 사회문화교류 단체와 기타 평화운동 NGO들간에 최근의 현안과 정세를 공유하고 분석하며, 앞으로 급격한 물살을 탈 남북의 정치,경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행동에 대한 NGO 간의 입장을 교환하여,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보다 협력적으로 민족화해운동을 진행해 나가고자 마음을 모았다.

#### 제5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NGO.전문가 2단계 집중토론회 정리워크숍

- 일시 : 2007년 6월 1일(금) 오후 5:00- 2일(토) 오후 5:00
-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제2회의장
- 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 평화재단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참가인원 : 31명

### 6월 1일 (금)

5:00 개회식 | 진행소개

5:20 쟁점정리토론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 정리와 쟁점  
사회 : 황인성 (외교통상부 평화협력대사)  
(북한체제내구력) |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남북교류) | 정인성 (원불교 중앙총부 남북교류협력팀장)  
(북핵평화체제)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북한인권) | 이승용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  
(통일로드맵) |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6:30 저녁식사

7:30 하우스콘서트 - (깊이듣기, 함께부르기)

8:00 수렴과 확산 : 현장과 이념, 활동과 경험을 듣는다

진행 :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9:30 휴식

9:45 경험·나눔·대화 | 진행 : 박진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국장)

11:30 취침

## 6월 2일 (토)

6:30 기상 | 아침산책

8:00 아침식사

9:00 과제토론 1 : 살펴보고 내다보기 1 (비전과 전망)

사회 :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발표 1 : 향후 10년간의 남북관계의 장기적 비전

김창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발표 2 :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운동의 방향과 의제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9:40 토 론 :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협력팀장)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11:00 과제토론 2 : 살펴보고 내다보기 2 (위상과 역할)

사회 :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위상과 역할

발표 1 : 이기호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발표 2 :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12:00 점심식사

1:00 토 론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이강원 (경실련 통일협회 국장)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김경미 (평화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서진 (6.15서울본부 집행위원장)

3:00 종합토론 : 미래를 위한 행동과 협력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제제기 :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4:30 소감나누기

5:00 마무리

## 제 6 네트워크 워크숍

2007.07.13-14

###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실천적 쟁점

민주평화론과 시장평화론, 그리고 생명평화론 그리고 젠더의 관점에서의 평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군축운동,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운동까지 평화는 수많은 의미로 겹쳐져있다. 이 수많은 평화논의를 함께 소통할 수 없을까, 그래서 평화논의간의 서로의 다양성을 오히려 소중하게 생

각하고, 서로를 풍성하게 하며 상호보완하는 발전된 논의로 나가게 되었다.

제6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실천적 쟁점

Peace Studies and Actions – the Issues at Hand

– 평화사상의 다양성과 그 충돌과 쟁점 –

- 일시 : 2007년 7월 13일(금) – 14일(토)
- 장소 : 가평, 바람과 물연구소
- 참가인원 : 32명

### 1.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실천적 쟁점을 개최하면서

평화운동이 최근들어 크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와 인권, 분단이라는 국내에 한정된 이슈에서 이라크파병을 반대하는 국제평화운동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평화, 생명평화의 논의, 더 나아가 마음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담론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평화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듯 보이면서 서로 다른 페러다임에 근거하여 다소 다른 논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는 서로 다른 평화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른 부분과 쟁점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각자를 인정하면서 함께 할 부분은 찾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이 워크숍을 통해서

1) 평화연구와 이념, 국제적인 평화운동의 흐름과 내용을 확인한다.

국가와 외교를 중심으로 한 평화학의 논의와 평화운동단체들이 제기하는 논의는 많은 부분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평화이념과 평화학에 대한 흐름과 국제적인 평화운동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다.

2) 다양한 평화운동의 논점과 그 페러다임을 이해하고 충돌지점과 그 쟁점을 확인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평화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평화, 군축과 반전평화,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 등 다양한 평화담론들의 논점과 페러다임을 이해하고 그 논의들의 공통점과 충돌지점을 인식하고 쟁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3) 향후 한국의 평화이념과 평화운동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

국제적인 평화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평화운동의 방향에 대한 큰 흐름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분담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도록 한다.

### 2. 프로그램

## 7월 13일 (금) 첫째날

- 15:00 개회식 | 인사말 :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 15:15 참가자 소개 | 진행 :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에코붓다 대표)
- 16:00 ① 여는 마당 | 사회 : 박성용 (비폭력평화물결 공동대표)
- 발표 1 : 무엇이 평화이며, 평화적사유란 무엇인가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 발표 2 : 한국의 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 16:30
- 토론 1 | 주진우 (평화박물관 기획실장)
  - 토론 2 |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병역거부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 3 | 현선도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간사)
  - 토론 4 | 조영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 18:00 저녁식사
- 19:00 하우스콘서트 초청공연 : 별음자리표 (평화음악가)
- 19:30 ② 다양한 평화 그 쟁점들 | 사회 : 정지석 (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 발표 1 : 젠더(Gender)와 평화주의  
정희진 (성공회대NGO대학원 강사)
  - 발표 2 :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평화론  
주요섭 (초록정치연대, 정읍 한살림 이사)
  - 발표 3 : 절대적 비폭력과 저항적 폭력의 정당성문제  
조약골 (평화활동가)
  - 발표 4 : 반전평화운동과 군축문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표 5 : 마음의 평화와 평화적 감수성  
이병철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 21:00
- 토론 1 | 정 혁 (청년평화센터 푸름 평화교육팀장)
  - 토론 2 | 김수현 (평화공감 상임연구원)
  - 토론 3 | 이광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 토론 4 |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
- 22:00 나눔과 대화의 시간 |
- 23:00 취침

## 7월 14일 (토) 둘째날

- 06:00 기상 / 세면
- 07:30 아침식사
- 09:00 ③ 과제토론 | 사회 : 이승용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
- 발표 : 한국평화운동의 쟁점과 과제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 아레나 사무국장)
- 09:30
- 토론 1 | 강정모 (청년평화센터 푸름 대표)

- 토론 2 | 송강호 (개척자들 대표)
- 토론 3 |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토론 4 | 이수효 (평화박물관 사무국장)

11:00 평가 및 나누기

Working Group 만들기 | 향후 일정

12:00 접는 의식

### 3.참가인원

제 7 네트워크 워크숍

2007.07.20-21

#### 북한인권운동, 더 나아가기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북한인권 워크숍은, 첫 번째 워크숍 이후 후속모임의 성격으로 매월모임을 가져오면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동안 1년간 상대방의 이슈를 자기화하는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보다 협력적인 실천수행을 위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제7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 북한인권운동, 더 나아가기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ons,  
Taking Another Step

- 일시 : 2007년 7월 20일(금) - 21일(토)
- 장소 : 가평, 바람과 물연구소
- 참가인원 : 34명

### 1.북한인권운동, 더 나아가기를 개최하며

심각한 북한인권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제 논점은 어떻게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것인가를 두고 아직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주체를 형성시키고, 이를 지원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부터, 교류와 기술협력을 통해 사회 경제적인 개선을 통해 민중에 대한 권력의 탄압의 원인을 제거하여 간접적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는 또 다른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2007년 아직도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인권적 탄압속에 고통을 받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최근 통일운동가인 이시우씨의 구속에서 보듯이 남한에서도 국가보안법이나 각종 악법으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작년 2006년 6월 30일-7월 1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가워크숍”과 이후 지금까지 의미있게 지속되어온 “북한인권평화포럼”의 토론의 중간 정리워크숍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무튼 향후 북한의 인권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프로그램을 갖을 것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2. 프로그램

### 7월 20일 (금) 첫째날

15:00 개식

15:05 진행안내 | 진행 :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에코붓다 대표)

15:10 인사말겸 기조발표 : 법 룬 (평화재단 이사장)

15:30 ① 여는 토론 | 북한인권관련 국제정세와 인권운동의 평가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표 1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인권문제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발표 2 :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16:30 • 토론 1 | 양영미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 토론 2 | 김운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 토론 3 |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18:00 저녁식사

19:00 문화공연

초청공연 : 박창근 | 생명과 평화 노래꾼 가객(歌客)

19:30 ② 쟁점토론 1 | 북한인권을 보는 국제적 흐름과 새로운 대응

| 사회 : 원재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발표 1 :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과 경향

이성훈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포럼 사무총장)

발표 2 : 북한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20:30 • 토론 1 | 황필규 (KNCC인권위원회 국장)

• 토론 2 | 김경미 (평화네트워크 사무국장)

• 토론 3 | 이종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실장)

21:40 휴식

22:00 나눔과 대화의 시간

23:00 취침

### 7월 21일 (토) 둘째날

06:00 기상 / 세면



07:30 아침식사

09:00 ③ 과제토론 | 한국의 평화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사회 :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발표 1 : 이승용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

발표 2 :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 10:00
- 토론 1 | 박요셉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국장)
  - 토론 2 |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 토론 3 |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 토론 4 |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11:00 평가 및 나누기

Working Group 만들기 | 향후 일정

12:00 접는 의식

### 3.참가인원

제 8네트워크 워크샵

2007.10.12-13

####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와 시민사회의 대응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선언은 가히 우리의 기대를 넘쳐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다. 보다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과는 달리, 냉각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 집중해야 할 의제와 분담해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장이 되었고, NGO간 보다 활력적인 친교와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제8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샵

##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와 시민사회의 대응

- 일시 : 2007년 10월 12일(금) - 13일(토)
- 장소 : 가평, 바람과 물연구소
- 참가인원 : 26 명

## 1.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개최하며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은 남북간에 오랜만에 찾아온 기쁜소식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등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2.13합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평화체제구축과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남북간의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간의 인도적 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총리급회담 개최와 정상회담을 수시 개최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의 질적발전을 도모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관계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차원이 변화되는 남북관계에서 이후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사회운동의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관점을 논의하며 향후 전망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2. 프로그램

### 10월 12일 (금) 첫째날

15:00 개식

15:05 진행안내 | 진행 :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에코붓다 대표)

15:10 인사말겸 기초발표 : 법 룬 (평화재단 이사장)

15:30 ① 여는 토론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의 과제

- 발 표 |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16:30 • 토론 1 | 이기호 (성공회대 연구교수)

- 토론 2 | 남문희 (시사IN 기자)

- 토론 3 |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4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 5 | 이승룡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

18:00 저녁식사

19:00 하우스콘서트 : 김은희 (노래를 찾는 사람들 멤버)

19:30 ② 쟁점토론 | 사회 :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형변화와 시민사회운동

- 발 표 |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

- 20:00 • 토론 1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토론 2 | 전성환 (YMCA 전국연맹 기획실장)
- 토론 3 |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 평화센터 소장)
- 토론 4 | 하승창 (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토론 5 | 박창호 (천주교 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장)
- 21:40 휴식
- 22:00 나눔과 대화의 시간
- 23:00 취침

### 10월 13일 (토) 둘째날

- 06:00 기상 / 세면
- 07:30 아침식사
- 09:00 ③ 과제토론 | 사회 : 김보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처장)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시민단체의 활동모색
  - 발 표 | 정현곤 (6.15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 09:30 • 토론 1 | 이강원 (경실련 통일협회 사무국장)
- 토론 2 | 이인경 (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
- 토론 3 | 황상규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처장)
- 토론 4 | 김창수 (민주평통 전문위원)
- 토론 5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11:00 평가 및 나누기
- 12:00 접는 의식

## 3.참가인원

제 9 네트워크 워크숍

2007.10.26-27

###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

2007 남북정상들의 선언은 이제 남북간의 경협을 보다 활성화하고 사회문화교류의 폭과 깊이도 넓어지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과정이 북한의 무분별한 개발과 잘못된 개발로 남한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기과정의 밑그림부터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개발과 환경, 인권과, 자치 등을 위해 개발기구와 환경단체, 인도지원과 교류협력단체들이 격렬한 논쟁을 거쳐 깊은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제9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

- 일시 : 2007년 10월 26일 (금) 15:00 - 27일 (토) 12:00
- 장소 :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 참가인원 : 31명

### 1.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개최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역사적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간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평화정착의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경제위기를 겪은 북한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자력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수용하기에는 시장경제나 국제사회의 관례 및 규범을 갖추기 어려운 사회로 개발협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개발협력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번 제8차 워크숍,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첫째, 지속가능한 북한개발이 갖는 철학적, 전략적인 함의를 정리함으로써 협력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할 의제를 정리하고 포괄적인 인식의 틀을 공유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 둘째,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북한개발협력과정의 원칙적인 방향에 대한 이해의 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셋째, 개발협력과정에서 남한의 정부 및 NGO가 집중해야할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넷째, 워크숍을 계기로 북한개발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2. 프로그램

10월 26일 (금) 첫째날

15:00 개식

인사말 |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15:15 참가자 소개 | 진행 :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16:00 ① 여는 마당 | 사회 : 김택천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발표 1 : 북한의 개발협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7:00 • 토론 1 | 장형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토론 2 | 장춘용 (굿네이버스 대북협력부장)
- 토론 3 |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4 |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 토론 5 | 조대기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18:00 저녁식사

19:00 하우스 콘서트 : 박창근 (생명과 평화 노래꾼 / 가객(歌客))

19:30 집중토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북한개발지원의 논의들

사회 :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1 : 한반도의 지속가능성과 북한의 국토개발  
| 조진철 (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발표 2 :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과 북한개발  
|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발표 3 : 북한의 농업개발협력의 방향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30 • 토론 1 |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

- 토론 2 | 박창빈 (월드비전 북한사업 수석 자문)
- 토론 3 | 서재철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
- 토론 4 |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1:40 휴식

22:00 나눔과 대화의 시간

23:00 취침

## 10월 27일 (토) 둘째날

06:00 기상 / 세면

07:30 아침식사

09:00 ③ 종합토론 | 사회 :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발표 1 : 국제개발지원의 일반흐름과 북한개발의 방향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 남북의 환경공동체와 북한개발  
| 손기웅 (통일연구원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사무국장)

10:00 • 토론 1 | 이조원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2 | 김정수 (통일부 인도협력 단장)
- 토론 3 |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4 |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11:00 평가 및 나누기

Working Group 만들기 | 향후 일정

12:00 접는 의식

## 2008년 남북관계의 새국면, 무엇을 할 것인가

2007 남북정상들의 선언을 통해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12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이러한 흐름의 연속성이 굴절되거나, 혹은 보다 발전될 분수령을 맞고 있다. 앞으로 닥칠 정치적인 시기를 어떻게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흐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행동의 주요 고리들을 찾고자 각계의 전문가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풍성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10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2008년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 11월 24일 (토) 15:00 - 25일 (일) 12:00
- 장소 :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 참가인원 : 32명

### 1.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2008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개최하며

이번 워크숍은 2007년 남북관계를 돌아보며, 2008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동안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이후 변화될 남북한의 정책을 예측해보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루어낸 부분은 지속적 축적과 발전을 도모하며 정책적 퇴행을 막고, 오히려 정권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차원을 바꾸는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 2. 프로그램

11월 24일 (토) 첫째날

15:00 개식

인사말 :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15:15 참가자 소개 | 진행 :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16:00 여는 마당 2007년 한반도 정세 변화와 2008년 전망

사회 : 윤여준 (전 국회의원)

발표 1 : 북미관계의 평가와 전망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발표 2 : 최근 북한현실의 변화와 전망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16:30 전체대화

18:00 저녁식사

19:00 과제토론 ① : 2007년 콜로키움 활동 평가와 2008년 활동구상

사회 :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1 :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 연구모임

조성렬 (평화체제연구모임 좌장)

발표 2 :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모임

김영수 (북한현실연구모임 좌장)

발표 3 :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모임

윤여상 (북한인권연구모임)

발표 4 : 평화법제 연구모임

김동균 (평화법제연구모임 좌장)

20:00 전체대화

21:00 휴식

22:00 나눔과 대화의 시간

23:00 취침

#### 11월 25일 (일) 둘째날

06:00 기상 / 세면

07:30 아침식사

09:00 과제토론 ③ | 사회 :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 : 2007년 평화재단 활동 평가와 제언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 2008년 평화재단의 활동방향과 구상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10:00 전체대화

11:00 평가 및 나누기

12:00 접는 의식

# 3. 평화정책 교류활동

(정책교류) 평화재단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등 한국과 동북아문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연구소나 정책결정단위에 정책적인 대안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달하며 논쟁과 토론을 통해, 현실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한다.

(인적 네트워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한국의 전문가들간의 긴밀한 정책네트워크를 갖고 지속적으로 정보와 의사교환통로가 되도록 한다.

## (1) 평화안보를 위한 정책교류 활동

### ● 목적 :

- ① 평화재단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개발된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정책결정단위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이들에게 대안을 제안하여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 ②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과 EU, 북한 등에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정책결정권자, 그리고 연구소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한다.

### ● 운영 :

한국의 관계 분야 전문가 그룹과 미국, 일본, 중국, EU, 북한의 관계분야 전문가 그룹 간에 함께 연 1-2회에 걸쳐 구체적인 논쟁과 토론을 벌이는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 (2) 제1회 평화안보를 위한 한·미 전문가 정책워크숍



● 워크숍을 계획한 배경과 취지 :

1.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변화에 집중한다.

그 동안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적이려고 한다고 해도, 현재 전 세계의 수퍼파워 국가로서 미국의 지위를 부정하고서는 한국의 정책을 현실적으로 구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평화재단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의 현실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그 동안 미 행정부내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 상하원 의원 및 보좌관, USAID 등 대북 원조 실무 기관, 싱크 탱크, NGO 지도자들 20-30여명과 2005년부터 매년 3-4회에 걸쳐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왔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간 실질적 정보 교환, 미래 지향적 한미 관계,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조해 왔다. 교류가 지속되면서 개별적 미팅과 정보 교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양국 전문가들간의 집단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무부와 의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 역시 한미 전문가 정책워크숍 개최를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평화재단 서울 본부와 워싱턴 사무소는 2007년 9월 "평화안보를 위한 제 1차 한미전문가 워크숍 (교민 초청 간담회 포함)"을 워싱턴, 뉴욕, LA에서 개최하였다.

3. 미 행정부, 의회, UN기구, 미행정부내 한국인들, 교포사회의 지도자, 연구소의 싱크탱크등과의 한국의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깊은 정책적 의견과 입장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북한의 실질 정보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며, UN, 미 행정부 내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들, 교포사회의 지도자들과도 함께 토론하면서 한반도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 참가자

<b>법 른</b>	이사장	좋은벗들 이사장, 한국 JTS 이사장	인권난민	인도적 지원
<b>조 민</b>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	
<b>김영수</b>	이사,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	
<b>조성렬</b>	이사,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안보	
<b>백승주</b>	이사,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방	
<b>동용승</b>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제	
<b>이영훈</b>	연구위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	경제	
<b>정인숙</b>	사무총장	전 좋은벗들 사무국장	실무책임	인술책임
<b>박지나</b>	한국 JTS	한국JTS 해외사업본부장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책임
<b>강여경</b>	좋은벗들	좋은벗들 국제부장	인권	통역

● 일정

1. 일정 : 2007년 9월 16일(일)~23(일), 7박 8일
2. 워크숍 지역 : 뉴욕, 워싱턴 DC, LA

1. New York Korea Society
  - 9. 17(월) 15:00~17:00 | Korea Society Conference Room
  - 참가 : Korea Society 회원 40여 명 (공개토론)
  - 제1주제 : 한반도 안보 및 평화체제 | 조성렬
  - 제2주제 : JTS 등 대북지원성과 및 경험 공유 | 법 률
  
2. 뉴욕 교민 사회 만찬
  - 9. 17(월) 19:00~21:50 | 대 가 (Fort Lee)
  - 참가 : 뉴욕 교민사회지도자 60여명 (비공개)
  - 제1주제 :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 분석 | 법 률
  - 제2주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전망 | 조 민
  
3. 미국무부 및 연방정부 한반도 전문가 워크샵
  - 9. 18(화) 09:30~16:00 | DACOR Bacon House Foundation
  - 참가 : 미국무부 등 행정부 관련부처 17여 명 (비공개)
  - 제1주제 : 최근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분석 | 법 률
  - 제2주제 : 안보 및 평화체제 | 조성렬
  - 제3주제 : 북한의 경제회복 및 개발협력 | 동용승
  - 제4주제 : 북한의 사회상, 인권 문제 | 김영수
  
4. 미의회 워크샵
  - 9. 19(수) 09:00~11:00 | Capitol Building
  - 참가 : 상하의원 외교위, 한반도 관련 의원 보좌관 10여 명 (비공개)
  - 주제 : 최근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분석 | 법 률
  - 주제 : 안보 및 평화체제 | 조 민
  
5. 존스 홉킨스 대, 한미연구소 공동워크샵 SAIS, Brookings, AEI 등
  - 9. 19(수) 14:30~17:00 | SAIS 1층 Conference Room
  - 참가 : SAIS, Brookings, AEI, 한미 언론사 등 100여 명 (공개)
  - 제1주제 : 북한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변화 | 법 률
  - 제2주제 : 안보 및 평화체제 | 백승주
  
6. 워싱턴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만찬
  - 9. 19(수) 18:30~21:30 | 주미 한국대사관 (Korus House)
  - 참가 : 한반도 관련 한국계 전문가, NGO 등 15여 명 (비공개)
  - 제1주제 : 북한의 정치, 사회에 대한 분석 | 김영수
  - 제2주제 :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 | 이영훈
  - 제3주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전망 | 조성렬
  
7. CSIS · USIP 합동 워크샵
  - 9. 20(목) 10:00~17:00 | 4th Floor Conference Room, CSIS
  - 참가 : CSIS, USIP Korean Working Group 15여 명 (비공개)
  - 제1주제 : 현 북한 상황 전반에 대한 분석 | 법 률
  - 제2주제 : 현 북한의 정치상황안보.평화체제 | 조 민
  - 제3주제 : 북한의 사회변화, 인권 개선 방안 | 김영수
  - 제4주제 : 북한경제협력 및 다자간 투자협력 전략 | 이영훈
  
8. 워싱턴 DC 지역 교민사회 지도자 만찬

9. 20(목) 19:00~21:30 | 우래옥 (Vienna VA)  
참가 : 워싱턴 교포지도자 40여명 (비공개)  
주제 : 최근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분석 | 김영수

9. LA 한반도 전문가 모임

9. 21(금) 14:00~17:00 | 장소 : Garden suiet Hotel  
참가 : LA 한반도 한국인전문가 15여 명 (비공개)  
제1주제 : 북한내부 정치, 사회,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 | 동용승  
제2주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전망 | 조 민

10. LA 교민사회지도자 만찬

9. 21(금) 18:30~21:30 | Garden suiet Hotel  
참가 : LA교민사회 110여명 (공개)  
강의 : 북한내부 정치, 사회, 경제상황 분석 | 법 루

## 2)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남·북·미·중·일 관계 기관 전문가 정책 교류활동

1) 미국 워싱턴 방문 및 한반도 관계 정치인, 행정부, 학자 등 대담 : 4회  
국무성, 의회, 연구소 및 싱크탱크, NGO, 미언론사, 한국특파원, 한국학자, 대사 등

- 7차 : 2007년 2월 5(월) ~ 11(일) 60여명
- 8차 : 2007년 5월 16일(수) ~ 18일(금) 워싱턴, LA 15여명
- 9차 : 2007년 9월 11일(화) ~ 13일(목) 18여명 면담
- 10차 : 2007년 11월 9일(금) ~ 10일(토) 13여명 면담

2) 일본 방문 및 한반도 관계 정치인, 학자 등 대담 : 1회

- 2007년 11월 29일(목)~12월 1일(토) 3명

3) 중국, 대만, 홍콩 방문 및 관계자 대담 : 15회

4) 국내 한반도 관계 정치인, 행정관리, 학자, 기자 등 사회 각계 인사 : 100여회 110여명

### 3) 평화와 화해를 위한 협력과 연대 활동

#### 1. 제1차 북한인권 워크숍 후속모임 <북한인권평화포럼> 및 간사모임

##### (1) <북한인권평화포럼> 간사모임 : 총 3회

	일시	장소	참가	안건
1	1월 29일 (월) 17:00	정토회관 세미나실	3명	① <북한인권평화포럼>의 나아갈 방향 ② 세미나 주제 선정
2	4월 5일 (목) 18:00	정토회관 세미나실	3명	① 북한 인권 동향 보고 ② <북한인권평화포럼> 진행안, 역할분장
3	5월 4일 (금) 14:00	정토회관 세미나실	4명	① 북한 인권 동향 보고 ② 세미나 주제 선정 및 진행안, 역할분장

##### (2) 제4차 <북한인권평화포럼>

- ① 일시 및 장소 : 2. 7 (수) 16:30 한기총 대표실
- ② 참가 : 11명
- ③ 세미나 : 북한인권활동 관련 각 단체별 2007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④ 안건 토의 : ㉠ 공동 활동 및 프로그램 논의 ㉡ 세미나 주제 및 운영방식

##### (2) 제5차 <북한인권평화포럼>

- ① 일시 및 장소 : 4.12 (목) 19:10 한기총 회의실
- ② 참가 : 16명
- ③ 세미나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 및 쟁점 (발표 :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3) 제6차 <북한인권평화포럼>

- ① 일시 및 장소 : 6.11 (목) 18:30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실
- ② 참가 : 11명
- ③ 세미나 : 북한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되는 북한인권개선 방식의 다양성 (발표 :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 ④ 안건 토의 : 평화재단 북한인권워크숍 기획서 점검

## 2. 화해상생마당 실무지원활동

### 1) 날마다 새날 되소서

#### 2007 종교시민사회단체인사 새해모임

때 : 2007년 1월 10일(수) 15 : 00

곳 : 프레스 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

참가자 : 200여명

15:00 개회식 | 사회 : 박종화(목사,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15:03 마당을 여는 노래 : WBS(원음방송) 어린이 합창단

15:10 명상과 시 낭송 | 김지하 시인 『허공은 신』 - 정해년에 부쳐

15:15 여는 인사말 | 이선중(교무, 원불교 서울교구장)

15:20 새날을 여는 격려의 말씀 | 종교계 원로(가나다 순)

김병상(몬시놀, 천주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이사장)

박종순(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송월주(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전광표(구세군사령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15:40 새해의 다짐

김지하 (생명과 평화의 길 이사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 열 (환경재단 대표)

16:05 화해와 상생의 신년 메시지(공동 낭독)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박효중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석연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

16:15 새날을 여는 노래 | 혼성 듀엣

테너 : 김홍태(건국대 성악과 교수)

소프라노 : 배기남(연세대 성악과 교수)

피아노 : 박선정(한양대 강사)

16:25 내외빈 소개

16:35 건배

16:40 기념 사진촬영

16:45 폐회

### 2) 화해상생 셋째마당

주제 : '화해상생노사'어떻게 가능한가 - 기업별 노사협력 사례보고 모임

일시 : 2007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4시

장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프로그램

- 1부 : 사회 김홍진 (신부, 한국희망재단 상임이사)  
1400 개회인사 | 명상시 낭송, 신경림 시인의 『봄의 노래』  
1407 인사말 |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1410 격려사 |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2부 : 사회 이종대 (전 대우자동차 회장)  
1420 기업별 노사협력 사례발표  
경기고속 (허명희 회장 / 박용덕 노조위원장)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 / 마호웅 노조위원장)  
KSS 해운 (장두찬 회장 / 문철수 노조위원장)  
유한킴벌리 (문국현 회장 / 신성태 노조위원장)  
포스코(POSCO) (이구택 회장 / 백인규 노경협의회 대표위원)
- 1540 차 마시는 시간
- 1600 지정토론  
김동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환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병직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
- 1630 닫는말 :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

### 3. 평화활동가워크숍 공동주최및 실무지원활동

- 때 : 2007년 11월 29 (목) -12월 1일 (토) |
- 곳 : 원불교 오덕훈련원
- 주최 : 2007한국평화활동가워크숍준비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공감,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평화재단,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청년평화센터 푸름)
- 후원: 우리교육, 코리아연구원
- 참가자 : 120여 평화활동가

## 5. 사이버 상의 활동

### 사이버 정보

평화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의 평화관련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며,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제안과 대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www. peacefoundation.or.kr](http://www.peacefoundation.or.kr)

- 아래는 2006년 연례보고서에 사용한 화면임, 최근 홈페이지 화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기-



평화논평 발행 : 매주 1회

해당 시기에 쟁점이 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평화재단의 전문가들이 필진이 되어 매주 발행되는 평화논평을 통해 변화된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미있는 실행방향을 제시한다.

제12호	남북관계, 출구론적 발상에서 벗어날 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제13호	BDA문제를 분석하면 북핵문제 해법이 보인다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
제14호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자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제15호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대한 단상(斷想)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제16호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져다줄 도전과 기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제17호	"남북 통합은 북한의 시장진입 기반 조성으로부터"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8호	북한 재난과 참사, 복구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제19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연구와 실행 시차 인정하자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제20호	북미관계 관망법	길정우	중앙 m&b 대표이사
제21호	대북지원의 효율적 방안 탐색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2호	북·미관계 정상화, 개방, 그리고 북한인권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23호	「10·4 공동선언」 :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이중주조민	이경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4호	1004공동선언과 평화체제의 남북 당사자주의	윤여상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25호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인권문제의 전개방향	이용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제26호	이제 대 북한개발협력기구의 발족을 준비해야	백승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제27호	워런 버핏의 북한투자 전망을 새겨 들어야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제28호	사그러든 '북풍'과 한국 대선, 그리고 미국은?	길정우	중앙 m&b 대표이사
제29호	총리회담 이후 남북경협외 과제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제30호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 북한의 태도와 효과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31호	대선 보이콧? 평화와 대선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2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정립의 필요성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제33호	남북관계의 발전은 법제도화에 못지않게 약속이행이 중요하다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4호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거는 기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 V. 평화재단 발간물 목록

평화연구 총서 07-1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결과자료집 Peace Foundation International Symposium Results

## 2.13 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책표지  
(별도화일에 있음)

① 발간일 : 2007년 9월 4일 (화)

② 분량 : 총 281쪽

③ 차례

인사말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축사	마크 지백 (주한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소장)
기조발표	주민의 선택에 의한 북한의 변화를 위하여 I 윤여준 (전 국회의원, 전여의도연구소 소장)
제 1 마당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과 북한의 선택
발표 1	다른 위기국기와 북한체제의 비교, 그리고 그 변화의 가능성들 I 피터 백 (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
발표 2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체제의 전망 I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정법부교수)
토론 1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총괄연구원)
토론 3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 2 마당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
발표 3	북한체제의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I 이즈미 하지메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발표 4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I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토론 1	서재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토론 3	남광규 (대봉통일연구소 소장)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발표·토론 기록문
제 1 마당	발표 1 (조호길) 189   발표 2 (피터백) 194   토론 1 (백승주) 197   토론 2 (다케사다 히데시) 200   토론 3 (김영수) 203   발표자토론 1 (조호길) 206   발표자토론 2 (피터 백) 209
제 2 마당	발표 3 (이즈미 하지메) 212   발표 4 (조성렬) 216   토론 1 (서재진) 228   토론 2 (안드레이 란코프) 232   토론 3 (남광규) 234   발표자토론 1 (조성렬) 238   발표자토론 2 (이즈미 하지메) 240
질의토론	질문모음 241   대담토론 1 (조성렬) 244   대담토론 2 (조호길) 246   대담토론 3 (이즈미 하지메) 248   대담토론 4 (서재진) 249   대담토론 5 (남광규) 251   대담토론 6 (다케사다 히데시) 252   대담토론 7 (백승주) 253   대담토론 8 (안드레이 란코프) 255   사회자 정리토론 (이수훈) 255   마무리 정리토론 (법륜스님) 258
	평화재단 소개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280

##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모색

책표지  
(별도화일에 있음)

① 발간일 : 2007년 12월 27일

② 분량 : 총 454쪽

③ 차례

---

### 2007년 워크숍 전체 프로그램

---

제5회 워크숍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내용생략)

---

제6회 워크숍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실천적 쟁점

평화인지와 평화능력 -소통적 평화주의를 위한 시론 | 홍윤기  
한국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 | 이준규  
젠더 (Gender)와 평화주의 | 정희진  
비폭력의 힘은 총과 칼보다 강하다 | 조약골  
반전평화운동과 군축문제 | 이태호  
마음의 평화와 평화적 감수성 | 이병철  
한국평화운동의 쟁점과 과제 | 이대훈

---

제7회 워크숍 북한인권운동, 더 나아가기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인권문제 | 김용현  
북한인권운동의 평가와 방향 | 하태경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과 경향 | 이성훈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제언 | 서보혁  
한국 평화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1) | 이승용  
한국 평화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2) | 이영환

---

제8회 워크숍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와 시민사회의 대응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의 과제 | 정성장  
남북관계 발전과 시민사회운동 | 이승환  
제2차 정상회담 이후 시민단체의 활동,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 정현곤

---

참고자료 1 : 10.4 남북관계 발전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 (공동선언 전문)

참고자료 2 : 10.4 남북공동선언 해설자료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

제9회 워크숍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

북한의 개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임을출

한반도의 지속가능성과 북한의 국토개발 | 조진철

북한의 경제개발과 남북경제교류 | 배중렬

북한의 농업개발협력의 방향 | 권태진

국제개발지원의 일반 흐름과 북한개발의 방향 | 박형중

한반도 차원의 환경문제과 북한개발 | 손기웅

---

제10회 워크숍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2008년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북미 관계의 전망 | 조성렬

2007년 평화재단 전문가 모임 활동보고 | 평화재단

평화재단 활동보고 (2005-2007) | 평화재단

2008년 평화재단 활동계획 (안) | 평화재단

---

평화재단 안내

---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래구상

책표지  
(별도화일에 있음)

① 발간일 : 2008년 1월 14일

② 분량 : 총 567쪽

③ 차례

---

3월13일 | 7차 전문가포럼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6월18일 | 10차 전문가포럼

평화변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의 방향

10월10일 | 13차 전문가포럼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

10월24일 | 14차 전문가포럼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 원효, 최제우, 함석헌 사상을 중심으로

12월12일 | 18차 전문가포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10월30일 | 해외석학초청 전문가포럼

독일통일이전, 서독정부의 역할과 국제정세

평화재단 소개

---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안

책표지  
(별도화일에 있음)

① 발간일 : 2008년 1월 14일

② 분량 : 총 521쪽

③ 차례

---

4월18일 | 8차 전문가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1)

8월23일 | 11차 전문가포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2)

5월28일 | 9차 전문가포럼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 (1)

10월29일 | 전문가집중토론회  
남북한 통일협정안을 제안한다 (2)

9월04일 | 12차 전문가포럼  
대북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

평화재단 소개

---

책표지  
(별도화일에 있음)

## 북한의 현실과 주민들의 삶

① 발간일 : 2008년 1월 14일

② 분량 : 총 269쪽

③ 차례

---

11월1일 | 15차 전문가포럼

북한경제의 변화실태와 주민들의 삶

11월21일 | 16차 전문가포럼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11월28일 | 17차 전문가포럼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 토대와 성분

2007 평화논평

평화논평 12호 - 34호

평화재단 소개

---

##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한다-

책표지  
(별도화일에 있음)

- ① 발간일 : 2007년 11월 15일
- ② 분량 : 총 106쪽
- ③ **차례**

---

인사말 :        범 루 (평화재단 이사장)

발표 1 :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新안보연구실장)

발표 2 :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정책방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발표 3 : 차기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화재단 소개

질문 및 메모

---

# VI. 언론보도 및 인터뷰 기사로 보는 2007년 평화 재단

## 언론보도 목차

1. 전문가 포럼 관련
2. 심포지엄 관련
3. 법률클럽 관련
4. 평화논평 관련

### 1. 전문가 포럼

#### 제7차 전문가포럼

**연합뉴스** 2007-03-1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잘되면' 이렇게

**오마이뉴스** 2007-03-14

2013년 남북연합단계 진입

**Daily NK** 2007-03-13

북 핵폐기하면 2013년 '남북연합' 진입가능

**뉴스 앤 뉴스** 2007-03-13

평화협정, 북-미 주도에 한국 왜소해질 수도

**국정브리핑** 2007-03-13

2.13합의 초기단계 이행시 종전선언 가능

**한겨레** 2007-03-1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나리오는?

**조선일보** 2007-03-14

남북, 남북미... 정상회담 설... 설... 설

---

#### 8차

**연합뉴스** 2007-4-17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첫 제안

**국정브리핑** 2007-04-18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첫 발표



코나스넷 2007-04-18  
'한반도 평화협정' 가시화 될 것인가

크리스천신문 2007-4-18  
평화협정, 남북의지와 국제적 보장 동시에 담아야

연합뉴스 2007-4-18  
"평화협정 이렇게..남북의지.국제보장 중요"

---

9차

데일리NK 2007-5-29  
6.15공동선언 기초 남북연합 제안 실효성 있나?

연합뉴스 2007-7-18  
한반도 평화협정 "이렇게"

---

11차

연합뉴스 2007-8-23  
"평화협정, 南.北만 당사자 돼야"<평화재단>

연합뉴스 2007-09-07  
<부시 '평화조약'의 한반도 특수성>

---

12차

오마이뉴스 2007-8-22  
[인터뷰] "정형근 의원과 대북인도지원법 발의할 것"

프레시안 2007-9-3  
정형근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 추진

한겨레 2007-9-3  
대북강경과 정형근 "북주민 생존권 외면 못해"

매일경제 2007-9-4  
정형근 "예산 1% 인도적 대북지원"

오마이뉴스 2007-9-4  
정형근의 '대북 인도지원'... 정부보다 세네

연합뉴스 2007-9-4  
정형근 "대북 인도지원법 정기국회서 입법"(종합)

조선일보 2007-9-4  
정형근 '대북 인도지원법 정기국회서 입법'

통일뉴스 2007-9-4  
정형근 '대북인도적 지원법' 제안

프리존뉴스 2007-9-4  
정형근 "대북 인도지원법 정기국회서 입법할 것"

---

13차

내일신문 2007-10-10  
국방장관회담서 '군축'도 논의하나

민중의소리 2007-10-10  
국방연구 백승주 "北 평화체제 과정서 국지도발 가능성"

조선닷컴 2007-10-10  
"軍, 과도기적 `평화관리 능력` 확보해야"

통일뉴스 2007-10-10  
"평화체제시 유엔사 자동해체 안된다"

---

14차

한겨레 2007-10-22  
우리 사상이 세계 평화 '씨앗' 될 수 있을까

매일경제 2007-10-23  
원효 최재우·함석헌 사상에 평화의 길 있다

종교신문 2007-11-27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평화재단포럼 개최

---

15차

데일리NK 2007-11-01

"북한은 계획과 시장의 불안정한 동거 관계"

크리스찬연합신문 2007-11-01

남한, 북한 경제성장 큰 기여

---

16차

조인스닷컴 2007-11-21

北인권 `정치범수용소 해체` 시급한 과제 [전문가]

데일리NK 2007-11-21

“北 수용소는 폭력과 살인이 합법화 된 공간”

올댓뉴스 2007-11-23

정치범수용소 인권유린 실태 고발

---

17차

조인스닷컴 2007-11-28

토론회 `北` 붉은자본가` 등장 예고`

조선일보 2007-11-28

"北 '붉은자본가' 등장 예고"

데일리NK 2007-11-28

"北 '토대-성분'도 돈앞에 흔들...조선시대 말기 모습"

---

18차

매일경제 2007-12-12

"남북 서해안 군비통제 논의 착수해야"[포럼]

연합뉴스 2007-12-12

"남북 서해안 군비통제 논의 착수해야"

데일리NK 2007-12-12

“대북 협상에서 말뿐인 평화는 형식에 불과”

2. 심포지엄

## 평화재단 6.19 국제심포지엄

뉴시스 2007-06-19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열려

연합뉴스 2007-06-19

평화재단 '북한체제 변화 전망' 토론 요지

국정브리핑 2007-06-19

피터 백 “2·13 합의, 북한 비핵화 유일한 전략”

코나스넷 2007-06-19

“北 정상적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국가”

오마이뉴스 2007-6-20

"북한 붕괴론은 피상적 관찰이었다"

오마이뉴스 2007-6-20

북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기여

프리존뉴스 2007-6-20

“한국, 김정일 이후의 북한 준비해야”

통일신문 2007-06-26

[지상중계]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 변화를 내다본다

---

## 평화재단 11.15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엄

매일경제 2007-11-15

'차기정부 통일·외교·안보 과제' 토론회 요지-1,2

오마이뉴스 2007-11-15

“차기정부, 참여정부 통일정책 지속해야”

통일뉴스 2007-11-15

"차기정부, 남북관계 뒤집으면 총체적 불안"

코나스넷 2007-11-15

"차기정부에 제언한다"

데일리NK 2007-11-15

"北, 불능화 이후에도 다시 불꽃놀이 가능성"

올댓뉴스 2007-11-16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제안

### 3. 법륜 스님

- 연합뉴스 2007-9-20

법륜 "北 올 겨울 대량 이사사태 발생 우려"

민족화해상 수상관련

- 민화협 발표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출처 민화협 홈페이지/2007년12월

- 한겨레 2007-12-11

민족화해범민협 '민족화해상'...법륜 스님·나눔인터내셔널 수상

-통일신문 2007-12-11

법륜스님,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

-매일경제 2007-12-11

'민족화해상'에 법륜스님

-데일리NK 2007-12-13

'민족화해상' 수상 법륜 "北 인권침해 비판해야"

-연합뉴스 2007-12-13

민족화해상 시상식

-연합뉴스 2007-12-13

민족화해상 수상자들

2. 「민족화해」 권두인터뷰 법륜 스님 · 평화재단 이사장 2008/01/02 (통권 제30호)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대북인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담 이수연 《민족화해》 / 출처 [http://www.kcrc.or.kr/?doc=bbs/gnuboard.php&bo\\_table=z\\_interview&wr\\_id=33&PHPSESSID=a8fdff5025ee632782e909657ef2eb97](http://www.kcrc.or.kr/?doc=bbs/gnuboard.php&bo_table=z_interview&wr_id=33&PHPSESSID=a8fdff5025ee632782e909657ef2eb97)

#### 4. 평화논평

연합뉴스 2007-9-27  
"北국내법 위반 인권유린 사례부터 제기해야" <전문가>

연합뉴스 2007-10-8  
"평화협정 중국 참여 바람직 안 해" <전문가>

연합뉴스 2007-10-31  
"북한 빈곤퇴치 담당기구 설치해야" <민간단체>

연합뉴스 2007-12-11  
"李는 사상누각, 鄭은 양꼬없는 찌뽕" <이경주교수>

연합뉴스 2007-12-25  
"새 정부 대북정책 10.4선언과 연계성 가져야" <전문가>

연합뉴스 2008-1-21  
"새정부 남북평화공존 제도화 목표해야" <기고문>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잘되면' 이렇게

### "내년 평화협정 체결→2013년 이후 남북연합 진입"

#### 통일연구원 조민 연구위원 '평화체제 로드맵'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베이징 '2.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이후 남북연합에 진입할 수 있다 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1~3단계로 나눠 전망한 '장밋빛'

로드맵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1단계(2007~2008년 전반)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구체적 포기과 리스트 해제가 이뤄지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도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완전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하고, 남북은 한반도 평화포럼을 가동해 ▲평화협정 체결 ▲군축방안 ▲경수로 제공시기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미국이 이 단계를 내년 상반기 목표 시한에 끝내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의 상징적 조치의 선행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대북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2008 후반~2013년)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신고- 검증- 사찰- 폐기 절차가 시작돼 2013년 완전 폐기가 이뤄지는 시기로, 미국의 체제 보장에 대한 북한의 확신과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북한의 결단 여부가 결정 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이어 북핵 폐기의 최종적 완료와 북미 수교가 맞교환 되는 시기를 3단계(2013년 이후)로 보고 "북한은 핵무기 완전 폐기와 핵물질의 북한 밖으로의 반출을 완료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남북한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남북한 합의에 의해 남북간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을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지위에 대해 유엔의 인정과 함께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이런 로드맵은 2.13합의 이후 북미간 이해관계가 부합해 긍정적인 여건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과 가능성을 종합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분명한 프로세스를 갖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연계 속에서 자칫 북미 중심의 협상구도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냉전종식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는 1990년대 북-중-소 '북방3각' 해체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2005년 9.19공동성명 합의 등으로 세 차례의 새 질서를 향한 '물결'이 일어났으나 두 차례는 질서재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9.19성명 이행 초기조치를 위한 2.13합의로 인해) 제 3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13합의는 2003년 시작된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한미공조를 토대로 보다 유연한 대북 자세를 취한 것"이라며 "적어도 미국측 요인 때문에 파탄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제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Daily NK 2007-3-13  
북한뉴스의 허브 - 데일리NK

## 북 핵폐기하면 2013년 '남북연합' 진입가능

통일연구원 주장...“핵-평화체제 관련 없어”반론



'2·13 합의'에 따라 북한 핵폐기 초기조치가 이행될 경우 내년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이후에는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주최한 전문가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북한이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을 시작으로 신고-검증-사찰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완전폐기하면, 2013년 이후 '미북수교'가 체결되고 한반도는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단계별로 북미 관계정상화 협의를 통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과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검토가 진행되는 시기 (2007 ~

2008년 전반)를 1단계로 제시했다. 이어 2단계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신고-검증-사찰-폐기절차가 시작돼 2013년 완전 폐기가 이뤄지는 시기(2008 후반-2013년)라고 밝혔다.



마지막 3단계에는 북핵 폐기의 최종적 완료와 북미 수교가 맞교환 되는 시기로 ‘남북연합’ 진입을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단계(2013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2단계 과정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체제보장에 대한 북한의 확신과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북한의 역사적 결단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라며 “북한에 대한 아주 매력적인 정치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3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북한의 변화가 아닌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이는 근원적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 문제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개입과 부시 집권 6년 동안의 대외정책 실패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소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방식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되는 등 여건이 성숙됐을 때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과,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촉진하기 위해 협정 체결을 먼저 고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문제만 해결되면 평화체제가 된다는 막연한 가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핵이 없을 때에도 평화체제는 아니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그림을 그리려면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라는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북한체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체제가 안 되는 것이 북한 핵과 미국 때문이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

views&news 2007-3-13

## "평화협정, 북-미 주도에 한국 왜소해질 수도"

### 조민 통일연구원 위원 "한국, 적극적으로 통일환경 조성해야"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 소외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칙적 입장과 추진방향,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통일환경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조 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평화재단 주최로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미국이 이제 비로소 북한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연계하기 시작,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비핵화 진전 상황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과정의 핵심 당사국은 미국과 북한이 되며, 미-북 중심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도는 한국 중심의 주도적 역할이 한계에 부딪치는 현실이나 한국이 이러한 구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비핵화가 핵심 사안으로

부각된다면 남북한 중심 논리인 군축 및 신뢰구축 등은 부차적인 사안으로 되면서 한국의 역할은 무척 협소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일본의 길과 한국의 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현실을 이끌어 갈 수 없다면, 변화된 현실을 냉혹히 직시하고 창조적으로 적응, 대응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3 합의를 둘러싼 국내 갈등에 대해서도 "2.13 합의에 대해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미국의 실패와 '배반'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으로 환영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환영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은 한반도 주변의 급변하는 상황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번 상황을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정치권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오매불망 대미관계 개선을 국가전략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을 북미관계상화 과정과 평화협정 논의 속에서 관리 통제하고, 그와 함께 한국도 미국의 한반도 전략 구도 속에 묶음으로써 동북아 질서를 미국 중심적인 구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chosun.com 2007-3-14

## 남북□남북미... 정상회담 설... 설... 설

미·북 베를린회담에 이어 2·13 베이징합의가 이뤄지고, 그 후속 조치들이 가시화되자 한반도의 해빙(解氷)을 알리는 각종 정상회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은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아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정치권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풀려가면 불가능하지야 하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6·15, 8·15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북한 방문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는 "북측에 정상회담 문제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에 대해서도 4월 이후라고 했다.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된 각종 정상회담설

관련 발언	시기·장소(정치권)	예상 의제(전문가)
<b>남·북</b> 이해찬 전 총리.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다"	개성·금강산 등, 또는 중국 등 제삼국	■남·북 간 경험확대 ■평화체제 -6·15 때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 등
<b>남·북·미</b>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 "6-7월 중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b>남·북·미·중</b>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 "남·북·미·중 정상회담도 가능"	남한과 가까운 북측지역 또는 중국	■중전선언·협정 -현재 정전상태에 대해 선언적 중전선언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의원들은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이재정 통일부장관 등 정부 고위당국자들도 “준비 중인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6·15’든 ‘8·15’든 북한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2000년 정상회담 때와 같이 ‘뒷돈’(당시 5억 달러)을 줄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란 지적에 대해 “현금이 아닌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지원으로 대체 가능”(서재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북 관계 개선 촉진, 남한 대선 개입을 위한 정치적 이유”(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의 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장소는 개성 등이 되거나 중국 등 제삼국이 거론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 ◆미·북, 남·북·미, 남·북·미·중 정상회담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6·7월에 한반도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길에 동행했던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런 분석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경우 ‘남·북’보다는 ‘남·북·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촉진 등 과장을 감안한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중국까지 포함해 정전협정에 중지부를 찍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예상하기도 한다. 13일 평화재단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도 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전선언 등 평화체제 논의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남주홍 경시대 교수는 “미국은 남한 내 대선에 미국이 변수가 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며 “2000년 조명록-올브라이트 방문 때처럼 북·미의 고위당국자가 교차 방문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국정브리핑 대한민국정책포럼 2007-3-13

## “2.13합의 초기단계 이행시 종전선언 가능”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후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이 진전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북아 냉전질서 붕괴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발맞춰, 관련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3 합의가 나온 지 한달이 되는 13일 평화재단에서 개최한 전문가 포럼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평화재단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문가 포럼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2·13 합의에 따른 60일 동안의 초기단계 조치가 원만하게 이행되면 남·북·미 3국간에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종전

선언'이 채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맞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2.13 합의를 이끌어낸 뒤 활짝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 천영우 우리측 수석대표와 김계관 북한 측 수석대표. <사진=연합뉴스>

### 중전선언, 정치적·도덕적 구속력 담보

조 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질서재편’ 주제 발표를 통해 “2·13 합의와 향후 중간 및 최종 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실장은 포럼에서 “2006년 11월 18일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중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한 뒤 “6자회담이 재기되고 미국 측의 대북 정책변화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전선언에 대해 조 실장은 “정치지도자들의 신사협정 또는 정치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라면서도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전쟁종결에 관해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 못지않은 정치적·도덕적 구속력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혔다.

또한 중전선언에 중전관리기구의 구성과 임무,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 국군포로 및 미군유해 송환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THE HANGYOREH 2007-3-14

---

**OhmyNews**  
모든 시민은 기자다 2007-3-14

"2013년 남북연합단계 진입"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나리오는?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을 명시한 2006년 '9·19 공동성명' 이후 활기를 띠다 잠잠해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2·13 합의' 이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평화체제 논의와 뗄 수 없는 관계인 비핵화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고,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으로는 50년 넘게 한반도를 구축해온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실질적으로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며, 주변국이 이를 지원하고 보증하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한반도에서 가능한 것일까.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로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북핵 폐기 단계에 따라 2008년 상반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이후 남북연합에 진입하는 '3단계 일정표'를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선 미 국무부가 '2006 회계연도 입부제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북핵 폐기 시한(2008년 상반기)까지를 1단계로 잡았다. 이 기간 안에 북한이 핵시설 봉쇄와 현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한다. 이와 맞물려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열어 군축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며, 평화체제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대북 개발협력 프로

## 북핵 폐기 단계 따라 '3단계' 제시 '평화협정→경제공동체→남북연합'

젝트'도 적극 가동한다. 이런 논의의 결과로 체결되는 '평화협정'은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기보다는 '과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2단계(2008년 하반기~2013년)는 현존 핵 프로그램을 넘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신고-검증-사찰-폐기 절차가 시작돼 2013년 완전 폐기가 이뤄지는 시기다. 이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며 북-미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남북은 이 단계에서 군축을 추진하게 되며,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의 경제보장에 대한 북한의 확신과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북한의 결단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2013년 이후에는 북핵 폐기가 최종적으로 완료돼 북-미 수교와 맞교환되는 3단계로 진입한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 완전 폐기와 핵물질의 북한 밖으로 반출을 완료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한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남북간에는 국가연합 형태인 '남북연합' 단계로의 진입을 국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안정 및 평화와 불가분적 관계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평화체제가 한반도 본단의 영구적 제도화로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자칫 북-미 중심의 협상 구도로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통일 추진 과정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 "북미간 비밀거래 경계해야"

### [현장] 열기 후끈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



▲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 주최로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가 열렸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 협상에 나서는 닉슨 쇼크가 발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닉슨 쇼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2008년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가 개막되고 2013년 이후 미북 수교 및 유엔 보장하에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3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추측해 볼 때 북한과 미국이 지난 1월 베를린 에서 한반도 미래를 놓고 비밀거래를 한 것 같다. 핵무기 및 핵물질을 확산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의 기존 핵을 묵인해주는 내용일 수 있다. 한국이 배제되는 새로운 질서 형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평화재단 주최로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북미 관계 개선이 급물살 을 타고 있기 때문인지 300명 정도의 청중이 몰렸다.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2·13 합의 이행 과정 및 한반도 미래에 대해 토론을 벌였는데 글머 리에 소개한대로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 길 밖에 없다고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미 행정부도 완전히 이전과 입장이 바뀌었는데, 네오콘 등 반대 세력의 힘이 약하고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은 단순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며 "큰 판은 유리하게 진행되지만 평화체제를 디딤돌로 해서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분단 고착화로 가느냐는 아직 확정

되지 않은 갈림길에 있다"고 지적했다.

##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의 앞 단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질서개편'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3단계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2·13 합의에 규정된대로 60일 이내의 조치가 실행되면 이어 6~12개월에 걸쳐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신고 ▲모든 현존 핵 시설의 불능화 ▲핵확산방지체제(NPT) 복귀 등을 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 ▲경수로 공사재개 ▲종전 선언 등을 하게 된다.

최종 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서 북·미 및 북·일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가게 된다. 이전에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이 한 묶음으로 인식되었으나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 실장은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구분해,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 단계 및 중간단계의 조치를 이행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 서명식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전선언문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준수, 국군 포로 및 미군 유해 송환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 서해북방한계선(NLL) 및 공동어로 구역 설정, 유엔사령부의 기능전환, 국가 보안법 및 북한 노동당 규약 개폐 문제 등이 과제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앞으로 주한 미군기지 및 남한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가능성 등 난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 조 실장은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냉전 해체라는 제1의 물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제2의 물결에 이어 이제 제3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 북한이 한반도 평화문제 주도권 쥔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3 합의는 북한이 변한 게 아니라 미국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외 정책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미 행정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당히 낙관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2007~2008년 전반)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 및 핵시설 불능화, 현존 핵프로그램 완전 신고(사찰 및 검증 완료)를 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교역법 적용 종료, 경수로 제공시기 논의,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협상 등을 시작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한국은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통한 군축 방안 협의, 대북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2단계(2008년 후반기~2013년)에서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물질 신고·검증·사찰·폐기를 시작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개막하면서 경수로 공사 재개 및 북미 연락사무 설치(2008년) 등을 한다. 한국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3단계(2013년 이후)에서 북한은 핵무기 및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해 해외로 내보내며 미국은 북미 수교와 함께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해 상징적 수준으로만 남긴다. 또 이 단계에서 유엔 보장하에 한반도는 '남북연합' 단계에 들어선다.

조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도에서 이제 한국의 '주도권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양-워싱턴 채널이 본격 가동된다면 비핵화·평화체제 문제는 북미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북미간 이미 합의된 것을 베이징에 모인 나머지 4개국이 형식으로 추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 "북한 핵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평화가 온다?"

주제 발표자들이 낙관적 전망을 한데 비해 토론에 나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관적이었다.

그는 "2·13 합의는 매우 불안전하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시하면서 "1960~70년대 북한이 핵이 없을 때도 한반도 평화체제는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실장은 북미간의 '베를린 밀약설'을 제기했다.

"2·13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추측해볼 때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미래를 놓고 전략적으로 비밀거래를 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기존 핵무기는 장기 과제라는 미명하에 묵인해주고 대신 북한 핵무기 확산과 이전을 막는 것이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이렇게 관리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실험 뒤 경제제재를 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다 풀고 핵을 묵인해줬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미국에 말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친중 국가로 남지 않을 수 있다고 메시지를 주면서 실질적인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과 맞물릴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핑퐁외교를 통해 수교하는 과정에서 대만은 소외됐다. 한국이 대만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배제된 새로운 질서 형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정상회담 등 지각변동 같은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되었다"면서 "2·13 합의도 처음 2개월 정도는 잘 되겠지만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문제 해결이 곧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윤 교수는 "북한의 핵 개발은 단지 미국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중소 대립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권을 보전하고, 남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성장에 따른 대응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도 주제발표자들에게 "미국은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은 진정성이 있는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김태경(gauzari) 기자



## 8차 전문가포럼



###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첫 제안

"평화체제, 평화협정 논의 구체화 계기 기대"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2.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장기전략을 모색하는 민간 연구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처음으로 제안한다.

평화재단은 18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 8차 전문가포럼을 통해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화재단의 시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국을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국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당사국이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제 1안으로 제시했다.

이 시안은 ▲중전선언 ▲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지원 ▲남한내 핵무기 및 제조 가능물질 존재여부 북한 사찰 허용 ▲평화시대 설치 ▲한반도 평화관리공동위원회 설치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보장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협정에 담고 있다.

남북은 기본협정과 함께 기존 합의 존중과 통일 노력, 불가침 약속,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자유 왕래,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협정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

북한과 미국 간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공식 보장, 미국의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 북미간 국교 정상화, 미군 주둔 평화유지 목적 한정 등을 담은 부속협정을 맺도록 했다.

평화재단은 아울러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가 4국이 한반도 중전선언을 하고, 남북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 2안으로 제시했다.

평화재단은 "2.13합의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쟁점이 돼 온 부분들을 개괄해 제시하는 평화협정 시안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첫 발표

2·13 합의에서 명시한 한반도평화체제 협상과 관련, 실질적인 분쟁 당사자인 남북미와 정전협정 당사자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역할이 기대되는 중국을 모두 당사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이 처음으로 제안됐다.



▲ 6자회담에서 도출한 2·13 합의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은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사진=연합뉴스>

민간 연구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제8차 전문가포럼을 열고 윤영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평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했다.

### 남-북-미-중 4개국 북핵 불능화 완료시점 종전선언

평화재단은 이날 포럼에서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 당사국이 2·13 합의에 따른 핵불능화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부속협정으로 남북, 북미간의 관계를 별도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안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원칙, 평화관리기구 등 당사국 공동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4국 기본협정과 남북한, 미북 간의 당사국 간 부속협정으로 구성됐다.

기본 협정은 총 7장으로 △전쟁종료 및 평화선언 △한반도 비핵화 △평화지대의 설치 △평화관리기구 △다른 조약과의 관계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장 △발효 및 기타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평화협정 시안 제1장 제1조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 전쟁 종료를 명시했다.

## 기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전환

또한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토록 명시한 조항도 주목된다. 제1장 제7조에 따르면 평화지대의 면적은 기존 비무장지대보다 축소될 수 없으며, 평화지대에는 일체무력을 배치할 수 없고,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와 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 등 2개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는 남북한 대표 동수로 구성되며, 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협정 이행과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협정과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분쟁 해결과 평화관리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는 미국과 중국 대표자와, 남북한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각 한명으로 구성되어 국제적인 지원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밖에도 부칙을 통해 협정의 유효기간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로 명시하고, 협정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합의는 계승

평화재단은 이날 포럼에서 또 다른 방안으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가 4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이행을 보장하는 시안도 함께 내놓았다.

2가지 방안은 공통적으로 현상 유지적 평화체제에 대한 경계, 외세 개입의 최소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북미간의 기존 합의내용의 계승성을 강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단순히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평화적으로 지향한다는 남북간의 의지와 국제적 보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속에서 남북이 서로 배제하거나 외세에 의한 평화체제의 수동적 구축이 아니라 남북한과 주변국이 소통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 “남북이 평화관리의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이를 보장하는 형식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 중국의 차별적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다면 남북미가 당사자가 되고 이를 미중이 보장하는 형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반도 평화협정' 가시화 될 것인가

한반도 평화협정 전문가 토론회, "신중접근을"

2.13합의 이후 동북아 질서가 한국이 소외된 가운데 4대 강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분단고착화 되어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사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안) 전문가 토론회 ©konas.net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변호사와 관련 교수진으로 법제팀을 편성해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18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주제의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번이 8차 포럼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남, 북, 미, 중 4자를 당사자로 하여 포괄적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1안, 4자의 종전선언 후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 중이 보장하여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2안으로 제안했다.

윤 변호사는 4개 당사국이 맺을 평화협정 내용으로 ▲종전선언 ▲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 ▲한반도 비핵화선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지원 등을 제시하며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고 평화 보장의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체제를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제도화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화협정을 남, 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정의하고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주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평화재단측은 "이 시안은 변호사와 학자 중심의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 모임에서 나온 연구성과물"이라고 설명하고 "당사국인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잃지 않고 주변 강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으며, 통일 방안을 찾아보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2.13합의로 평화협정안이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시권 내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평화협정체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를 통해 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외교전략일수도 있다"며 "이는 평화협정의 문제를 통일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삼고자하는 평화통일 원리에 반할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은 말만큼 쉬운게 아닌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50년 동안 흘러왔다"면서 자신은 1안인 포괄적인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협정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평화를 넘어 통일까지 보장하는 평화협정 보다는 적대관계나 기술적 교전상태를 극복해 남북간, 미북간 국제법적 관계를 부여하는데 맞추어 놓고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권유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되 우리 스스로가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도 핵을 갖게 될 경우가 있을 것" 이라고 한반도 비핵화를 협정안에 포함하는 안을 반대했다.



▲ '아이고 머리아! 북핵해결(?) 종전선언(?) 한반도평화협정(?) 대북지원 등 골치아픈 문제가 산적한 듯 세미 나장을 찾은 이재정 통일부장관(가운데)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오른쪽은 윤여준씨.©konas.net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법적 구속력 강화를 요구했다. 평화협정의 전문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의의 내지 선언으로서 정치적 또는 선언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의 인정과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평화협정에 대한 법적 효과와 효력을 부여해 협정당사자의 법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즉 협정안은 보다 진전된 평화체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필히 변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상황을 보장하는 내요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평화협정을 선언하게 되면 종전선언의 의미까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선언이 나오기까지는 우리의 득실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에 유효한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며 자칫 존폐와 관련된 판도라상자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백승주 연구위원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냈다. "평화협정 체결에서 비핵화가 빠질 수는 없다고 본다"며 "핵문제만 언급할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까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확대했다.

그는 또 한국 주둔 외국군의 지위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핵이 완전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군의 지위가 하나의 평화유지군 수단으로 격하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안보는 북핵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위협요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역사적 사실로 비유했다.

즉 "한반도 주변 강국인 중일이 동시에 강할 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다. 지금도 중일이 동시에 강하다. 결코 북한만이 위협이 아니다" 며 전략적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생각해야 한다며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날 세미나가 열린 배재학술지원센터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참석해 발제토론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 장관은 토론 중간쯤 세미나장을 빠져나갔다.(Konas) 이현오 기자

---

## 크리스찬신문 2007-4-18

### “평화협정, 남북의지와 국제적 보장 동시에 담아야”

평화재단 제8차 전문가포럼 개최

2·13합의 이후 동북아 질서가 한국이 소외된 채 강대국들의 주도 하에 재편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분단고착화와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재단이 한반도평화협정 시안을 처음으로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평화재단은 지난달 18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하는 전문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평화재단은 윤영환 변호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2·13 합의에서 명시한 한반도평화체제 협상과 관련, 실질적인 분쟁 당사자인 남북미와 정전협정 당사자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역할이 기대되는 중국을 모두 당사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제안했다. 이 시안은 평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평화재단은 이날 포럼에서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 당사국이 2·13 합의에 따른 핵불능화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부속협정으로 남북, 북미간의 관계를 별도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시안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원칙, 평화관리기구 등 당사국 공동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4국 기본협정과 남북한, 미북 간의 당사국 간 부속협정으로 구성됐다.

기본 협정은 총 7장으로 △전쟁종료 및 평화선언△한반도 비핵화△평화지대의 설치△평화관리기구△다른 조약과의 관계△한반도 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장△발효 및 기타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화협정 시안 제1장 제1조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 전쟁 종료를 명시했다.

또한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토록 명시한 조항도 주목된다. 제1장 제7조에 따르면 평화지대의 면적은 기존 비무장지대보다 축소될 수 없으며, 평화지대에는 일체무력을 배치할 수 없고,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와 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 등 2개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는 남북한 대표 동수로 구성되며, 협정 체결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협정 이행과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협정과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분쟁 해결과 평화관리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는 미국과 중국 대표자와, 남북한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각 한명으로 구성되어 국제적인 지원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밖에도 부칙을 통해 협정의 유효기간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로 명시하고, 협정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평화재단은 이날 포럼에서 또 다른 방안으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가 4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이행을 보장하는 시안도 함께 내놓았다.

2가지 방안은 공통적으로 현상 유지적 평화체제에 대한 경계, 외세 개입의 최소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북미간의 기존 합의내용의 계승성을 강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단순히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평화적으로 지향한다는 남북간의 의지와 국제적 보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이 서로 배제하거나 외세에 의한 평화체제의 수동적 구축이 아니라 남북한과 주변국이 소통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주체적 결정 공간의 확보가 절대적임을 지적하면서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김 차관은 또한 평화협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들로 전쟁종결 선언, 경계선과 평화 중립지대, 평화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구 등을 제시했다.  
이재호기자 jjjclub@yahoo.co.kr



## "평화협정 이렇게..남북의지.국제보장 중요"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장기전략을 모색하는 민간 연구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범륜)이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試案)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불을 당겼다.

평화재단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제 8차 전문가포럼을 열고 운영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의 주제발표 형식으로 평화재단이 1년여간 자체적으로 연구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했다.

평화재단은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 당사국이 ▲중전선언 ▲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평화협정의 제 1안으로 제시했다.

남북간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 군비 통제 등을 약속하고 북미간에는 핵무기 불사용과 국교 정상화 등을 보장하는 부속협정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가 4국이 한반도 중전선언을 하고, 남북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 2안으로 제시했다.

평화재단은 "이 시안은 변호사와 학자 중심의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모임의 연구 성과물"이라며 "당사국인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잃지 않고 주변 강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으면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무엇보다 당사국인 남북의 합의 이행 의지와 국제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평화통일의 원칙과 남북한의 주도성이러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평화협정은 단순히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평화적으로 지향한다는 남북간의 의지와 국제적 보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평화를 넘어 통일까지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보다 적대관계, 기술적 교전상태를 극복해 남북간, 미북간 국제법적 관계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평화협정의 체결은 바람이지만 내용이 방대해 합의까지 이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르므로 성급한 접근보다 인내의 자세가 요청된다"면서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계기로 한 평화협정의 채택과 발효는 결국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와 구속력 확보로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sh@yna.co.kr

## 9차 전문가포럼

The Daily NK 2007-05-29  
북한뉴스의 허브 - 데일리NK

### 6.15공동선언 기초 남북연합 제안 실효성 있나?

평화논의 구조적 결함 드러내..."북 개혁개방 전제돼야"



▲ 28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포럼이 개최됐다. ©데일리NK

민간단체에서 6.15공동선언을 기초로 한 남북통일협정 시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8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 9 차 전문가 포럼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에서 남북연합을 기초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통일협정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공동선언에서 제2항은 남의 연합체와 북의 낮은단계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통일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안은 통일의 과도기로 남북연합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통일실현을 위해 남북연합을 구성할 것 ▲남북연합의 기구로 연합정상회의, 연합각료회의 등을 갖출 것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연합특구, 평화지대를 설치할 것 ▲각국의 법에 우선하는 법규를 갖출 것 등이다.

시안에 대한 반론도 거셌다.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제안된 시안은 엄밀하게 말해

통일협정이 아니라 ‘남북연합협정’이라며 “현재 제안된 것을 통일협정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한 국가가 될 때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통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연합법률이 남북의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현재 우리의 헌법에 우선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시안과 헌법 합치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연합’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북연합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며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개선 및 체제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돼 체제가치의 유사성이 확보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안이 기초하고 있는 6.15공동선언 자체의 의미를 재고할 것을 지적했다.

그는 “공동선언 이후 7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부분의 교류는 1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약속된 정상회담은 개최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갖는 한계”라고 말했다.

이 날 포럼은 남북연합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오고갔지만, 대체적으로 현 분단 상태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평화재단이 제시한 6.15선언에 기초한 통일협정 시안 논의는 그 본래 취지를 넘어 현 남북관계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권희재 대학생 인턴기자]



2007-7-18

## <한반도 평화협정 "이렇게">

試案제시 등 민관 논의 점화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북핵 2.13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핵심이 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하고 한국국방연구원도 5월

평화체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등 올해 들어 민간과 정부산하 연구소 곳곳에서 관련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는 크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협정의 역할과 체결 시점, 의미, 당사국 범위를 놓고 다양하게 갈래를 타고 있다.

#### ◇평화협정 역할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자체 연구해 발표한 평화재단측은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하위 요소"라고 전제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평화재단은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 내용을 계승하되 외세 개입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통일 문제와 연관시키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협정안을 내놨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5월 '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관련 당사국이 함께 실천해야 할 청사진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평화협정의 역할을 규정했다.

평통사는 그러나 평화재단의 협정 시안에 대해 "기존 합의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협정이 북한의 핵불능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같은달 정부 관련기관간 비공개 모임에서 내놓은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화체제를 '준비단계→진입단계→전환단계→평화정착 단계'로 진행하되 한국이 북,미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종전선언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협정체결 시기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 다음에 이뤄질 일인가 아니면 동시에 진행해야 할 일인가. 이른바 결과론과 수단론간 논란이다.

평통사측은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불능화가 완료된 이후 '결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핵불능화 작업과 동시 진행해야 할 시안"이라며 "협정안에 북측의 핵불능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재단은 체결 시점에 따라 협정안을 두가지 내놨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정 시점에 이르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평화협정 수단론'과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협정을 맺는 '결과론' 각각에 따른 안이다.

이 재단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법조인, 학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단론과 결과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북미관계 흐름으로 볼 때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하더라도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KIDA의 평화체제 보고서에서는 남북간 군사회담 기구를 만들어 종전선언을 이끌어 낸 뒤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다음 북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이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국은 평화체제는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6일 "평화체제 논의를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춰 하길 원한다"면서 "비핵화 이슈를 해결하기 전에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협정서명 범위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북남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오다 1974년부터 방향을 틀어 북미간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고(故) 김일성 주석이 73년 "남한은 미국 등 외세개입으로 남한의 한반도 문제해결 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어떤 평화체제 논의라도 남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제외한 국내외에서의 논의는 남북간 협정을 당연시하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느냐, 유엔과 일본, 러시아에 +a로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평통사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만큼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증인'으로 머물지 않고 협정이 정한 통제와 규범을 따르는 평화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5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주최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심포지엄'에서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면서 유엔이 추진하는 '2+2+UN' 방식을 제안했다.

임 전 장관은 당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4자회담을 통해 전쟁종식에 합의하고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논의 배경

남북 분단 이후 부침을 거듭해온 평화체제 논의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고조기를 맞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3년만인 19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최고사령관이 정전협정을 맺었으며 이후 54년간 이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94년 제네바 합의, 90년대 후반 4자회담 제안 등이 이어지면서 평화체제 논의도 활발해졌으나 북미관계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명시함으로써 평화협정 논의에 다시 불이 댕겼다.

2.13 합의에 따라 지난 15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이후 한·미의 주요 외교 당국자들도 앞다퉀 평화체제 논의 시점과 선결 조건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newglass@yna.co.kr

## 11차 전문가포럼



### "평화협정, 南.北만 당사자 돼야" <평화재단>

"주변 강국 참여시 분단고착 평화에 머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한반도 평화협정에 주변 강대국이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분단고착의 현상유지적 평화"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한만 직접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보증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23일 주장했다.

평화재단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윤영환 변호사의 주제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평화협정 시안에서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국의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해, 남북이 직접 당사자가 되고 미.중은 보장자 혹은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측은 "주변 강대국이 평화협정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민족문제의 국제화를 야기함으로써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족의 이익이 좌우되고 분단고착의 현상유지적 평화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재단측은 아울러 "평화협정의 실효성 문제는 협정 외에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나 북.미 수교, 중국과 미국의 보장 등을 통해 중층적.복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평화협정에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 포함돼야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부시 '평화조약의 한반도 특수성'>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회담에서 말한 '평화조약'은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 때 말한 '종전선언'에 비해선 법적 측면에서 발전된 개념이지만,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논의돼온 '평화협정'과는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

조약이 협정보다 구속력이 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조약과 협정의 그러한 어의 차이를 굳이 구별해 말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평화협정은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평화협정, 2차 세계대전 후 파리평화협정 등과 같이 교전 당사국들이 전쟁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전후 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지역에서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정전협정은 이른 시일내에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만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맺은 뒤 반세기가 넘도록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통상 국가간 평화협정(조약)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종결, 평화의 회복, 적대행위의 중지, 평화적

수교의 개시, 포로신분의 종료를 포함한다.

조약 내용에 따라선 영토의 분할, 이에 따른 주민의 국적 변경, 배상의 지급, 장래의 평화 등에 관한 조항도 들어간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도 한반도의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될 전망이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지난 4월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 당사국이 ▲중전선언 ▲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제1시안으로 내놨다.

이 재단이 제안한 제2시안은 협정서명의 당사자 측면에 주된 차이가 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가 4국이 중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엔 남북한이 서명하되 미국과 중국은 이행을 보장하는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관점에 따라 평화협정의 역할과 체결 시점, 의미, 당사국 범위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평화협정은 앞으로도 '그려 나가야 할 그림'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나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는 미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도 북-유엔군(미군)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거듭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선(先) 핵포기 결정 후(後) 평화협상' 입장에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선 평화체제 후 핵포기가 순서"라고 맞서기도 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선 그 협정을 통해 또는 협정 서명 전에 유엔사의 해체나 기능·역할 전환, 주한미군의 철수 여부,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미국, 중국과 맺고 있는 동맹조약,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정책 등 복잡하게 얽힌 정치·군사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hsh@yna.co.kr



## 12차 전문가포럼

OhmyNews\* 모든 시민은 기자다 2007-8-22

### 정형근 의원과 대북인도지원법 발의할 것"

[인터뷰] 법륜 좋은벗들 이사장... "정상회담 우선의제는 주민생존권"



▲ 진보적 견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쳐온 법륜 한국JTS 이사장(스님) © 오마이뉴스 남소연

진보적 견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쳐온 법륜 좋은 벗들 이사장(스님)이 극우보수 정치인의 대표주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손잡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다. 다음달 4일에는 이를 위한 공개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법륜 좋은 벗들 이사장은 2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활용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남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정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9월 4일 오후 2시에는 이를 위한 공개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륜 이사장은 "여야 합의로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시 입법으로 매년 1조2000억원 정도면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배가 고프니까 자꾸 다 자라지도 않은 감자를 캐먹고, 어린 옥수수를 따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뽕기밭 일구면서 사는 것"이라며 "북한의 교사나 의사, 노동자들이 모두 제자리에 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사회로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콜레라·결핵·장티푸스·이질 같은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 게 말이 되냐고 개탄하는 법륜 이사장은 "공개토론을 거쳐 정 의원과 공동 발의로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법륜 좋은 벗들 이사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 "대량 아사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

- 좋은 벗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수해피해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올해 수해피해는 작년보다 인명피해는 적지만 범위는 훨씬 광범위하다. 작년에는 평안남도과 강원도, 황해도와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만 피해가 있었지만, 올해는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폭우가 내렸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철도는 평안남도 신양군 지수역에서 양덕군 석탕온천역 사이의 수십km가 유실됐다. 황해북도 신계군 정봉역에서 평산군 기탄역 사이가 침수됐다. 현재는 평양-신의주행 기차만 운행될 뿐 나머지 열차구간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평양 시내 많은 부분이 침수됐다. 올해 피해지역은 평안남도 맹산, 개천, 덕천군을 포함해 황해도 신평, 곡산, 신계, 서흥, 은천, 은률, 삼천, 재령, 안악, 강원도 회양, 평강, 세포군이다."

- 작년보다 인명피해가 적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나.

"북한정부가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했다. 작년에는 무방비상태였다. 사전에 위험지역은 피신하라고 미리 예고했고 며칠부터 주의하라는 공지가 나갔다. 또 저수지의 물을 미리 빼내는 등의 대응도 했다. 그러나 작년보다 강우량이 많았다. 작년 북한에 홍수가 났을 때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발표될 때였다. 북한 내부는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뒤였다. 수해 피해복구에 동원될 군대가 없었다. 제때 피해복구와 구조를 하지 못했다. 올해는 평화해빙무드였다. 따라서 군대가 수해 복구 작업에 신속히 투입됐다. 작년에는 안보문제 때문에 수해현장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공개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복구가 수월해졌다."

- 이번 수해피해로 95년 대기근 때만큼의 아사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 인민들이 그때처럼 순진하지 않다. 가만히 앉아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모르겠지만 멀쩡한 어른이라면 그럴 리 없다. 95년 당시에는 중앙공급체계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전부 식량이 없는 상태가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나 지금은 빈부격차가 심각해서 그렇지, 모두 다 굶어죽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또 NGO들이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보다 정보 수집력이 뛰어나다. 아사자는 발생하겠지만 대량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북한 사람들의 사체가 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 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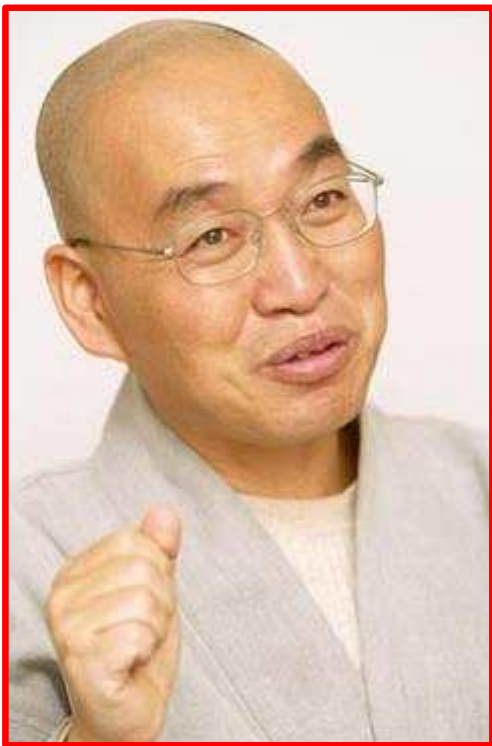
"그럴 수 있다. 임진강 상류 지역은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회향군, 평강군 등이다. 이번에 강원도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여 희생자의 일부가 임진강 하류로 떠내려 올 수 있다. 일부 지역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댐의 수문을 열었는데, 미리 공지를 했지만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않아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 북한의 재난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

"북한의 재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번 났다 하면 크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다. 중국과 북한에

동일한 수준의 비가 와도 북한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민둥산 때문이다. 95년 홍수피해 이후 우선 급한 것만 복구하고 말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하천에 제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파괴되거나 유실된 피해물을 복구할 만한 증장비도 없다. 평양을 제외하고 최근 20년간 새로 지은 건물이 거의 없다. 모두 건물이 낡았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1959년 태풍 사라 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다. 84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니까. 그때의 경제사회구조를 생각하면 북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이다."

## "곡괭이만 갖고 석탄 캐 수 있나"



© 오마이뉴스 남소연

- 홍수피해로 인해 북한 사회 내부의 곡물가격도 올랐을 텐데.

"대부분 쌀 구경을 못하고 살지만, 1kg당 북한 돈 1150 원인데, 지금 함흥은 1800원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1300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물가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옥수수는 230~240원(1kg당) 선에서 거래됐는데 계속 올라서 450원~53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올해 식량보급 계획은 어떻게 예상하나.

"북한에서 추수가 시작되는 올 10월말까지 적어도 지금 보다 70만톤의 추가식량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민간단체 도움으로 추가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추석 때까지 안정된 최소한의 식량을 마련할 수 있다. 비축량을 다 써버리고 올해의 수확량이 감소하면 내년에도 2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300만톤 미만이 될 것이다. 필요로 하는 식량은 적어도 450~500만톤이다."

- 한국JTS가 올해 지원하는 내역은 어떻게 되나.

"우리는 이미 수해가 나기 전부터 북한의 아사에 대비해왔다. 이미 6월에 밀가루 500톤을 보냈다. 7월에 아사자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8월에 모금해서 함경북도에 옥수수 1400톤을 지원 준비 중에 있다. 중국에서 구입, 육로로 수송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달 23일에는 중국 단동을 거쳐 신의주로 ▲담요 5000장 ▲의류 5000점 ▲신발 1만 켤레 정도를 보낼 예정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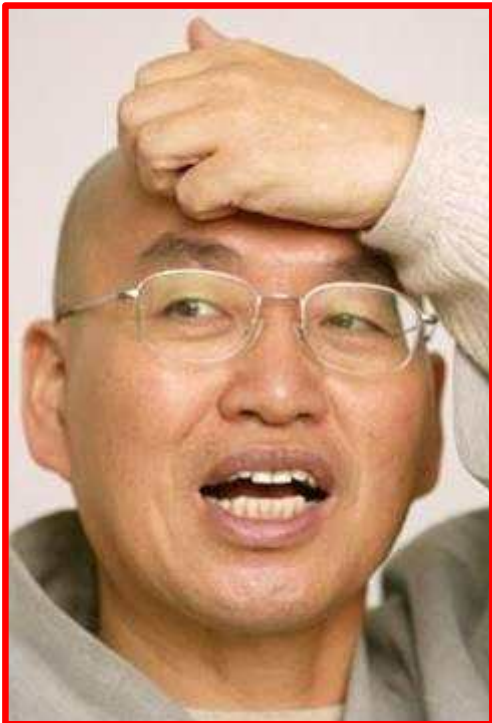
- 의료지원도 절실한 것 같다.

"현재는 홍수 뒤의 수인성 전염병, 설사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핵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거주환경이 나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병들이다. 결핵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30~40대 성인이 가장 많다. 특히 결핵으로 인한 40~50대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다."

- 북한의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을 막을 방법은 없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식량 생산량을 보면서 올해의 아사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규모 나무심기운동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에서는 채 자라지 않은 나무를 베어 땀감으로 쓴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식량부족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땀기발을 일군다. 땀기발 일구지 않고, 채 자라지 않은 나무 베어 연료로 쓰는 일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식량지원, 나무지원, 석탄 공급이 동시에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석탄 매장량이 많지만 전기가 없어 대부분 폐광상태다. 곡괭이만 갖고 석탄 썰 수 있다. 주민생활이 열악한 주원인은 에너지 부족이다."

## "수백만 동원한 손님맞이 어려웠을 것"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수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됐다. 평양의 침수피해가 요인이 됐을까.

"굳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왜 못하겠나. 하지만 엄청난 수해 앞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장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연기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해석할만한, 명백한 정치적 의도, 이런 건 없다고 본다. 또 수해 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백만 군중을 동원해서 '손님'을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평양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곳이다. 평양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 수해피해를 북한 당국 자체 힘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용천폭발사고 때처럼 신속하게 공개하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 수해 때문에 정상회담은 연기하면서 아리랑축전은 강행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작년에는 인명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축전을 한다는 건 민심을 동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

화별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외화별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은 게 아니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리랑축전은 이미 진행 중에 있었다. 작년에는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였고, 여러 차이가 있다."

- 10월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나.

"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다 좋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북한민중의 생존권이다. 이 문제가 일반과제로 논의돼야 한다. 남한에서는 대량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북한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투명하게 분배하는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꾀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쇼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다. 주민생존권을 최우선 의제로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수립 등의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한국전쟁 이후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송환문제 등도 논의돼야 한다. 안 그러면 자꾸 한국 대선용이라는 등의 정치적 오해가 생긴다."

- 북한의 식량난 등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해법이 없겠나.

"북한의 식량난을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활용해서 문제다. 남한에서 인도적 지원법을 제정해서 주민

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합의로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말이다. 식량 연 250만톤, 비료 100만톤, 의약품 등 해마다 1조2000억원 정도를 몇 년간 한시 입법으로 제정하면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배가 고프니까 다 자라지도 않은 감자 캐먹고, 어린 옥수수 따먹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땀기밭 일구면서 산다. 이것은 학교선생도 의사선생도 노동자도 다 마찬가지다. 이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니까 늘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북한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 암 같은 질병이 아니라 콜레라, 결핵, 장티푸스, 이질, 홍역, 성홍열,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약값이 비싼 것도 아닌데, 9월 4일 정형근 의원과 공동 발의를 위한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찬성한다. 북한도 한국정체에 간섭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 모니터링에도 협력해야 한다. 북한사회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명분이 아무리 옳아도 감동이 없다.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동화하려면 북한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

PRESSian 2007-9-3

## 정형근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 추진

"北 주민 식량권과 생존권 외면 못해"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다가 최근 신 대북정책의 입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 접근에서 변화를 보이는 정형근 의원이 이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3일 입수된 정 의원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안서는 입법 취지를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한 식량·의약품·의료장비·의복 등의 물품 지원과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또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국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안은 아울러 무분별한 한건주의식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인도적 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주민 인도적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입법안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으로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한 것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을 우선할 것 ▲식량지원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점차 대체해 나갈 것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나,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때 북한 당국 또는 기관에 전달되기보다는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로 모든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4일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평화재단 연구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정부 예산의 1%를 책정해 식량·비료·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도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안서'를 발표한다.

박 변호사의 입법안은 "북한의 위기를 해결하고 북한이 자립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한을 설정해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농림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북인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법안은 분배투명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대북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차별 진행사업과 개선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평화재단과 정 의원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더 들어 세부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다. /연합/



2007-9-3

## 대북강경과 정형근 “북주민 생존권 외면 못해”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대북인도적지원법' 추진

[연합]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다가 최근 신 대북정책의 입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 접근에서 변화를 보이는 정형근 의원이 이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3일 입수된 정 의원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안서는 입법 취지를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한 식량·의약품·의료장비·의복 등의 물품 지원과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또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국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안은 아울러 무분별한 한건주의식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인도적 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주민 인도적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입법안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으로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을 우선할 것 ▲식량지원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점차 대체해나갈 것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나,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때 북한 당국 또는 기관에 전달되기 보다는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로 모든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4일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평화재단 연구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정부 예산의 1%를 책정해 식량·의료·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도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안서'를 발표한다.

박 변호사의 입법안은 "북한의 위기를 해결하고 북한이 자립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한을 설정해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농림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북인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법안은 분배투명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대북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차별 진행사업과 개선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평화재단과 정 의원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더 들어 세부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

## 매일경제 2007-9-4

### 정형근 "예산 1% 인도적 대북지원"

#### 정기국회서 입법추진

앞으로 해마다 정부 예산 중 1% 정도(올해 기준 약 1조5000억원)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가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할 것"이라며 "5년 한시법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하면 평가를 거쳐 시효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남북협력기금의 20% 안팎인 연 2500억~3000억원 수준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지원액이 5~6배 가까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설진훈 기자]

---

## 정형근의 '대북 인도지원'... 정부보다 세네 지속적 대북 지원 위한 '대북 인도적지원법' 제안



▲ 평화재단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공동개최한 '대북 인도적지원법 제안' 토론회가 4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 평화재단 정형근

"그동안 대북 지원은 한국이나 미국 등 주요 지원국의 정책적 혹은 정략적 판단에 따른 유동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 내 식량 문제나 보건의료문제는 체제의 구조적 어려움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안한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안'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 기준으로 1% 정도에 달하는 1조 5000억원 상당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 의원이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현재 정부가 북한 수해지원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493억의 약 3배를 넘는 금액이다.

"피주기? 투명성만 보장되면 괜찮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외부 지원 중단과 흉수로 인해 매우 열악하다. 올해 6월말 함흥에서는 아사자가 3백명 이상 발생했고 6월 중순부터 각 지역에서 기아로 인해 사망자가 1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노옥재 '좋은 벗들' 사무국장은 "현재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량은 280톤 정도로 식량배급 4순위의 주민들은 100그램의 식량도 배분이 안 된다"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증언했다.





▲ 정형근 의원이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평화재단 정형근

또 "추수철이 되기 전 곡식을 다 따 먹고 배가 고파 노동력이 저하돼 생산성도 저하되는 등 산업전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퍼주기'라는 고약한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상호주의, 즉 분배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대북 지원이 나쁠 이유가 없다"며 정 의원의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을 환영했다.

또 일반 시민들의 대북 지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북한의 식량난에 정부가 50만톤에서 70만톤 정도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형근 의원께서 200만톤까지 지원을 생각하시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다"며 "이무쪼록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잘 될까?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정 의원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철영 교수(대구대)는 법률의 표제를 '임시조치법'이라고 붙여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 임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과연 실체가 다른 국가의 주민의 생존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법률적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법안에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는 현물지원'을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인도지원의 기본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국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제, 지원금의 회수 등을 규정해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서울 향군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향군회관으로 들어서다 라이트코리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에 맞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형근 의원은 신 대북정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의원에게 항의했다. © 연합뉴스 최재구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서 정작 행위자에 해당하는 '북한'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태조사나 분배의 투명성과 같이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현재 통일부가 경공업 원자재 등 경협부분에 대한 집행능력이 부족해 남북경제교류협력협회를 따로 만들었다"며 "인도적 지원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안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구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 의원은 토론 후 답변을 통해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동감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비록 북한이 다른 실체이긴 하나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며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 '정부 차관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토론자들과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과거에는 북한 우표를 소지한 것도 국보법 위반이었지만 이제 주관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남북한의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 북한 인사를 만나는 것은 절대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등 무리 없다. 또 지금 쌀이나 비료와 같은 정부의 대북지원도 20년, 30년 차관으로 하고 있다. 안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고 거취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벌어서 갚는다는 인식을 해야지만 자기 발로 서지 않겠나."

한편, 토론회를 마치며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90년대 중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끄러움만이 아니다"며 "보수세력의 요구까지 끌

어안아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경태 (sneercool)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요골자

1. 북한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한 식량 · 의약품 · 의료장비 · 의복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한다.
2.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정한다.
3. 정부는 국회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4.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5.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으로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기관 급식에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 ▲식량지원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규정한다.
6. 인도적 지원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 · 분배 · 감시될 것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모든 집단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용 가능할 것 ▲직 간접 지원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7.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국회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시 즉시 보고할 것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보고 할 것 ▲국회의 재적과반수 결의로 인도적 지원중단 또는 재개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8. 이 법안은 5년 한시법으로 정한다.



### 정형근 "대북 인도지원법 정기국회서 입법"(종합)

매년 정부예산 1% 규모.여야 합의 가능성 커  
지원액, 현 수준 5~6배인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4일 정부 예산의 1% 정도(올해 기준 1조5천억원 상당)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자신이 마련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

조치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할 것"이라며 "5년 한시법으로 하되, 법안 연장이 필요하다면 평가를 거쳐 시효를 늘리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화영(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 입법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신속하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남북협력기금(1조5천억원 정도)의 20% 안팎인 연 2천500억~3천억원 수준이어서,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큰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 "현재와 같은 대북지원 방식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에 대한 재향군인회 등 보수층의 비판과 관련, "60년대와 70, 80, 90년대, 2000년대의 남북관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대형 간첩사건의 80~90%를 조사한 당사자이지만, 대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북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대북정책은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갖고 당론으로 확정했고, 당내에서도 (의원)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한나라당) 의원도 토론에서 정형근 의원의 입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대북 지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화재단 연구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정부 예산의 1%를 책정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북한에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한 별도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안서'를 발표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 요지 =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해 식량·의약품·의료장비·의복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한다.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북한주민인도적지원특별위원회'가 지원사업을 심의·총괄·조정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을 우선하며, 식량지원을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점차 대체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어야 한다.

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인도적 지원사업, 제4장 인도적 지원사업의 국회보고, 제 5장 보칙 등 총 5개장 23조로 구성하고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둔다.

조선일보



chosun.com 2007-9-4

## 정형근 '대북 인도지원법 정기국회서 입법'

매년 정부예산 1% 규모..여야 합의 가능성 커  
지원액, 2천500억원서 올해 기준 6배 늘어나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4일 정부 예산의 1% 정도(올해 기준 1조5천억원 상당)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자신이 마련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할 것"이라며 "5년 한시법으로 하되, 법안 연장이 필요하면 평가를 거쳐 시효를 늘리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화영(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 입법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신속하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남북협력기금(1조5천억원 정도)의 20% 안팎인 연 2천500억~3천억원 수준이어서,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큰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 "현재와 같은 대북지원 방식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에 대한 재향군인회 등 보수층의 비판과 관련, "60년대와 70, 80, 90년대, 2000년대의 남북관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대형 간첩사건의 80~90%를 조사한 당사자이지만, 대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북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대북정책은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갖고 당론으로 확정했고, 당내에서도 (의원)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한나라당) 의원도 토론에서 정형근 의원의 입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대북 지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화재단 연구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정부 예산의 1%를 책정해 식량·의료·의약품 등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별도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안서'를 발표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 요지 =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해 식량·의약품·의료장비·의복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한다.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북한주민인도적지원특별위원회'가 지원사업을 심의·총괄·조정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을 우선하며, 식량지원을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점차 대체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어야 한다.

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인도적 지원사업, 제4장 인도적 지원사업의 국회보고, 제 5장 보칙 등 총 5개장 23조로 구성하고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둔다./연합

---

## 정형근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안

평화재단 포럼서, "규제법적 성격 강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 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법안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평화재단 제12차 전문가포럼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나라당 신대북정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정형근 의원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제12차 전문가포럼에서 정 의원이 발표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모"하는데 원칙을 두면서, 분배 투명성에 대한 국회의 감시권한을 높이고 있다.

정 의원은 "인도적 지원사업이 분배의 투명성 확보 노력 없이는 더 이상 '피주기' 논란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없다"며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조치법으로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이 법안은 제3조 2항에서 정부의 책무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태 조사를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국회는 재적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 계획성을 개선한다면 남북협력기금 1조 6천억 원의 상당 부분을 인도적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 지적도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제안한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회의 결정권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정형근 의원의 법안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국회에서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토론자들은 정 의원의 법안이 국회의 통제권한이 강화돼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도 "이 법안의 가장 큰 의의는 북의 식량난 해결과 북한의 자립 능력 증진을 정부의 책무로 부여한 것"이라며 "이 법이 추진된다면 한나라당과 밀도 있게 논의해 신속하게 법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인도적 지원 중단)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바람을 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법안이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지원법적 성격보다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는 이 법안의 국회에 대한 보고와 통제 권한, 지원금 회수 등 내용을 거론하며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고 법제정 목적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대북지원의 재원확보나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회의 통제권 행사의 요건이 일부 명확성을 결여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인도적 지원이 '상당부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상당부분'이라는 용어의 내용이나 판단의 주체가 분명치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조치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법'은 긴급한 상황에 임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법의 제정배경과 일치하지 않다"며 "한시법이라면 '임시조치법'보다 '특별법'이 낫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한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이 법안이 정 의원의 법안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면서도 국회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제안을 했다.

박 변호사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중단할 수 있게 하되, 국회가 손쉽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의 법안대로 하면 "국회가 중단시킨 것을 다시 재개시킬 때 재적 과반수가 필요하다면 쉽사리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는 중단할 권리 없이 재적 4분의 1로 다시 재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정 의원의 법안과 자신의 법안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법안은 국가의 책무로 "전년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이종무 소장은 "인도적 지원법안을 만든다면,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해택이 돌아가도록 법안을 통해 실현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로 지난 10년간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대부분 동의한다면서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좋은 지적을 기초로 다듬어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만 된다면 이것은 충분



▲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에서 다양한 의사를 개진해 합의를 도출해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취약계층 우선지원에 대해서는 "300만명의 손을 못쓰고 굶어 죽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충분한 거치기간을 유예해주면서 유상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한나라당 정형근 위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70여명이 참석해 3시간 반 가량 토론이 진행됐다.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

**프리존 뉴스**

www.freezonenews.com

2007-09-04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4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대북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프리존뉴스

정형근 "대북 인도지원법 정기국회서 입법할 것"  
"신대북정책, 당내 한두 명 제외(?)하고 모두 지지"

최근 친북성향의 신(新)대북정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에는 정부예산의 1%(1조 5천억·2007년 기준)를 대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4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주최한 ‘대북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대북지원 방식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신대북정책’에 대한 우파진영의 비판에 대해서는 “60년대와 70·80·90년대, 2000년대의 남북관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대형 간첩사건의 80~90%를 조사한 당사자지만 대북 환경 변화 속에서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대북정책은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갖고 당론으로 확정했고, 당내에서도 (의원)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의화 의원은 대북지원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대북 지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자 “비판과 반발은 일부 냉전 수구적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우파진영을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칼럼에서 “평화비전 안에는 북한 극빈층에게 쌀을 무상으로 지원해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해 경협을 활성화·과주·철원 등에 ‘대북경제특구’를 조성, 신(新)경의고속도로, 북한의 방송·신문 전면 개방 등의 내용이 있다”면서 신대북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정 의원은 그동안 우파 성향의 한나라당 내에서 고진화·배일도·전재화·이재오·권오을 의원 등과 더불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지난 달 15일에는 6.15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이를 예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평화재단과 정형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비롯,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김성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박종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최철영 대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13차 전문가포럼



내일신문 2007-10-10

### 국방장관회담서 '군축'도 논의하나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추진 합의  
평화체제 구축 위해 군비통제 필요  
정부 '군비통제기구' 구성도 촉각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제2차 국방방관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차수로는 2차에 해당하지만 2000년 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과는 국내외 정세가 질적으로 달라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군사회담 걸림돌, 정상 수준에서 정리 = 1차 회담은 남북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대했지만 불과 2년 뒤인 2002년 서해교전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을 정도로 '만남' 자체가 성과였다.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한 안전보장 이외에 별다른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후속회담에 해당하는 장성급회담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2차 국방장관 회담은 '10·4 남북정상선언'과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국내외적 상황을 기반으로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선언을 통해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한다는 내용의 원칙적이긴 하지만 군사적 신뢰구축에는 합의했다.

여기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고 3통(통행·통신·통관)과 열차상 시개통 등 경제협력사업에서의 군사적 보장조치도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됐다. 1차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문제를 정상 수준에서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평화체제 추진방식, 북한도 동의 = 정상선언은 '한국전쟁의 종료'라는 남북이 당사자인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에서 새로운 인식틀을 제시했다.

중국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에 함축돼 있듯 남북을 당사자 인정했다는 측면이 첫 번째다.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국제법적 굴레를

벗게 됐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절차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0일 오후 열리는 평화재단 주최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종래 ‘한국과 이미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고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완성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북한의 이러한 평화방정식은 일단 공식적으로 철회되고 ‘종전선언-관련국간 평화협정’이라는 우리 정부의 추진방식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똑같은 단어라도 1차와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의 용례는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비통제’가 포괄하는 개념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군비통제는 실질적 차원의 평화장치 노력” = ‘군비통제(arms control)’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군축 또는 군비축소, 군비제한, 무장해제, 신뢰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비춰보면 무기의 감축 보다는 위협의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하며 긴장완화, 전쟁예방, 군비경쟁 중단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체제가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하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군비통제 역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기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을 제도적 평화장치라고 한다면 군비통제는 실질적 차원의 평화장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 목적은 같지만 수단은 다를 수 있다.

제도적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은 군비통제 노력의 성과에 의해 안정성을 보장받고 군비통제 노력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의해 진행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인 구축 지표는 군비통제 노력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2차 국방장관회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료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현 단계의 과제 속에서 의제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선언에 앞서 경계선 획정, 비무장지대 관리, 종전관리기구 구성·활동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들이 아닌 만큼 6자회담의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국제적인 수준과 병행하는 남북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군 역할과 위상도 재정립해야” = 국군의 역할과 목표도 변화되어야 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한국은 지난 50여년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단일한 국방목표에 몰두한 나머지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는 등 다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간과했다고 비판하는 등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비공개로 청와대에 보고한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은 ‘군비통제기구’ 설치를 거론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평화체제 준비단계의 추진 전략으로 제시된 ‘군비통제기구’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남북 군사관

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협상을 준비하는 범정부적인 기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mailto:syheo@naeil.com)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Voiceofpeople 2007-10-10

## 국방연구원 백승주 "北, 평화체제 과정에서 국지도발 가능성" 평화재단 포럼서 "북미 직접대화 기회 증대키 위해" 주장

북한이 휴전협정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국지도발을 주요한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 ©민중의소리

10일 평화재단과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공동주최로 열린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 포럼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휴전협정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북한은 휴전협정의 기능정지를 기정사실화해 북미평화 협정 체결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평화협정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북미 직접 대화의 기회를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국지도발 자행 빈도를 늘여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팀장은 그 근거로 "한미 양측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4자회담을 재의하기 직전에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한해 공동경비구역에 병력을 투입한 바 있으며,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1999년 9월 해상경계선을 선언한 바 있다"고 제시

했다.

백 팀장은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기정사실화 해 북한이 의도하는 북미평화체제 체결을 중심으로 한 신평화체제 수립을 경계하면서 국민의 안보적 불안심리 증대를 억제하는 확고한 과도기

정전관리기구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팀장은 아울러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미동맹은 '강화지향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팀장은 "북측이 한미동맹 관계를 장애요인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북미관계 정상화, 북미 간 적대관계가 해소돼 초보적 수준의 안보협력이 모색될 경우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기자bjh@voiceofpeople.org](mailto:bjh@voiceofpeople.org)

---

**ch**sun.com 2007-10-10

## "軍, 과도기적 `평화관리 능력' 확보해야"

‘전환기 한국군 위상·역할’ 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과도기적 평화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박사는 10일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평화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즈음한 한국군의 대비’라는 발제문을 통해 “휴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보적 불안정 상황에 대처하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백 박사는 “우리의 정책적 노력과 기대와는 관계없이 과도 기간에는 필연적으로 군사관계를 규제하는 정전협정의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이 과도기에 발생하는 군사관계의 불안정성을 활용해 국지도발을 주요한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체제에서 ‘한반도평화관리기구’를 만들어 비무장지대를 관리해야 한다며 평화관리기구의 주체로 남북한이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기존 정전위원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이 같은 평화관리기구를 포함한 실효적인 보장체제가 중요하며 평화체제 보장주체로 미국, 미.중, 미.일.중.러, 6.25 참전 16개국과 중.러, 동북아 안보협의체에 의한 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가운데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일괄 참여하는 미.중에 의한 보장 방안이 법리적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보장 실효성 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백 박사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 건설은 평화체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지키는 수단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첨단,정예화 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 2020’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 발전이 평화체제의 장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간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 백 박사는 “제도적 평화체제 구축은 군비통제 노력의 성과에 의해 안정성을 보장받고 군비통제 노력도 제도적 평화구축 노력의 성과에 달려있다”며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의 상호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가 된 것은 물론, 평화체제 핵심 당사자가 남북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이날 ‘저강도 분쟁과 한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약소국 지위에서 벗어나 ‘평화중급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평화유지활동의 참가를 통해 국제적 위상과 역할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긴급 재난구호와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파병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부대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부대를 사전에 선발, 충분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과거 한국의 약소국 시절처럼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동아시아 전략에 추종하는 형태가 아니라 평화중급국가라고 하는 한국외교의 위상과 지향점에 걸맞게 글로벌차원에서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평화체제시 유엔사 자동해체 안된다"

국방부 이상철 안보TF장 "유엔사, 미국 동북아 전략과 연계"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평화재단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 이상철 현안안보정책TF장(대령).[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국방부 이상철 현안안보정책TF장(대령)은 10일, "많은 사람들이 평화협정이 되면 유엔사가 자동해체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제1회의실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범륜)이 주최한 '전환기 한반도, 한국군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평화체제가 전환되면 유엔사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철 대령은 "유엔사가 단순하게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만 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평화협정 시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해체된다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엔사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한반도 위기 사태 시 유엔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대령은 유엔사가 유엔으로부터 최초 북한 남침을 격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가, 38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봉착하자 "유엔총회에서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을 건설하는 임무를 새로이 부여받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정전관리 임무 외에 이같은 별도의 임무를 유엔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볼 때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을 대체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전적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유엔사는 한반도 전쟁을 억지하는 안전장치로 존속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시키고, 한반도 위기 시 다국적군의 38선 이북 진출을 위해 유엔사를 유지.강화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B.B 벨 한미연합사 겸 유엔사령관도 "유엔사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침략억제와 전투작전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령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관한 한미 고위급 실무회의'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이나 한국은 전작권 전환 문제,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서의 미북관계개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 대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 한국군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군사 질서는 미국, 유엔사와 북한이 주도로 이뤄졌다면,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간의 주도로 한반도 군사 질서가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mailto:mjjung@tongilnews.com)

## 14차 전문가포럼

**한겨레**  
THE HANGYOREH

2007-10-22

### 우리 사상이 세계 평화 ‘씨앗’ 될 수 있을까 평화재단, 24일 학술회의 개최



» 원효, 최제우, 함석헌(왼쪽부터).

원효 화쟁사상 → 갈등의 소통  
최제우 동학사상 → 근대·보편성  
함석헌 씨알사상 → 가치의 총체적 총합  
한국 사상의 세계적 평화사상 가능성 제시

성자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 지혜는 그를 따르는 종교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자신의 사상이 특정인들의 도그마가 되어버리는 것을 성자들이 추호도 원할 리 없다. 지금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갈라져서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 지혜의 샘을 아낌 없이 나눠주고 싶을 것이다.

평화재단이 오는 24일 오후 2~6시 서울 태평로 1가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이란 전문가포럼을 여는 것도 우리의 난제를 푸는 데 성자의 지혜를 썩히지 말고 활용해보기 위함이다. 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은 “세계적인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동북아, 그 안에 자리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깊고 풍성한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민족 역사 속에 존재했던 우리 고유의 평화 사상의 가치를 주목해 세계적인 평화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번에 조명될 평화사상들은 원효의 불교사상과 최제우의 동학사상, 그리고 기독교사상을 대변하는 함석헌 사상이다. 세 발표자의 발표문을 미리 살펴보자.

원효의 ‘화쟁(和靜)과 일심(一心)’에 대해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석근 교수가 발표한다. 원효(617~686)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끊임없이 각축하고 항쟁하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살았다. 원효의 화쟁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 군대를 이 땅에서 축출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전쟁과 살생을 넘어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왔다. 김 교수는 “못 경전의 부분적인 면을 통합해 온갖 물줄기를 한 맛의 진리의 바다로 돌아가게 하고, 불교의 지극한 공변한 뜻을 열어 모든 학파들의 서로 다른 쟁론을 화쟁시킨다”며 원효의 〈열반경중요〉를 인용해 원효의 사상을 설명한다. 그는 화쟁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용어를 ‘소통’으로 본다. 화쟁은 서로 다른 주장들을 모아서 서로 소통시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일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고 마음의 양금은 아주 오래 남을 수 있다”며 “화쟁과 일심은 ‘어제까지 적으로 싸우다 오 늘은 한 지붕 밑에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원효가 제시한 인간 마음의 통일”이라고 밝혔다.

근대 우리나라의 변혁의 물꼬를 텃던 수운 최제우의 동학에 대해선 동학사상을 연구하는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인 박맹수 원광대 교수가 발표한다. 박 교수는 “수운이 말하는 서학이란 천주교만이 아니라 서양학문과 서양문명 전체를 가리키는데, 수운은 서학을 배척하기는커녕 서학이 지닌 근대성과 보편성을 널리 인정했다”며 “다만 그것이 지닌 제국주의적이며 침략주의적인 성격을 극복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에게 알맞으면서 조선의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가장 주체적인 사상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민초들의 열화와 같은 소망을 집대성한 사상적 창조의 결과물이 바로 동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학은 우리의 고유사상이던 풍류도와 대승불교 전통, 유학, 서학 등을 아울렀다”며 “모든 사상과 두루 소통하면서 못 생명을 다 살려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말했다.

함석헌의 사상은 〈함석헌 평전〉의 저자인 김성수 박사가 발표한다. 1947년 “내 생각은 말고 어서 가거라”는 노모의 음성을 들으며 북한을 탈출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어머니와 만아들, 맏딸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둔 함석헌은 일본 식민과 분단과 독재의 아픔을 온몸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김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서구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틴 대제 이후 지배 이념화하고, 정치 제도권과 결합함으로써 일반 씨알과 생활을 함께했던 예수정신의 본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았던 함석헌은 1940년 1년간 일제 감옥에 수감된 동안 노자와 장자를 읽고 노장의 평화사상이 인류 전체의 향상된 질적인 삶을 위해, 물질과 군사력을 앞세운 제국주의나 물량주의를 맹신하는 자본주의 가치들을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전한다. 김 박사는 또 “편식이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편향적 사상이나 편견적인 생각은 인간의 건강하고 총체적인 정신발전을 저해한다”며 “함석헌의 삶과 사상은 민족정신과 세계정신, 동양과 서양,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성과 신앙, 과학과 종교, 세속도시, 즉 종교의 세속화와 신의 도시 등의 가치를 크게 하나로 통일하는 총체적 종합을 추구하려는 데 있었고, 이런 종합적 가치는 곧 한반도의 평화통일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는 필수적 씨앗”이라고 밝혔다. (02)581-0581.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 원효·최제우·함석헌 사상에 평화의 길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어낼 지혜를 우리 민족이 가꾸은 사상속에서 찾으려는 자리가 마련된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외국 사상과 이론에 종속된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반성하고 원효의 화쟁(和靜), 최제우의 동학, 기독교와 노장철학 등을 아우른 함석헌의 씨알사상 등에 내재한 보편적 평화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의 길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석근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미리 공개한 발표문 '화쟁과 일심(一心): 원효사상에서의 평화와 통일'에서 "다투면서 화합한다는 말처럼 화쟁은 각기 다른 주장을 소통시키며 화합을 모색한다"면서 "원효의 화쟁은 적으로 살다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상적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화쟁과 일심은 어제까지 적으로 싸우다 오늘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시한 인간 마음의 통일"이라며 원효의 화쟁사상에서 인간 사회에서 드러나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맹수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는 수운 최제우의 동학사상에서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발견했다.

박 교수는 "동학은 서학이 지닌 근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적인 조선의 학문을 지향했다"며 "동학사상은 제국주의, 침략주의 등 서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조선사람에게 알맞은 사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학은 유불선 삼교사상을 사상적 창조의 기반을 삼고 서학마저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에서 모든 사상과 소통하며 못 생명을 다 살려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했다.

함석헌의 기독교 사상은 '함석헌 평전'의 저자 김성수 박사가 검토했다. 함석헌은 한국인이었고 기독교인이었지만 특정 국가나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함석헌은 전 인류가 하나라는 공동체정신과 보편적 가치만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씨앗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는 한반도에 국한된 남북통일이 아니라 전 인류의 평화 통일과 화합을 꿈꿨다"고 소개했다.

이어 "원효와 수운, 함석헌이 공통으로 남겨준 정신유산은 한 가지 사상이나 철학에 편향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사람과 사물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며 포괄적 이해를 도모한 것"이라며 "편식이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편향적 사상은 건강하고 총체적인 정신발전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 종교신문 2007-11-27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평화재단포럼 개최

“한국의 불교사상과 동학사상, 그리고 기독교사상을 대변하는 원효, 최제우, 함석헌 이 세 분의 사상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모아 지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재단포럼 이사장 법륜 스님의 말이다. 평화재단은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원효·최제우·함석헌 사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구도의 수단'이 된 和靜

### ■ 화쟁(和靜) 일심(一心): 원효사상에서의 평화와 통일

역사적으로 한국 불교가 가장 큰 생명력을 떨쳤던 시대에 원효는 그 밝은 빛 한 가운데 있었다.

때문에 그는 새로운 불교의 첫 장(새벽)을 열어젖힐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불교는 시대와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인도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문명의 공통분모가 되어 있던 시절, 원효는 보편성



◇평화재단포럼이 지난 달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평화와 통일 포럼.



▲ 김석근 교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불교)에 입각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학문과 사상을 구축했다.

신라(주변부 사회)에 살면서도 학문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수출자'가 되었다. 중국을 거쳐 인도에까지 전해진 '십문화쟁론'이 좋은 예라 하겠다. 그 외에 일본과 중국에서 '금강삼매경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원호에게 화쟁은 수많은 경전과 많은 학파의 주장을 이해하는 '학문의 방법'이자 동시에 부처의 참 뜻을 찾아가는 '구도(求道)의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있었다. 화쟁을 가능케 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인 '일심(一心)'을 향해 나아간다는 적극적인 에토스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호에게 '일심'은 처음이자 동시에 끝이며, 근원이자 동시에 목적이었다.

그것을 '여래의 원음', '부처의 뜻', '지혜', '진리' 등으로 달리 표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화쟁에는 거기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의미도 담겨 있다. 이론(異論)이 없지는 않지만, 화쟁은 일차적으로 불교 내부에서의 그것이었다.

원호는 그 범위를 다른 영역(예컨대 유교나 도교 같은 외도)에까지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



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화쟁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를 가진 사상체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철학적인 ‘방법’과 ‘논리’에 가까웠다.

다른 저작에 비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화쟁을 통해 일심으로 나아간다는 구도는, 다른 영역에 응용 혹은 원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자극하고 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화쟁과 일심은 어떤 시사와 함의를 지니고 있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가 남긴 철학과 비전은 때와 장소를 넘어서 빛을 발할 수 있지만, 그로서는 한정된 시공간을 살았을 뿐이다. 좋은 삶든 싫든 간에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얽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화로서의 원효가 아니라 ‘시대의 아들’로서의 원효라 해도 좋겠다.

종교적인 엑스타시만큼인간에 만족주는 것 없어

#### ■ 함석헌 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앞으로의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유기적인 사회, 사회가 되어 미워도 고와도 한데 살 수밖에 없 되었고, 그렇지 못하면 전체가 멸망하게 돼 있  
-함석헌

함석헌에게 선이란 개체와 전체와의 완전한 통 다, 즉 그것은 선에는 너나가 없는 유기체라는 다. 함석헌은 한반도에 국한된 남북통일뿐 아니 전 인류의 평화통일과 화합을 꿈꾼다.

이렇게 함석헌이 평생을 통하여 추구한 남북과 의 평화통일 속에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있다.

여기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번영 복지, 이 모든 가치들이 남북과 동서의 평화통일 속에서 결합된다.



▲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전 체  
게  
다.”

일 이  
말 이  
라

동 서  
들 어

과

함석헌은 역사와 문화의 근본이 하나 됨 즉 통일에 있고, 모든 통일의 근본은 정치보다는 종교 신앙에 있으므로 어떤 문화도 종교로 흥망성쇠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역사적 변동의 원인은 국익을 위주로 하는 정치가 아닌 이타주의를 그 근본으로 하는 포용적 종교에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종교가 배타적이고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한 것은 종교의 본래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함석헌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엑스타시(ecstasy 황홀경)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고, 그 어떤 엑스타시도, 성(性)과 마약을 통한 엑스타시조차도 종교적 엑스타시만큼 인간이란 존재에게 기쁨과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고 느꼈다.

이렇게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는 종교의 근본은 결국 사랑(agape), 자비(大慈大悲), 인(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함석헌은 민주주의나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근본방법으로 마치 친근한 부부관계처럼 무엇보다도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다.

원효, 수운 그리고 함석헌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정신유산은 어느 한 가지 사상이나 철학에 편향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사람과 사물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며 포괄적 이해를 도모한 것이라 생각한다. 편식이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편향적 사상이나 편견적인 생각은 인간의 건강하고 총체적인 정신발전을 저해한다.

함석헌의 삶과 사상은 민족정신과 세계정신, 동양과 서양,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성과 신앙, 과학과 종교, 세속도시 즉 종교의 세속화와 정치의 영화(Spiritualization of Politics) 등의 가치를 하나로 통일하는 총체적 종합을 추구하는데 있었고, 이러한 종합적 가치는 곧 한반도의 평화통일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이루는 소중한 씨앗인 것이다.

정리=김진완 기자 kjwin@segye.com

## "북한은 계획과 시장의 불안정한 동거 관계"

전문가 "돈주와 관료간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 평화재단 주최 '북한경제의 변화실태와 주민들의 삶' 주제 토론회 ©데일리NK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급제가 유명무실화 되었다"면서 "현재 북한의 경제는 플러스 성장은 간신히 유지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담보하지 못한 상태, 이른바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1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재단 주최 포럼에서 양 교수는 "핵심적인 기업 및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인 명령과 강제를 통해 확실하게 장악, 관리하는 한편 여타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가 손을 떼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대해 "시장경제활동을 인정하되,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및 계획 경제 부분이 수취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했다"면서 기업의 계획 외 생산에 대한 국가 납부금과 종합시장의 거래세 등을 예로 들었다.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는 "상인, 운송업 종사자 등과 함께 국가권력이 공생하는 양상이 주민들의 삶에 정착되었다"라며 이것이 "북한의 상업적 자본축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수석연구원은 “돈주와 관료간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으며 안정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부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80년대 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점점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동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제 압박 때문에 북한 경제가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올해 1~4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 비중이 약 24%인 것을 보면 미국의 제재가 있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북한 경제가 어렵게 된 계기는 7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며 교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미선 대학생 인턴기자]



2007-11-01

## 남한, 북한 경제성장 큰 기여

북, 급격한 시장경제 이행 어려워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열려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거시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북한의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의 급격한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북한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1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경제의 변화실태와 주민들의 삶’의 발표문을 통해 “남한의 대북지원(2005년도 통계)은 2억1254만 달러로 이는 북한의 수출액(2005년도 기준) 9억9800만달러의 20%가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약1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식량차관을 더하면 남한의 총 대북지원액은 약3억6254만 달러로 이는 북의 수출을 통한 순수 외화가득액(외화수입)이 1~2억 달러를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남한의 지원은 북에 더 큰 기여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여기에 북한의 전체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8.7%에서 2005년 52.6%로 급증해 북한의 대외경제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당분간 북한은 계획과 시장의 불안정한 동거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북한경제의 변화상을 정확하게 읽고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향후 대북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현실인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재단은 창립3주년을 기념해 1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경중 기자)

## 北인권 `정치범수용소 해체` 시급한 과제 [전문가]

[연합] 북한인권 문제 중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금시설의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반인간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라고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21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북한 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에게 수용소 실상을 적극 알려 국제 이슈화하고 국제적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내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당국에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면서 "북한법규에 규정된 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정치범들을 교정시설에 수감할 것과 정치범들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의 관할 하에 혁명화 구역과 완전통제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관리소 등 5곳에 약 15만~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규정 위반자 등을 수용하는 구류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리를 삭발시킨 뒤 무차별적인 구타를 하고, 식사 시간과 대소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무릎을 꿇리고 있다"며 "구류장은 정치범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공포 시설"이라고 지적 말했다.

그는 또 "경제난으로 인한 구금시설 내에서의 기아와 질병 등 경제적 문제를 개선하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북한 사법관리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 “北 수용소는 폭력과 살인이 합법화 된 공간”

전문가 “정치범 수용소 약 60% 죄 없는 사람”



▲ 평화재단은 21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데일리NK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21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보위원들의 자의적 판단과 감 정상태에 따른 처벌이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폭력과 살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수용소 해체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2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주최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를 맡아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매우 절박하고 반인간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북한인권 문제에 포괄해서 다룰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북한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의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제 낙태와 같은 인권유린에 관한 증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여성들은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수용소 생활 몇 달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살이 빠지고 남성과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구금시설에는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적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정치범수용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은 ‘연좌제’의 적용”이라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약 60%정도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정치범들의 가족이나 친지들로서 연좌제를 적용 받고 수감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방안에 대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를 위해 독일사례를 인용하여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을 주장 했다.

북한 완전통제구역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는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한 수용소에 있는 20만 명의 수용자들 생명보다 중시 여기는지 묻고 싶다”며 “한국 정부가 생명을 중시 여긴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했다.

평화재단 법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반복적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남북화해를 앞세워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해왔던 것에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탈피해야 한다”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남북화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북한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미선 대학생 인턴기자]

---

 **ATN** 올댓뉴스 2007-11-23

## 정치범수용소 인권유린 실태 고발

탈북자 신동혁씨 “날 때부터 죄수”증언

‘도주할 수 없다,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 시 즉각 신고한다’ 등 10가지 규범에 어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즉시 총살한다는 정치범수용소(이하 관리소)의 10대법. 14호 관리소(평남 개천) 완전통제구역출신 탈북자 신동혁씨는 21일 평화재단 주최로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관리소 10대 규범 및 관리소 생활을 증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리소에서 태어나 24년을 살다 탈북한 신동혁씨의 생생한 증언으로 토론의 현실감이 한층 더해졌다.

신동혁씨는 “수용소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내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 그냥 여기 살아야하고 항상 죄책감 속에서 아무 잘못 없이 매를 맞아도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다”며 관리소에서의 생활을 회고했다.





▲ 평화재단 사진 제공



▲ 탈북자 신동혁씨

그는 “한국에서 5살은 철없는 아이다. 하지만 관리소의 5살짜리 아이에겐 웃음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구로 맞으며 험하게 자라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채 태어난 날로부터 죄수로 등록된 지난 삶을 회고했다. 점수를 많이 얻어 ‘표창결혼’이 허락

된 자만 결혼을 할 수 있고, 산모는 출산 전날까지 노동을 하며 출생신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유린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조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 북한이 국제인권법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만든 법규만큼은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김 연구위원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도주자, 도주 기도자, 반항자 등에 대해 예외 없는 처형 강행과 수용자의 60%가 정치범의 가족 친지 등 연좌제적용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촉구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병로(서울대) 교수는 “UN을 통한 접근이 미국중심이 되면 정치적 색깔 뉘 수도 있으니 아시아 인권단체를 만들어 국제적인 여론 형성 및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정 수습기자 power9182@allthatnews.co.kr)



## 17차 전문가포럼



2007-11-28

### 토론회 `北` 붉은자본가` 등장 예고`

[연합] '토대와 성분, 돈앞에 흔들려' 북한에서는 과거부터 존재한 사회정치적 생활의 불평등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개인, 집단의 자본 축적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본가에 해당하는 '붉은 자본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김병욱씨가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병욱씨는 28일 평화재단이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토대와 성분' 토론회에서 "일부 북한 주민은 사회, 정치생활 및 물질생활 과정에서 축적한 부를 밑천으로 고용노력을 채용해 사경제 활동을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 사회 환경에서 붉은 자본가는 음성적으로 핵심군중 뿐 아니라 여타 군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붉은 자본가의 음성적인 등장 가능성은 체제의 운영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 협력단체의 소유가 확대된 것이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전 헌법은 사회, 협동단체가 농기구나 고깃배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헌법은 트랙터 등 농기계와 다른 용도의 선박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또 "7.1경제조치와 종합시장 개설로 북한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며 "일부 계층은 핵심적 인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일부 계층은 해외 친척들과 연계 하에 시장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에 앞서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북한 사회를 보면 북한이 주창한 구호나 목표와는 전혀 다른, 남녀불평등이나 독재 등 봉건사회의 신분제가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조선시대 말기 신분제가 흔들리던 것처럼 최근 들어 토대와 성분이라는 것이 돈 앞에 흔들리는 북한의 '또 다른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北`붉은자본가` 등장 예고"

북한에서는 과거부터 존재한 사회정치적 생활의 불평등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개인, 집단의 자본 축적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본가에 해당하는 '붉은 자본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김병욱씨가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병욱씨는 28일 평화재단이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토대와 성분' 토론회에서 "일부 북한 주민은 사회, 정치생활 및 물질생활 과정에서 축적한 부를 밑천으로 고용노력을 채용해 사경제 활동을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 사회 환경에서 붉은 자본가는 음성적으로 핵심군중 뿐 아니라 여타 군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붉은 자본가의 음성적인 등장 가능성은 체제의 운영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 협력단체의 소유가 확대된 것이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전 헌법은 사회, 협동단체가 농기구나 고깃배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헌법은 트랙터 등 농기계와 다른 용도의 선박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또 "7.1경제조치와 종합시장 개설로 북한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며 "일부 계층은 핵심적 인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일부 계층은 해외 친척들과 연계 하에 시장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에 앞서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북한 사회를 보면 북한이 주창한 구호나 목표와는 전혀 다른, 남녀불평등이나 독재 등 봉건사회의 신분제가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조선시대 말기 신분제가 흔들리던 것처럼 최근 들어 토대와 성분이라는 것이 돈 앞에 흔들리는 북한의 '또 다른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2007-11-28

## "北 '토대-성분'도 돈앞에 흔들...조선시대 말기 모습"

"체제 유지 위협"...北 '붉은 자본가' 등장

28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토대와 성분' 주제의 전문가포럼에서 법륜 이사는 "최근 토대와 성분이라는 것도 돈 앞에 흔들리는 조선시대 말기 신분사회의 모습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신분제도도 존재하는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며 "북한의 봉건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는 남북간 교류협력은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김병욱씨는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부 주민은 축적한 부를 밑천으로 고용을 하는 등 사(私)경제 활동을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자본가에 해당하는 '붉은 자본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같은 환경에서 붉은 자본가는 핵심군중뿐 아니라 여타 군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 28일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평화재단은 제17차 전문가 포럼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토대와 성분'을 열었다.

“북은 자본가의 음성적인 등장 가능성은 지금의 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계급적 성분과 출신집안을 따지는 이른바 '토대와 성분'은 학교, 직장, 결혼 상대, 당원 자격 등 삶의 전반적인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탈북자에게 왜 탈북했느냐고 물어보면 토대와 성분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든다”며 “토대와 성분은 북한 체제의 기본을 구성하는 근간인 동시에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김영립 씨는 “북한에서 간부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촌에서 8촌까지의 성분을 3~10인 이상 실명 확인을 받아 토대와 성분이 양호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부모가 간부로 등용되면 세습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증언했다.

김 씨는 “간부들은 명절 때마다 김정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신분에 따라 선물의 수준이 다르다”며 “간부들은 TV, 녹음기, 심지어 외화달러까지 받는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장영철 씨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스스로 결정하는데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며 “그 이유는 북한 체제가 주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미선 대학생 인턴기자)

## 18차 전문가포럼

**매일경제** 2007-12-12

"남북 서해안 군비통제 논의 착수해야"[포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통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우회적 해법에 대한 남한 내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해안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 간에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이 12일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날 평화재단이 주최한 제18차 전문가포럼에서 "북한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주직항로나 공동어로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어선이 무장한 채 공동어로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우리 어선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제하 주제발표에서 "해주지역은 구축함, 순양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하프미사일 등 해안방어지대 성격이 강하다"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내에서 상선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된 이후 항구적인 군사적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북측 해안포의 후방재배치와 한국의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이 NLL 문제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며 "그런 점에서 이 구상은 NLL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NLL 문제의 해결 및 새로운 서해 해상불가침경계선 확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북 협상에서 말뿐인 평화는 형식에 불과”

전문가들 "서해평화지대, NLL 해법 될 수 없다"

12일 서해 NLL 문제를 다룬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 (서해북방한계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적합한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 포럼에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KIDA) 연구위원은 “공동어로구역은 NLL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우회적인 구상이었지만 오히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남북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해평화지대와 관련된 합의 사안은 주로 ‘경협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것”이라며



▲ 12일 오후 평화재단은 서울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NLL관련 제 18차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데일리NK

“이를 통해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인 평화구축보다는 경협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남북 평화구축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공동어로구역이 북한주민에게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3단계 추진방안을 보면 1단계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후 2단계로 ‘공동어로 개시 및 어장조사’를 실시하는데, 경제적인 목적이라면 어장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문제를 불완전하게 합의한 채, 군사의 영역에 있는 군사장관회담이나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NLL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실장은 “궁극적으로 서해 NLL문제는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 한반도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단계에서나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옥임 선문대 유엔국제학 교수도 “(북한과의)협상에 있어 검증가능한 평화가 아니면 그것은 말뿐인 형식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선 대학생 인턴기자]

## "남북 서해안 군비통제 논의 착수해야"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을 통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우회적 해법에 대한 남한 내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해안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 간에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이 12일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날 평화재단이 주최한 제18차 전문가포럼에서 "북한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직접

적이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주직항로나 공동어로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어선이 무장한 채 공동어로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우리 어선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제하 주제발표에서 "해주지역은 구축함, 순양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하프미사일 등 해안방어지대 성격이 강하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서 상선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된 이후 항구적인 군사적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북측 해안포의 후방재배치와 한국의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이 NLL 문제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며 "그런 점에서 이 구상은 NLL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NLL 문제의 해결 및 새로운 서해 해상불가침경계선 확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



## 평화재단 6.19 국제심포지엄

국내유일 민영 뉴스통신사  
**NEWSIS** 2007-06-19

###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열려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준비한다'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속에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스)

평화재단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13 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화재단은 "2.13 합의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리라고 예상된 북미관계가 4개월 동안 BDA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이제야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북미관계가 나아지면 역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 또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재단은 이어 "현재의 북한 상황을 진단해보고 그 변화의 가능성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동북아시아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피터 백 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 학교 교수, 이즈미 하지메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

실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에서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정법부교수(가운데)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또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재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7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에서 외국인 참석자가 통역기를 통해 발표자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뉴스시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mailto:mkbae@newsis.com)

## <평화재단 '북한체제 변화 전망' 토론 요지>

“北, 국가전략 상층으로 악순환..점진적 와해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민간 연구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19일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재의 북한 상황을 진단하고 변화의 가능성과 북한의 정책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외 발표자들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개발은 경제회생 노력과 상충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체제의 변화는 조기붕괴나 장기준속보다는 점진적 와해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교수 = 북한의 3대 전략은 선군정치와 경제회생 노력, 핵개발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전략들은 상충됨에 따라 북한체제 전체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전면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해 정치생존 전략으로 선군정치를 택했으며, 국제적인 생존전략이자 내부위기 억제수단으로 핵개발을 진행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본 때 2002년 7.1조치로 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나 7.1조치는 개방이 뒤따르지 않은 채 이뤄져 낡은 시설과 낡은 기술, 원자재의 절대 부족은 시장수요를 전혀 만족시킬 수 없었다.

개방은 평화적 환경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선군정치와 핵개발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3대 전략은 상충된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일본 시즈오카(静岡)현립대 교수 = 북한은 현 시점에서 당분간은 대미 '핵 억지'의 강화보다는 김정일 독재권력의 유지.강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거래 모색, 남북관계 진전, 경제 재건 등 다른 과제에 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북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민주화의 길을 명확하게 걸을 리도 없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아도,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감행하지 않는다면 주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공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국은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보유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을 항상 염려하며, 증가하는 탈북자의 대응에 고심하는 것을 어쩔 수 없게 여기게 될 것이다. 북한은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북한체제의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기붕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상정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대량 탈출 사태나 민중봉기,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획기적인 개혁·개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북한 체제의 약화와 장기적인 몰락은 불가피해, 북한체제가 점진적인 해체 과정을 겪는다는 '점진적 와해론'이 설득력있다.

북한 핵문제 해법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 리비아 방식과 정권교체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 남아공 방식, 또 후계정권 등장에 의한 해결 등의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북한 체제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주민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대량 탈북에 대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체제혼란 속 북한군의 도발이나 북한에 신경권이 등장할 가능성도 상정해야 한다.

▲피터 백 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장 = 2.13합의 이후의 난제로는 비핵화 감시, 북미관계의 정상화 여부, 일본의 납치문제 집착, 대북지원에서 미국 의회 반발이나 일본의 거부 그리고 한국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문제, 경수로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화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나 재래식 무기와 같은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지속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비핵화와 연계돼 다루어져선 안된다. 이들 문제로 인해 핵위기 해결이 방해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단계적인 협상 과정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통일신문**

The Tongil Shinmun 2007-6-26

## [지상중계]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 변화를 내다본다

체제안전·경제회생 갈림길 ... 대규모 경제지원책 마련 - 북핵 초기조치 이행의 걸림돌이었던 BDA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북한의 조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핵시설 폐쇄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한적이거나 개혁·개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평화재단은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19일 프레스센터서 개최해 북핵과 북한체제와의 상관관계와 향후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 피터 백(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6자 회담의 모든 참가국이 2.13합의에 동의하였지만, 여전히 불신과 경계심이 존재한다. 본 사안의 복잡성과 민감성 이외에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측면들이 있다는 사실은 2.13합의가 여전히 빈약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북한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충분한 근거가 많다. 과정에서 비핵화 모니터링의 어려움, 북미관계 정상화의 어려움,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한 집착, 대북지원에서 미국의회의 반발이나 일본의 거부 그리고 한국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문제, 경수로 등이 예상되는 어려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이 자국의 핵 관련 협

상카드를 포기하는 상황 하에서만 완전한 관계정상화 및 완전한 안전보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얼마나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협상 과정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비록 남은 단계들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여타 당사국들은 “행동대 행동(Action for Action)” 원칙을 포함하는 진지하고 상세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결과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정권 안전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합의에는 단계적 조치가 신중히 규정되고, 이행 과정이 항상 모니터링 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 화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나 재래식 무기와 같은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와 연계되어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핵위기 해결이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

\*\* 조호길(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교수) - 20세기 8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는 쇠퇴일로로 걷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이 후에는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경제위기는 각종 물자부족으로 인한 제2경제의 만연과 중앙정부통제력의 약화 등 정치통제력의 위기 또는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전면적인 경제위기는 통치정당성과 통치력을 위협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북한의 경제위기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급격히 하강시켰고 심지어는 생존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정당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재, 도와 군은 사실상 독립적인 경제운영 단위로 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계획 내의 원자재는 계획의 10~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도와 군에서는 자체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각 군 단위들은 독자적으로 대외무역, 외화벌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계획경제가 약화된 결과임과 동시에 계획경제를 더욱 마비시켜 중앙정부의 통치 정당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합법, 혹은 불법적인 사적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제2경제’는 각종 물자의 부족현상을 다소 완화하여 일반대중들의 불만과 정치적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제2경제의 만연은 대중들의 ‘탈 정치화’ 등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정치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듯 하다. 8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개신 내지 위기탈출을 위해 여러 가지 출로를 시도해왔으나 전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7·1조치는 개방의 결여로 인해 대량의 자금, 기술 시장의 공급이 결여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 욕구를 이용해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 이즈미 하지메(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교수) -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주화’가 실현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이다. 북한은 현시점에서 당분간은 대미 핵 억제력의 강화보다는 다른 과제에 임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과의 거래의 모색, 남북관계의 진전, 경제의 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김정일 독재권력의 유지·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북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북한의 정책 변화는, 지극히 한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또한 한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 미사일 개발 등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그 한편에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감행 하지 않는다면 주변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북한과의 공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북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

으로서 계속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주변 제국은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보유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을 항상 염려하며, 증가하는 탈북자의 대응에 고심하는 것을 어쩔 수 없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국가연합 형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이다. 만일 한국이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우선한 나머지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국가연합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구도는 일변하게 될 수도 있다.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전쟁이나 대량살상 무기를 통한 협박을 되풀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원조나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벼랑끝 전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현실적인 전략은 체제안전과 경제회생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와 관련하여 ‘조기붕괴’에서 ‘장기존속’, 그리고 ‘점진와해’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기 붕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으나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조기붕괴론이 상정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나 민중봉기나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 체제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첫째, 주민생존 위한 인도적 지원, 둘째 대량탈북에 대비한 시설확충 및 국제난민 회의, 셋째 체제혼란 속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북한에 신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정부의 외교적으로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외교적 승인과 북핵 포기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승인 외에 마샬플랜적인 대규모 경제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

**국정브리핑** 대한민국정책포털 2007-06-19

## 피터 벡 “2·13 합의, 북한 비핵화 유일한 전략”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피터 벡(Peter Beck) 국제위기관리기구(ICG) 동아시아사무소장은 19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단계적인 협상 과정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화해 필수 사안

벡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2·13 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주제발표를 통해 “2·13 합의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바람직한 방향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벡 소장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 화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면서 “초기 단계 이행이



재단법인 평화재단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 회의실에서 '2·13 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장명섭> (국정브리핑)

지연됐지만 북한이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한 대가로 얻는 이득을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에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협상 결과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정권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반대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조치가 신중하게 규정되고, 이행과정이 항상 모니터링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 침해나 재래식 무기와 같은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와 연계되어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핵 위기 해결이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윤여준 전 소장 "북한 대외문제에 초점 맞춰 변화 유도해야"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도 심포지엄 기조발제를 통해 "2·13 합의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정치, 군사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소장은 "BDA 문제가 몇 달 지연되는 과정에서 회의론도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북미 북일 관계 개선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6자간의 협의를 규정한 2·13합의는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분석했다.

윤 전 소장은 또 2·13 합의의 이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진입으로 이어진다면, 북한 체제변화로 집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핵문제 해결과정, 후계체제 구성, 시민사회 형성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체제의 큰 변화 없이 시장경제로의 이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소장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압박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 더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면서 "북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확산금지 약속을 지킨다든지, 국제규범을 존중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등장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체제변화와 관련,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의 단결권과 선택에 기초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성렬 박사 "북한체제 위기 대비책 마련 필요"

한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심포지엄 발표를 통해 “북한 체제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기붕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나 민중봉기, 군사 쿠데타 등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점진외해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점진외해론’에 대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해체과정을 겪는다고 보는 점에서 조기붕괴론과 다르며, 내부모순으로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기존속론과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행태로든 북한 체제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 대량탈북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국제난민회의, 체제혼란 속 북한군 도발 대비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한 조호길(曹虎吉)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정법부교수는 “북한은 국제생존전략으로 핵개발, 경제위기 탈출수단으로 7.1조치, 내부 위기 억제수단으로 선군정치를 이용하고 있지만 세 가지 전략이 상호 모순되고 있다”며 북한 체제의 변화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7.1조치는 개혁 개방을 전제로 하는데, 핵개발은 이와 상충되며 선군정치도 개방과 상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 元)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도 미국과의 관계개선, 남북관계 진전, 경제력 재건 등 북한의 정책변화는 지극히 한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즈미 교수는 향후 몇 년 사이에 북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거나 민주화의 길을 명확하게 걷기 시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2007-06-19

## “北, 정상적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국가”

### 평화재단,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국제심포지엄 개최

마카오 방코 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 송금 계좌문제 해결로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예견하며 대비하는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이 주최한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주제의 심포지엄에는 한·미·일·학자들이 발제 및 토론



자로 참석해 최근 분위기와 맞물려 국제회의장을 찾은 300여명의 청중들과 함께 깊은 관심을 지아냈다.



▲ 평화재단이 주최한 '2.13합의 이후를 내다본 북한체제의 변화와 준비' 국제심포지엄. 이 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청중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진지하고 뜨거웠다 ©konas.net

조호길(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정법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 중앙통신 내용을 인용, "최근 몇 년 내 북한은 지난 1950년 6·25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선군정치', '7.1조치', '핵 개발' 등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시기의 위기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경제면에서는 7.1조치와 대외적 측면에서는 핵을 개발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상충되어 쉽사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예견했다.

조 교수는 중국의 교수로서 북한사회를 수차 드나들면서 본 자신의 느낌과 더불어 "북한사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적 국가기준으로 볼 수 없다" 며 이념적 측면에서 주체사상을 언급했다.

즉 북한사회는 주체사상 논리에 입각해서 인간자체를 유기적 공동체로 봄으로 인해 수령은 목이고 인민대중은 팔다리에 불과해 수령만이 최고라는 관념으로 김정일은 곧 '천하제일 대장군', '전 인류의 태양',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받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이 이런 주체이념과 김정일 중심의 권력구조 라고 추가했다.

피터 백 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은 북한사회의 변화가능성 등에 대해 "김정일 사후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지만 급변상태로 여길 만큼 급격히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일 이후의 후계 체제는 김정남 등 아들보다는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유력할 수 있지만 군부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호길 교수 ©konas.net

피터 벅 소장은 이어 "북한에 가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계자들과 얘기하면서 (농담으로)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제 놈입니다' 하고 말하면 깜짝 놀라면서 '미국인입니다' 하고 (정정해서) 말해주더라"고 해 북한사회가 미국(인)을 보는 시각이 양면적임을 느끼게 했다.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그는 또 '북한사회가 급변상황으로 붕괴시 미국은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보느냐' 는 질문에 "부시 정부는 지난 5년 간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권교체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라크 전의 실패 등으로 이제는 포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북의 급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번 심포지엄을 끝으로 한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는 피터 벡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선과 분열 등으로 대립되고 있는 여야 정당을 염두에 둔 듯 "현재의 정당 분위기로 북에 대해 주도권을 쥌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는 뼈 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 다케사다 히데시 연구관 ©kona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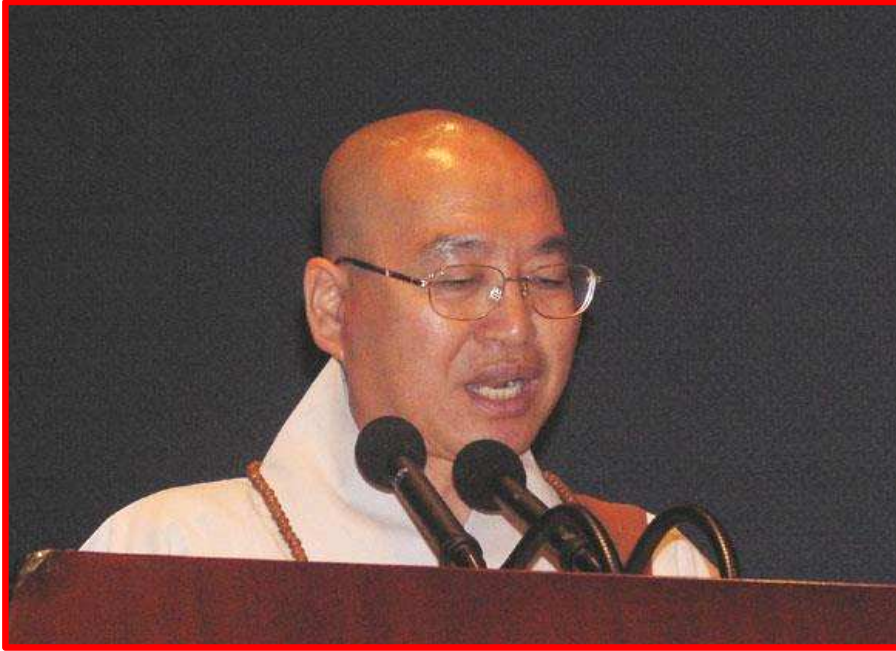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미 동부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은 본토방위를 생각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동맹의 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라도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는 계산을 북한은 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전략"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 핵무기는 '한국사회의 북한화, 주한미군철수, 평화조약체결, 핵무기로 미국 개입 저지'의 세가지 기본방향 아래 '한국의 전투의욕을 떨어뜨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미군과 접전을 벌일 조건을 없애서 미국의 재개입의 길을 막고, 한반도를 통일한다' 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에는 전략으로서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의 대량파괴 핵무기 개발문제는 일본의 방위문제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본토방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범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핵 개발이후 2.13합의와 이어 북핵팩기, 종전 선언, 평화협정, 북·일, 북·미 수교,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은 일괄 타결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는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도 함께 그리 고자 한다" 고 말했다.

범륜 이사장은 이어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안보문제 하나로 지난 20년간 정상적인 국가행위가 중단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대응해왔다.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안보



▲ 법륜 이사장 ©konas.net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과연 북한이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고 말해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시각을 요구하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

OhmyNews  2007-06-20  
모든 시민은 기자다

## "북한 붕괴론은 피상적 관찰이었다"

평화재단 주최 '북한체제 변화' 심포지엄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화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이다. 전자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이고, 후자는 민주정권이 탄생한다는 전체에서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불안정이 초래돼 내전이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19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주최한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정세와 한국대응’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즈미 하지메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교 교수가 펼친 주장이다.

이즈미 하지메 교수는 “민주화가 됐든 붕괴가 됐든 어느 한쪽의 가능성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북한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현시점에서 대미 핵억제력의 강화보다는 다른 과제에 임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며 “주로 미국과의 거래모색, 남북한 관계 진전, 경제재건 등 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향후 몇 년 사이에 북한이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화



▲ 평화재단 '북한체제 변화' 심포지엄. © 김철관 (오마이뉴스)

길을 명확히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등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또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감행하지 않는다면 주변 제국들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공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 제국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을 항상 염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체제의 전환 가능성과 한국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산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은 기본적 치안능력과 자국영토와 국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재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강력한 주민억압기구가 존재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적 정치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체제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 이상, 전략적 결단 외에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체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대비책으로 ▲주민생존을 위한 인도적 차원 자원 제공 ▲대량 탈북에 대비한 시설확충 및 난민 국제회의 주도 ▲체제혼란 속 북한군의 도발 대비 등을 제시했다.

북한 신정권 출범 시 정부대비책으로 ▲출범과 승인의 문제 ▲외교적 승인 고려 ▲경제원조 문제 (북한의 마셜플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북한이 전환을 선택하는 길 이외에는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이룰 수 있는 묘책이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기득권을 주장하는 군부 목소리 때문에 핵무기의 포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회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체제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북한군부가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가정보다는 경제난, 사회 불안정, 정치적 불안 등 총체적 위기국면이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심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대북지원을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며 "하나는 북한의 정치사회 변화가 하루 빨리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탈김정일 시대에 북한 복구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들과 관련해 "그들은 누구보다도 북한실정을 잘 알고 있다"며 "북과 남을 잇는 다리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호소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과거 사회주의 붕괴나 북한 김일성 사망 시 국내외적으로 제기됐던 북한 붕괴론은 북한 체제의 내적특성을 간과한 피상적 관찰이었다"며 "북한 붕괴론이 북한사회에 대한 단선적 이해에 바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꽉 메운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주한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이 후원했다.

OhmyNews 2007-06-20  
모든 시민은 기자다

## 북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기여 평화재단 주최 북한체제 변화 심포지엄 개최



▲ 북한체제 변화 심포지엄. © 김철관 (오마이뉴스)

2·13합의가 이행되면 동아시아 안보정세와 북한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은 뭘까.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로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준비'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제1마당 '북한의 체제변화의 가능성과 북한의 선택'과 관련해 발제를 한 피터 백 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은 2·13합의 이행에 대해 "미국과 여타 당사국들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포함하는 진지하고 상세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결과를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정권의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인권침해나 재래식 무기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된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와 연계돼 다루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피터 백 소장은 북한이 또 한번 핵실험을 하거나 플루토늄 또는 HEU생산을 재개해 2.13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와 관련해 "경제제재를 재개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체제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한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정법부 교수는 "북한은 위기탈출을 위해 일련의 전략적 선택을 취했다"면서 "선군정치, 7·1조치, 핵개발 등 3대 전략이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3대전략이 서로 상충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의 비대칭억제전략으로서의 핵개발은 열세에 처한 일방이 강점을 피하고 그 약점을 공격해 강적을 억제하는 전략"이라며 "북핵 전략은 비대칭억제전략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경제위기탈출수단과 내부위기 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사찰을 받으면 서도 비밀리에 핵보유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북한은 은폐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초기 이행조치와 후속조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은 "북한의 통일정책과 관련해 핵전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대량파괴 핵무기 개발문제는 일본의 방위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본토방위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국가경제의 시장의존도 증가와 시장부문의 확대로 폐쇄체제의 효용성 저하와 체제유지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심화로 인한 국가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양상 심화와 토대와 성분 중심의 사회구조 근간이 동요될 것"이라며 "당국의 새로운 통제와 강압정책 실행으로 고비용의 체제유지비용 지불과 체제저항 세력이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곧바로 제2마당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가 아닌 우호적 태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선의의 비판을 해야 한다"며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평화재단([www.tpf.or.kr](http://www.tpf.or.kr))은 민간재단으로 지난 2004년 10월 25일 출범했다.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결성된 단체다.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세상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백낙청 (재)시민방송 이사장,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박세

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지도위원이다. 강원용 평화포럼 이사장,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 연합 상임대표, 오현 백담사 회주 등은 고문으로 참가하고 있다. 김홍신 소설가, 윤명철 동국대 교양 교육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북한체제 변화 심포지엄. © 김철관 (오마이뉴스)



▲ 북한체제 변화 심포지엄. © 김철관 (오마이뉴스)



## “한국, 김정일 이후의 북한 준비해야” “탈북자들이 한반도 통일의 가교역할 해야”

민간 연구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범륜)은 19일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학자들은 북한체제의 변화는 조기붕괴나 장기준속보다는 ‘점진적 와해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래 자료는 이날 토론에 나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前 호주국립대 교수)의 발제 자료 요약이다. <편집자 주>



▲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 프리존뉴스

일반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면 대량탈북 관리나 긴급식량제공을 위한 조치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무런 조건이나 감시도 없이 지속한다는 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대북 지원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대북 지원을 계획할 때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북한에서 정치·사회 변화가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탈김정일 시대에 북한 복구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개성 공단과 같이 공동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플랜(plan)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 배우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탈김정일 시대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려 들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도 식량 그대로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즉 북한에 새로운 종자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도 남한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탈김정일 시대에 남북 사이의 지식 불평등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남한은 북한 대학교를 지지하고·도서·컴퓨터·디지털 자료·다양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북한 측이 이러한 교류로 군사용 기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학생들을 위한 유학 장학금이다. 물론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청년들은 남한으로 보낼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평양 지도부는 사상적으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국가인 호주, 유럽의 여러 작은 국가, 러시아 등에 유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남한 측은 이 같은 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뉴질랜드나 폴란드에서 유학했던 북한 전문가가 나중에 남북한 공동 경제에 기여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은 남한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를 다시금 같은 민족, 같은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해야 할 일은 경제 복구와 함께 북한 사람들을 재교육시키고 의식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통일 한국에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경험할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이을 다리가 될 것이다.

이들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상식이나 정신문화를 알려 줄 수 있으며,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 체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에 북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칙, 그리고 남한 사회의 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 언론인, 교수, 전문가, 정치인만큼 이러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동유럽국가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이들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은 탈공산주의 개혁에 많은 기여를 했다.

좋은 싫은 북한 문제는 기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와 필요가 있는 근본적인 세력이 남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ews.com)

[지상중계]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 변화를 내다본다

체제안전·경제회생 갈림길 ... 대규모 경제지원책 마련 - 북핵 초기조치 이행의 걸림돌이었던 BDA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북한의 조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핵시설 폐쇄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평화재단은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19일 프레스센터서 개최해 북핵과 북한체제와의 상관관계와 향후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 피터 백(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6자 회담의 모든 참가국이 2.13합의에 동의하였지만, 여전히 불신과 경계심이 존재한다. 본 사안의 복잡성과 민감성 이외에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측면들이 있다는 사실은 2.13합의가 여전히 빈약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북한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충분한 근거가 많다. 과정에서 비핵화 모니터링의 어려움, 북미관계 정상화의 어려움,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한 집착, 대북지원에서 미국의회의 반발이나 일본의 거부 그리고 한국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문제, 경수로 등이 예상되는 어려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이 자국의 핵 관련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상황 하에서만 완전한 관계정상화 및 완전한 안전보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얼마나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협상 과정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비록 남은 단계들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여타 당사국들은 “행동대 행동(Action for Action)” 원칙을 포함하는 진지하고 상세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결과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정권 안전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합의에는 단계적 조치가 신중히 규정되고, 이행 과정이 항상 모니터링 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 화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나 재래식 무기와 같은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와 연계되어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핵위기 해결이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

\*\* 조호길(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교수) - 20세기 8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는 쇠퇴일로로 걷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이 후에는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경제위기는 각종 물자부족으로 인한 제2경제의 만연과 중앙정부통제력의 약화 등 정치통제력의 위기 또는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전면적인 경제위기는 통치정당성과 통치력을 위협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북한의 경제위기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급격히 하강시켰고 심지어는 생존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정당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재, 도와 군은 사실상 독립적인 경제운영 단위로 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계획 내의 원자재는 계획의 10~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도와 군에서는 자체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각 군 단위들은 독자적으로 대외무역, 외화벌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계획경제가 약화된 결과임과 동시에 계획경제를 더욱 마비시켜 중앙정부의 통치 정당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합법, 혹은 불법적인 사적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제2경제’는 각종 물자의 부족현상을 다소 완화하여 일반대중들의 불만과 정치적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제2경제의 만연은 대중들의 ‘탈 정치화’ 등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정치통치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듯 하다. 8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개선 내지 위기탈출을 위해 여러 가지 출로를 시도해왔으나 전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7·1조치는 개방의 결여로 인해 대량의 자금, 기술 시장의 공급이 결여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 욕구를 이용해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 이즈미 하지메(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교수) -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주화'가 실현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이다. 북한은 현시점에서 당분간은 대미 핵 억제력의 강화보다는 다른 과제에 임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과의 거래의 모색, 남북관계의 진전, 경제의 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김정일 독재권력의 유지·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북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북한의 정책 변화는, 지극히 한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또한 한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 미사일 개발 등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그 한편에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감행 하지 않는다면 주변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북한과의 공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북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서 계속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주변 제국은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보유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을 항상 염려하며, 증가하는 탈북자의 대응에 고심하는 것을 어쩔 수 없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국가연합 형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이다. 만일 한국이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우선한 나머지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국가연합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구도는 일변하게 될 수도 있다.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전쟁이나 대량살상 무기를 통한 협박을 되풀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원조나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벼랑끝 전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현실적인 전략은 체제안전과 경제회생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와 관련하여 '조기붕괴'에서 '장기존속', 그리고 '점진와해'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기 붕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으나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조기붕괴론이 상정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나 민중봉기나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 체제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첫째, 주민생존 위한 인도적 지원, 둘째 대량탈북에 대비한 시설확충 및 국제난민 회의, 셋째 체제혼란 속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북한에 신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정부의 외교적으로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외교적 승인과 북핵 포기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승인 외에 마샬플랜적인 대규모 경제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평화재단 11.15 3주년 기념심포지엄

# 매일경제

2007-11-15

## '차기정부 통일.외교.안보 과제' 토론회 요지-1

평화재단은 15일 창립 3주년을 맞아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다음은 심포지엄에 앞서 14일 배포된 분야별 전문가 발제 요지.

◇대북.통일(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평화적 분단고착으로 귀결되지 않고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전환기를 맞아 2008년의 정세변화가 향후 차기정부의 5년을 좌우한다는 인식 기반에서 출범 첫 해에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과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정책목표는 '북한 비핵화 및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남북연합 진입'으로 정하고 국제협력과 민족공조의 조화.병행, 10.4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 등 기합의의 이행.실천, 북한주민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정책으로 핵폐기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우선 출범 초기 북핵 불능화가 완료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진다면 2008년 상반기에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별도 포럼'을 통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어 핵물질의 사찰.검증이 본궤도에 진입한 시기(2008년 8월 이전)에 핵폐기 방식(핵무기 해체)과 핵물질 처리방식, 그리고 목표 시한 등 완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담은 '한반도 평화 정상선언'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적 신뢰조치 합의사항의 이행과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착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시범개발 착수, 남북경제협력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북한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의 공동사업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를 유도해야 한다. 정권 진화는 '주고받기식'의 접근 속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평화와 경제회생을 추구하고 나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정권진화 시나리오는 북한이 우선 명목상이나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북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인(一人) 중심체제로부터 사회주의적 당·국가 중심체제로 회복돼야 체제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인민생활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군정치(先軍政治)로부터 주민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는 선민정치(先民政治)로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 '차기정부 통일.외교.안보 과제' 토론회 요지-2

◇외교안보(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자신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방위에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있는 만큼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춘 중급국가(middle power)로서 위상과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 중급국가로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급성장한 졸부적 국가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품격외교, 전쟁·가난·독재와 같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평화협력 외교, 주변국들과 과거에 얽매어 갈등하고 견제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선린외교가 필요하다.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과제로는 ▲성숙한 한미동맹의 정립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아시아 중시 외교 ▲국제 인간안보 협력 ▲재외동포 역량의 외교자산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 과제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등 포괄적·호혜적 관계로의 한미동맹 전환, 주한 미군 재조정 및 전작권 전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 안보기구 창설, 평화유지군 상설부대 창설과 공공개발원조 확대, 아시아공영벨트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신설,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차기정부가 직면할 도전 요인들로는 북한의 핵포기 결단 여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 등에 관한 한미 갈등, 중·일간 동북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자원·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강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 등이 예상된다.

◇국방(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세계 및 동북아에서 전략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오랫동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외교를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외교적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평화를 만들고, 이를 주도적으로 지켜나가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대치상황의 남북군사관계를 신뢰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동북아내 군사구도를 한반도평화 형성에 유리하도록 하는 군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와 관련해서는 '재검토 여부'를 성급하게 발표하기 보다는 여건 재평가를 꼼꼼하게 한 이후에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미국과 의논하되 그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미간 불필요한 마찰을 막아야 한다.

또한 탈냉전 이후 세계 군사력 건설 원칙은 '외부 위협평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세계 13위라는 양적 수준뿐 아니라 '질적 역량'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군사력 건설 기준의 기초가 북한 위협이나 외부 위협에서 주변국가와의 군사력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핵심이익을 중국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국적 전략무기체계 획득'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잠수함 전력과 '국제경쟁력 있는 크루즈미사일'이 결합한 무기체계의 전략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은 차기 정부에 구현할 내용보다 차차기, 10년, 20년 후를 고려한 국방정책의 설계 도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임기중에 중장기 목표인 '국방발전2030' 또는 '국방발전 2040'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mailto:moonsk@yna.co.kr))



2007-11-15

## “차기정부, 참여정부 통일정책 지속해야”

평화재단 심포지엄... 한미동맹 강화도 주문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국방 및 통일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화재단이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나선 발제자들은 차기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설정한 남북관계를 계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결구도와 같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할 경우 남북관계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이다.

발제자들은 또,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과의 동맹 외교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 아울러 주변국가와의 군사력 격차 해소 방향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차기 한국정부가 6자회담이나 미·북 대화 및 (현재의) 남북관계 흐름을 인정치 않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할 경우 남북관계 뿐 아니라 미·북, 북·일 관계 등에 총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에 따라 한나라당 대북정책 방향이 오른쪽으로 급속히 틀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 실장은 "풀릴 수 없을 것 같던 북핵문제가 작년 부시 대통령의 결단 이후 해결 방향으로 나간데는 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작용했다"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향후 50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의 패권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환대상 미군기지 66곳 가운데 국방부 환경부의 합동 오염조사가 끝난 23개 기지를 2007년 말까지 환수하고, 나머지 43개 기지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 반환절차를 마무리해 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기지이전비 전용문제를 2008년까지 해결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동집행과 현물지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차기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주장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도 동감의 뜻을 나타냈다. 백승주 팀장은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국방의 대미 의존도, 한미동맹 의존도를 약화시키는데 역점을 뒀다"며 "그러나 세계 및 동북아에서 전략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오랫동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안보에 이런 국제정치의 역학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승주 "향후 미국 중심 다극적 질서 유지될 것.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외교 강화해야"**

그는 "미국과의 동맹외교를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안보 외교적 핵심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관한 이념적 논쟁이 유발되지 않은 국방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환경 속에서 '자주'를 강조하면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한다는 의심을 받아야 했고, '협력'을 강조해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으로부터 '한미동맹'에 집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육군의 '강한친구, 대한민국 육군'과 같이 이념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방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백 팀장은 해외파병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해외파병은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한 가운데 해외파병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파병활동에 필요한 특수부대의 육성, 민사작전 및 '군사이외기관과의 합동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민 "차기정부,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해야"**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대북통일정책은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특히 "차기정부는 2008년 출범 첫해에 '평화체제 협상개시 선언'과 '4자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 역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2009년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적 궤도에 진입할 단계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의 논의과정에서 의제로 부각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간의 고유한 주권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 위원은 "진보좌파는 북한 실상을 외면하며 북 체제 보장에 따른 정상국가로의 전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핵문제와 북한의 총체적 실패를 북한의 체제모순으로 파악하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수우파는 북한 정권을 불신, 안보우선주의에 과도하게 치우쳐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족미래 개척에 대한 확신과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punkyhide)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http://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

## "차기정부, 남북관계 뒤집으면 총체적 불안"

평화재단 심포지엄, 전문가 '외교·대북정책 연속성' 강조



▲ 15 일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 주최로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의 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차기 정부가 최근 6자회담이나 미북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자고 요구할 경우, 그것은 단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이나 미북, 북일 관계 등에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대통령 선거가 자리잡고 있어, 과연 차기 정부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15 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범윤)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의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에서 2008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시기에 출범할 차기정부의 제 역할을 주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2008년이 되면 과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북 수교와 평화공존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고수한 채 한반도를 다시 한번의 위기로 몰아넣을 지가 판가름날 수 있다"며 "2008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은 커다란 정치 변동의 해"라는 조했다. 올해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선, 3월에 러시아와 대만에서 각각 대선과 총내년 봄 일본의 새 내각 출범 가능성, 11월 미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조 실장은 "리더십의 변화가 2008년에 집중되어 어느 하나의 정치변화가 다른 나라에 변화를 있다"며 "먼저 출범한 한국의 차기 정권이 다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

그는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은 더 이상 변수 않는다"며 "김정일 위원장의 판단에 영향을 미 중요한 것은 한국의 차기 정부의 태도"라고 강

"만약 차기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해 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유리한 정세가 이어질 기존 대북정책을 180도 뒤집으면 김정일 위원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핵포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 북한의 약속이행 늦어지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 집단이 대선에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보다, 과연 선거에서 승리한 집단과 차기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는 전임 정부가 떠난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되, 태도와 방법은 개선하라"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조 연구원도 "북핵문제 진전, 남북관계 도약계기 마련, 평화체제 본격화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2008년의 정세변화가 향후 차기정부의 5년을 좌우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아래 2008년 출범 첫해에 2단계 접근, '평화체제 협상개시 선언', '4자 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7.4공동성명에서부터 6.15, 10.4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이미 마련된 남북한의 합의문의 이행. 실천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새 합의문 도출도 필요하지만, 각종 회담을 통해 이미 합의한 내용의 이행.실천의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의원도 "미국관계도 평화정책으로 부시 정부내에 하고자 하는 마당에 대북정책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 확충해 나가면 한미관계에서 충돌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갖춰진 군사.대북.한미 정책, 주변 외교의 다변화 이러한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차기정부가 국방.외교 문제에서 대한민국을 더욱 강력한 반열에 올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관심을 모았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심포지엄 막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 [사진-통가 면 서 일뉴스 정명진 기재

점도 강  
4월 총  
통 선거,  
국의 대

어 있어  
줄 수  
른 나라  
했다.

가 되지  
치는 데  
조했다.

것이고,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의원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지에 이르러 불참의사를 통보해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발제.토론에 나섰으며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한편,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외교.군사.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정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과제를 시기별로 상세하게 분석,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발표 요지이다.



▲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발제.토론에 나섰으며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외교.안보 분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5대 추진방향은 △성숙한 한미동맹의 정립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국제인간안보 협력의 강화 △아시아 중시 외교의 강화 △재외동포 역량의 외교 자산화 등이다.

'성숙한 한미동맹의 정립'을 위해,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전개해야 한다. 먼저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한미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FTA 체계로 그동안 군사.안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던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명실상부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다음, 한국방위의 한국화 일정을 차질 없이 실현해 가며, '국방개혁 2020'을 착실히 추진하고, 새로

운 한·미 군사협조본부(MCC)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치유 문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 연합훈련비용 공동부담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중전선언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유엔사 재편을 포함해 제2차 한미동맹의 재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2008년까지 유엔사가 한국군에 넘길 임무들을 확정지어야 한다. 그 뒤 2009년부터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환수시점 이전까지 비무장지대 출입승인과 비무장지대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조사, 월경 방지시설 및 군사표식물 관리 등 임무를 이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관련, 북핵문제의 해결 및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차기 정부 5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08년 초,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인센티브로서, 한반도 지역에서 3-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핵시설의 철거와 제염작업 등 핵문제의 완결해결까지 최소 5-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그 이전이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 남북 국방장관회담 또는 남·북·미가 참석하는 별도의 3자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

최종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은 2012년 체결을 목표로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의 해체와 해외반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남북한끼리 혹은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국·중국이 보증자로 참여하는 2+2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한중FTA, 한일FTA 및 한중일 FTA)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2008년 미북관계, 북일관계를 정상화하여 동북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2009-2011년 사이에 현재 가동 중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2012년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사무국과 6자 외무장관 회담의 두 트랙으로 진행되어 온 논의를 통합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국제 인간안보 협력의 강화'를 위해 공공개발원조 확대, 유엔평화유지군의 상비화 및 파견법 제정이 필요하다.

#### ◇ 대북·통일정책 -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

차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프로젝트는 비핵평화, 공영 그리고 통일의 정책 목표 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출범 100일 이내 대북정책의 핵심 사안인 핵문제 해결의 성패가 향후 5년의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10.4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 가운데 2008년부터 추진 가능한 사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업지구는 2008년 하반기에 2단계 개발에 착수하여 세계적인 수출기지로 발돋움시켜야 한다. 2008년 초반 핵문제 해결과정이 진전되면 미국의 대북협력 분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개성을 역외 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2008년도 북한 SOC 제1단계 구축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2009년-2011년 사이에는 국제자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SOC 개발을 추진하되, 경제특구 등 거점 중심에서

북한 전역의 산업구조의 재구축 차원에서 에너지, 도로, 철도, 정보통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남북 간 부정기적인 회담방식을 지양하고 남북경협을 상설기구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2008년 하반기에 북미관계 진전 상황에 부응하여 민족공조의 원칙아래 추진한다.

통일정책과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한 교류협력 심화에서 남북연합으로 가는 경로가 있다. 즉, 국가연합 형태인 남북연합 또는 남북연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한 교류협력의 발전, 심화를 기반으로 남북한 각 부문에서의 통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의 자연스런 결과로 제도적 통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진화(regime evolution)를 유도해야 한다. 정권진화는 '주고받기식'의 접근 속에서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평화와 경제회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정권진화 시나리오는 북한이 우선 명목상이나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북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 ◇ 국방정책 -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

세계 13위라는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 역량'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적 전략무기 체계 획득'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잠수함 전력과 '국제 경쟁력 있는 크루즈미사일'이 결합한 무기체계의 '전략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군사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병기가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검증결과가 나오기까지 핵관련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 간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 내에 군비통제 전담부서를 만들 경우 전력증강부서와 상충되는 안건의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군 밖에, 청와대 직할기구로서 남북군비통제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목표 연도에 대한 경직된 입장보다는 융통성을 갖고 목표조건 충족방식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처음 제시한 조건들을 일정에 무관하게 구비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전환을 완결짓는 방식을 말한다.

국방개혁2020은 계승하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해외파병은 국제평화 기여를 군의 주요 임무로 인식해야 한다. 파병이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한 가운데 해외파병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효과적인 해외파병활동에 필요한 특수부대의 육성과 민사적전 및 '군사이외기관과의 합동교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008년 2월에 출범할 정부는 주요 국방현안 중에서 차별되는 입장을 가진 현안에 대해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전략권 목표연도 조정', '국방개혁 내용조정', '군사차원의 평화체제 구축노력'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많다.

현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전쟁 이후 유지되어온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해야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군사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두 가지다.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2007-11-15

## "차기정부에 제언한다"

평화재단, 외교 안보, 국방 통일정책 제언 심포지엄

올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등이 학술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단체인 평화재단이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평화재단(이사장 범륜 스님)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심포지엄에서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국가발전의 자리를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 정형근, 장영달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이석연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와 백낙청 6.15공동선언 남측본부 상임대표 등 보수, 진보단체 대표, 윤여준, 김홍신 전 의원,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 평화재단 주최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konas.net

심포지엄에 앞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평화재단의 창립 3주년을 축하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는 12월 19일 있을 대통령 선거결과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탄생할 차기 정권의 과제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도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

보다 시기 적절한 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제는 평화세력이나, 전쟁세력이나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평화의 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통합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독일 통일의 예를 들면서 "통일 독일은 행운도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와 함께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평화재단의 더 큰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동북아 질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미북관계 정상화 과제를 앞에 두고 변화의 한가운데 한반도가 서 있다"며 "차기 정부가 세울 국가전략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국가전략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어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적 비전도 제시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적극 찾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안을 제안 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주제 발제에서 차기 정부가 직면할 도전요인에 대해 ▲북한 핵 보유(포기) 유무에 따른 동북아 질서 ▲MD, PSI 참여 문제여부 ▲중·일 양국의 질서 재편 주도권과 대응 ▲자원,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경쟁과 외교적 노력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참가 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 실장은 또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방향과 관련해 5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 성숙한 한미 동맹의 정립, 둘째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셋째 국제 인간안보 협력의 강화, 넷째 아시아 중시 외교의 강화, 다섯째 재외동포 역량의 외교자산화를 들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그는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 "지금까지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 치우쳤지만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명실상부한 '21세기형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한국은 물론 미국도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실장은 또 2012년 4월 17일로 확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새로운 한미 군사협조본부(MCC) 조기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우선 2008년은 한국과 동북아의 미래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북핵 포기나, 고수냐에 따라 한반도가 위기상황으로 들어가느냐의 판가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김정일 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정부, 특히 차기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 출범 직후에 어떤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정책과 관련해서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현안과 제안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목표조건 충족방식을 고려해야 하고, 국방개혁 2020은 계승하되, 융통성을 발휘할 것과 해외파병과 관계해서는 국제평화 기여를 군의 주요 임무로, 그리고 국방문민화를 위해 합참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백 팀장은 국방환경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한국전쟁 이후 유지되어온 '전작권 전환'의 마무리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군사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정책과 관련, 좌파세력과 보수우파에도 정확한 대북인식을 촉구 하고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일의지를 되살려 역사적 계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



## "北, 불능화 이후에도 다시 불꽃놀이 가능성"

전문가 "차기정부, 한미동맹과 北 비핵화가 우선과제"



▲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이 주최한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토론회  
©데일리NK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재설정, 북핵 문제 해결이 차기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비핵-공영-통일’을 5년 내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진화는 ‘주고 받기 식’의 접근→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평화와 북한의 경제회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일인 중심체제로부터 사회주의적 당·국가 중심체제로 회복돼야 체제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고, 인민생활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북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5년 안에 비핵, 공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특히 북한은 불능화 이후, 미 대선과 주변국의 정권 변화를 주목해 다시 한번 불꽃놀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또한 “북한의 김정일은 경제 특히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중국과 남한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만 기대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의 정권의 전환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세계는 외교·안보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자주’, ‘균형자’는 개념은 오히려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개념이었다”면서 “우선순위와 일관성이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세계 및 동북아에서 전략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오랫동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안보외교적 핵심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팀장은 또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평화를 만들고, 이를 주도적으로 지켜나가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치상황의 남북군사관계를 신뢰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동북아 내 군사구도를 한반도 평화 형성에 유리하도록 하는 군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한반도가 기존 정부에서 180도 뒤바뀐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데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원고로 대신한 발표에서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그 기조나 방향성에서는 나름의 논리와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면서도 “유화일변도의 무원칙과 대내외 정세변화에 적절히 대처를 못하는 경직성 등으로 대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장영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대한민국과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핵무기를 만들어 에너지 확보와 체제확보에 나섰다”면서 “괜히 북한을 자극만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만은 참여정부가 막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재성 기자]

---

##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제안

2007평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창립 3주년을 맞은 평화재단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은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정립, 한반도 평화조성, 국제안보 등 2008~2012년까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설명했다.

또한 조 실장은 “2008년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 해가 될 전망”이라며 “어느 정치집단이 대선에서 승리 하나는 것보다 차기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선택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말했다.

차기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팀장은 향후 한국과 주변국 간의 군사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적정 군사력’에 관해 사회일반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평가내용을 인지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은 10, 20년 후를 고려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관해 “기존 햇볕정책은 미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됐다”며 “반드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협력의 원칙 아래 추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출범 100일 이내 대북정책의 핵심 사안인 핵문제 해결의 성패가 향후 5년의 대북·통일정책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화재단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포럼과 심포지엄,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16차 전문가 포럼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11월21, 28일에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지영 수습기자 [actress0103@allthatnews.co.kr](mailto:actress0103@allthatnews.co.kr)

## 법륜 "北 올 겨울 대량 아사사태 발생 우려"

"국경 경비 강화로 탈북자 거의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작년에 이어 올 여름 북한에서 막대한 홍수가 발생한 데다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한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이 끊겨 올 겨울 북한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대북지원단체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19일 주장했다.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법륜 스님은 이날 워싱턴 D.C.내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가 개최한 특강에서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북핵 등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문제와 별개로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륜스님은 "대규모 아사사태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여러 사회현상들이 있다"면서 "북한에선 쌀 1kg에 800~850원이었던 식량가격이 지난 5월 1천300~1천500원으로 급등했고 풀죽으로 연명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며, 식량구입을 위해 가재도구를 내다 팔고 있고, 학교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꽃제비(부랑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지난 1995년 대홍수 이후 10여년간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올 들어 그 사정이 더 열악해지고 있지만 북한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어려워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식량지원이 김정일 체제를 유지,불리하게 할 지 여부를 떠나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올해 8월 홍수 발생 이후 심각한 피해사태를 외부에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100만 식량지원을 요청했지만 국제사회는 국제적인 수준의 분배감시 시스템을 요구하며 아직 북한에 구체적인 응답을 주지 않아 실질적인 외부지원은 없는 상태라고 법륜스님은 전했다.

이어 그는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북한에선 영양실조로 인한 결핵 등 각종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등 의료시설과 의료체계는 무척 열악하다면서 "시장에서 구입하는 약 가운데 80%는 가짜이며 다른 부작용도 심각해 식량 다음으로 북한에 보건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식량부족으로 학교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교사들도 수업보다 식량 구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대학 기숙사에서 식사 제공하지 못하고 교육기자재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북한은 교육,의료서비스를 무상지원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가동조차되지 못하고 있다고 법륜 스님은 지적했다.

더욱이 교육체계가 무너져 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난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는 반면에 부유층에선 가정교사를 두고 자녀를 가르치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어 법륜스님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 내부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지만 북한 당국이 국경단

속을 강화해 최근엔 탈북자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당국은 내부통제를 강화해 북한사회를 겨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이처럼 북한은 개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는 일종의 무정부상태이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안정된 사회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가능성은 적으며 당분간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ingsoo@yna.co.kr

<민족화해상 시상식 개최> 법륜스님, 나눔인터내셔널 선정

법륜 스님, 나눔인터내셔널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자로 선정!


12월 13일 시상식 개최!

**제5회 민족화해상 시상식**

일시: 2007. 12. 13(목) 오전 11:30  
장소: 세종호텔 3F 세종홀  
주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경향신문사  
후원: 통일부

상 비료 250톤 및  
장소: 부산항 일차: 2004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자가 개인부문 법륜스님, 단체부문 나눔인터내셔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시상식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민화협 사무처 02-761-121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丁世鉉)는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세종호텔 3F 세종홀에서 “제5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지난 11월 22일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개인부문에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단체부문에 나눔인터내셔널(대표 이운상)를 수상

자로 선정했다.

제5회 민족화해상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법륜 스님은 96년부터 식량난으로 어려운 북한동포 돕기에 나섰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99년 (사)좋은벗들을 설립하여 북한난민 실태조사와 각종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오늘의 북한소식]을 발행했다. 대북인도적지원 부분에서는 1997년부터 JTS를 통해 북한 지원에 나섰으며, 식량난과 수해에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비료, 비닐, 의약품, 식량 등을 지원하였다. 2004년부터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 정책을 모색하는 민간연구재단으로서 국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단법인 평화재단」을 설립하여 국제심포지엄, 워크숍, 전문가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단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나눔인터내셔널은 2004년 설립하여 대북지원 단체 중 북한의 보건의료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구역병원인 “대성구역병원”과 “모란봉구역병원”과 농촌지역인 평양 외곽의 강남군 인민병원, 중앙병원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을 협력사업장으로 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직접 방북하여 시범투석, 남북공동진료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양의료협력센터”를 건립하여 의료장비의 보관, 수리,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향후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상식은 한승헌 심사위원장의 수상자 발표,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의 축사,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만원이 함께 시상된다.

민족화해운동의 발전에 기여코자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민족화해상은 2003년도 제정되었으며, 역대 민족화해상은 개인부문에 이현숙(전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강만길(교수), 한완상(대한적십자사 총재), 단체부문에 현대아산,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족문화작가회의가 수상했다.

#### <제5회 민족화해상 시상식>

○ 일 시 : 2007. 12. 13(목) 오전 11시30분

○ 장 소 : 세종호텔 3F 세종홀(중구 충무로2가)

○ 수상자 및 수상단체

– 개인부문: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단체부문: (사)나눔인터내셔널

○ “제5회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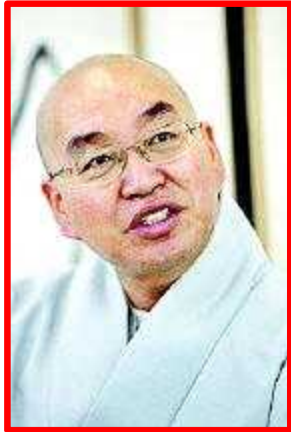
위원장 : 한승헌(변호사)

위 원 : 김상근(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성수(성공회대학교 총장), 손동우(경향신문사 논설위원),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현숙(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이학영(YMCA 사무총장), 지은희(덕성여대 총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



## 민족화해범민협 '민족화해상'...법륜 스님·나눔인터내셔널 수상



▲법륜스님·나눔인터내셔널 수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사진) 스님을, 단체 부문에 대북지원단체인 나눔인터내셔널을 각각 선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법륜 스님은 1996년부터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동포 돕기에 나서 비료와 비닐, 의약품, 식량 등을 지원했으며 2004년부터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기관인 평화재단을 세워 대북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04년 설립된 나눔인터내셔널은 북한의 대성구역병원과 모란봉구역병원, 강남군 인민병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장비를 보관·수리·생산하는 '평양의료협력센터'를 건립하는 등 남북보건의료 협력에 힘쓰고 있다.

시상식은 1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2007-12-14

## 법륜스님,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

### 10년 넘는 동포사랑 평가... 단체부문에 나눔인터내셔널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민족화해상이 올해 개인부문 수상자에 법륜 스님을 선정했다.

올해로 5회째 수상자를 발표한 민족화해상은 개인부문과 함께 단체부문에 나눔인터내셔널(대표 이윤상)을 선정했다.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세현)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세종호텔 3F 세종홀에서 '제5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5회 민족화해상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법륜 스님은 1996년부터 식량난으로 어려운 북한동포 돕기에 나섰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99년 (사)좋은벗들을 설립해 북한난민 실태조사와 각종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오늘의 북한소식'을 발행했다.

대북인도적지원 부분에서는 1997년부터 JTS를 통해 북한 지원에 나섰으며, 식량난과 수해에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비료, 비닐, 의약품, 식량 등을 지원했다.

2004년부터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 정책을 모색하는 민간연구재단으로서 국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단법인 평화재단을 설립해 국제심포지엄, 워크숍, 전문가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단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나눔인터내셔널은 2004년 설립하여 대북지원 단체 중 북한의 보건의료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구역병원인 대성구역병원과 모란봉구역병원과 농촌지역인 평양 외곽의 강남군 인민병원, 중앙병원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을 협력사업장으로 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직접 방북하여 시범투석, 남북공동진료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양의료협력센터를 건립하여 의료장비의 보관, 수리,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향후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심사위원회의를 지난 11월 22일 개최하고 개인부문에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단체부문에 나눔인터내셔널(대표 이윤상)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한승헌 심사위원장의 수상자 발표,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의 축사,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만원이 함께 전달됐다.

2003년에 첫 수상자를 선정한 민족화해상은 지금까지 개인부문에 이현숙(전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강만길(교수), 한완상(대한적십자사 총재), 단체부문에 현대아산,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수상했다. © 통일신문

---

## 매일경제 2007-12-11

### '민족화해상'에 법륜스님 단체론 나눔인터내셔널 선정돼

(서울=연합뉴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1일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자로 개인부문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을, 단체부문에 대북지원단체인 나눔인터내셔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1996년부터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동포 돕기에 나서 비료와 비닐, 의약품, 식량 등을 지원했으며 2004년부터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기관인 평화재단을 설립해 대북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04년 설립된 나눔인터내셔널은 북한의 대성구역병원과 모란봉구역병원, 강남군 인민병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장비를 보관·수리·생산하는 '평양의료협력센터'를 건립했다.

시상식은 13일 오전 11시30분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민족화해상은 2003년 제정됐으며, 그동안 개인부문에서 이현숙(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씨,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단체부문에선 현대아산,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각각 수상했다.



2007-12-13

## '민족화해상' 수상 법륜 "北 인권침해 비판해야" [인터뷰]"시장 통제 강화해 주민 인권 더 악화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3일 제5회 민족화해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을 선정, 시상했다.

법륜 스님은 1996년부터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동포 돕기에 나섰고, 그 공로로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2004년부터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평화재단'을 세워 각종 세미나를 통해 대북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그는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와 '좋은벗들'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JTS가 불교계 단체 최초로 UN에서 공인하는 국제구호단체로 승인되면서 더욱 활발한 대북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날 데일리NK와 만난 법륜 스님은 민족화해상 수상 소감에 대해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활동한 분들이 많은데 부족한 제가 받게 되어 감사할 뿐"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JTS, 좋은벗들, 평화재단 등 3개의 북한관련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픔을 치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겼다"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명백히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사회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부가 시장을 잡으려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도 북한이 외부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아가는 과정을 보일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시장확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이때 인권침해 문제가 심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유의해 활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민족화해상'을 수상한 (사)좋은벗들 법률 이사장 ©테일리NK

다음은 법륜 스님 인터뷰 전문

-올해 전개한 대북활동을 소개해 달라.

북한관련 단체 3개를 운영했다. JTS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온 단체이고, 좋은벗들에서는 북한인권개선운동이나 난민 구호운동을 하고 있다. 평화재단에서는 남북 평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고 아픔을 치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겼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판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은 통일을 나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했다. 북한에서 주민들은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북지원활동에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남북관계도 보조를 맞추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에 핵실험을 했다. 이에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홍수 피해로 인해서 올해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더욱 힘들게 되었고 빈부격차도 점차 확산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부가 시장을 잡으려고 통제가 강화하고 보니 북한 인권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할 때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적대적인 시선도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한을 민족의 한 동반자로 보고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해서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대북지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 북미관계 정상화를 해내려는 방향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개선을 해나가는데 있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이 멈춰서는 안된다.

민중이 굶주리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고, 병들면 치료 해야 하고 인권침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하는데 그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는 정부와 함께 갈 것이고 정부가 소극적이라면 정부를 비판할 것이다.

-내년에 주력할 대북활동은

북한 경제개발 관련 현실적인 계획들에 대한 정책 고민에 힘쓸 것이다. 북한이 외부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아가는 과정을 보일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시장확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때 인권 침해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더 유의해서 활동할 생각이다.

 연합뉴스 2007-12-13

## 민족화해상 시상식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13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5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영재 경향신문 사장, 정세현 민화협 상임위원장, 개인 수상자 법륜스님, 단체수상자 이윤상 나눔인터내셔널 대표, 한승헌 심사위원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연합뉴스 2007-12-13

## 민족화해상 수상자들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13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5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 수상자 법륜스님과 단체수상자 이윤상 나눔인터내셔널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dohh@yna.co.kr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대북인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담 이수언 《민족화해》 편집인



대북지원과 북한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법륜 스님은 지난 2007년 12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민족화해상”을 수상하였다. 법륜 스님은 우리 사회의 보수가 동의하는 대북지원 확대를 통해 북한의 권력층과 남의 우파가 화해해야 진정한 민족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민족화해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개선과 화해협력을 위해 저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상을 주셔서 받기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상의 취지에 걸맞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려의 길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눈물 나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승려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스스로 좋아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승려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희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려가 되었지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과학을 좋아해서 천문학자가 되는 것을 장래희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의 우주관과 사상, 교리의 합리성이 과학자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불교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승려가 된 직접적인 계기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절의 저녁예불에 참석하여 기말고사를 잘 치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지스님이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주지스님은 한번 말문을 여시면 네다섯 시간은 기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걱정한 제가 스님이 말도 꺼내기 전에 “스님, 제가 오늘 바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보내줄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너 어디서 왔어?”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또 다시 “그 전에는 어디서 왔는데?”라고 하시기에 “학교에 있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어디서 왔는데?” 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더군요.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계속하다 보니, 저의 대답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까지 나왔고, 그 다음 질문인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다시 “너 어디 갈 건데?”라고 물으셨습니다. “집에 갈 겁니다.,” “내일은 학교에 갈 겁니다.,” “취직”, “결혼”…… 결국 “죽게 됩니다.”라는 답이 나오자 “죽은 다음에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은 제 대답을 모두 들으신 후에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긴 왜 바빠?”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스님의 말씀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리 바빠까?’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여쭙보니, 스님께서서는 “있지” 하시면서, “절에 들어와서 공부하면 알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개인 수행은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초입니다

-정토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토회는 1988년에 개인수행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정토포교원 설립, 월간정토 발행, 한국불교사회교육원과 한국불교사회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사회정의라는 기치 아래 시위도 하고, 또 탄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는 민주화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본의 아니게 폭력적 충동을 가져오기도 하여 불교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력에는 미움과 분노와 같은 악의적인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수행에만 전념하는 것 역시 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직선제에 의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면서, 미래의 한국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면서 '지구적', '인류적', '민족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적으로는 '환경문제', 인류적으로는 '절대빈곤과 종교·이념의 갈등 문제', 민족적으로는 '평화정착과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지요. 또 인간 개인에게는 '인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파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괴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개인수행인데, 불교는 개인수행의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동시에 공동체회복을 가져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생존과 연관된 기아·질병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대립의 갈등 문제입니다. 개인수행은 인간의 탐욕과 분노로 야기되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탐욕과 분노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개발하겠다는 의식은 자연을 가장 많이 파괴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자연파괴'라는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토회는 세 가지 문제의 해결을 이루는 것이 정토(淨土)를 실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로부터 이것을 실현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토회 안에 환경단체, 평화단체, 복지단체, 수행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변화(종교)적 요소와 사회변화(사회운동)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스님은 정토회의 토대 위에 평화재단, 좋은벗들, JIS, 에코붓다 등 여러 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희의 모든 활동은 자기수행을 기초로 합니다. 남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희생'이라고 여긴다면 수행의 관점에서는 빵점입니다. 선행을 베풀 때는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수행공동체'라는 단어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행'에는 자신의 행복, '공동체'에는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선행을 베풀더라도 자신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개인수행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만 남의 행복에는 무관심하다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자기수행만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칭찬받을 일도, 비난받을 일도 없는 것이겠지요.

저희 단체들이 다른 일반 NGO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개인의 수행 역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아침명상, 마음나누기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행이 없으면 공동체가 서로의 갈등으로 깨어지기 쉽습니다. 낯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기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국내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셨습니다. 북한동포돕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북한주민들이 '굶주리고, 병들었기 때문에' 돕는 것이지 '내 민족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순수하게 굶주리고 있는 북녘동포들의 도와야 한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온 지난 시기 동안 전쟁의 위기가 사라졌고, 평화정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측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민중을 포함한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우선순위는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2000만 북한 주민들입니다. 남한의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들은 나름의 혜택을 봤습니다. 남한 국민들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이 북한 민중에게 돌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가 좋은벗들 소식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두고, '북한인권문제' 를 과장되게 부각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북한 돕기를 해 왔지만, 북한에는 나진에만 한번 다녀왔습니다. 1987년 북한돕기를 시작할 때 북으로부터 세 번 초청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남한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아 방북을 못했습니다. 1998년도에 들어와선 한국정부는 허가했지만, 이번에는 북측이 초청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북한돕기를 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난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미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더 많이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북한보다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두둔하다 보니 저를 친북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정부와 민중의 관계를 본다면 북한 정부가 민중에게 가하는 권력을 비판하기 때문에 저를 반북인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반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남한의 진보세력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의 핵심적인 가치는 '민중, 민주, 인권, 평화'입니다.

그런데 남측의 진보세력들은 북의 핵무기 개발 등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를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민중이 겪는 고통을 알면서도 북한 권력층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진보적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권력을 두둔하는 것이, 북한 민중을 배려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북미관계에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두둔하는 것은 약소국가를 두둔하는 것이지만, 북한 정부와 민중 사이에서 북한 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부가 가진 권리는 인정하지만, 북한 정부가 민중에게 가하는 부당한 권력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하면 진보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북한 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비판해야 합니다.

'교류협력 강화'만을 추진하고, '인권문제를 덮어두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권문제'만을 지적하고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태도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북한의 좌파와 남한의 우파가 화해해야 진정한 민족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재단의 경우, 왕성하고 광범위한 정책생산 활동을 하면서, 남북문제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남북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대북인도지원법'도 발의하셨는데요.

-남북이 현실적으로는 별개의 국가인데, 북한을 도우려면 남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돕는 것이므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남한 국민들의 최소 절반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대북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의 지지를 받아 대북지원을 해야 더욱 적극적인 대북지원이 가능하고 민주주의라는 사회정의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보수진영의 주장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의 주장을 모두 외면한 상태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면, 보수진영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는 굶주린 동포를 돕자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에게 설득이 되는 분야입니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보수진영이 동의하여 대북지원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북을 꾸준히 설득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북한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면 누가 법안을 발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대북 인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한나라당과 함께 발의한 것입니다.

-진보 쪽에서는 보수를 반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좌파를 친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약자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야지요. 재래식 무기 감축도 주장해야 합니다.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줘야지요. 설령 굶는 사람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적도 다치면 치료해 주자는 입장이 진보적 이념에 속하는 것이라 봅니다.

과거에는 좌파가 진보고, 우파는 보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쪽 모두 보수인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옛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진보는 아주 미미하다고 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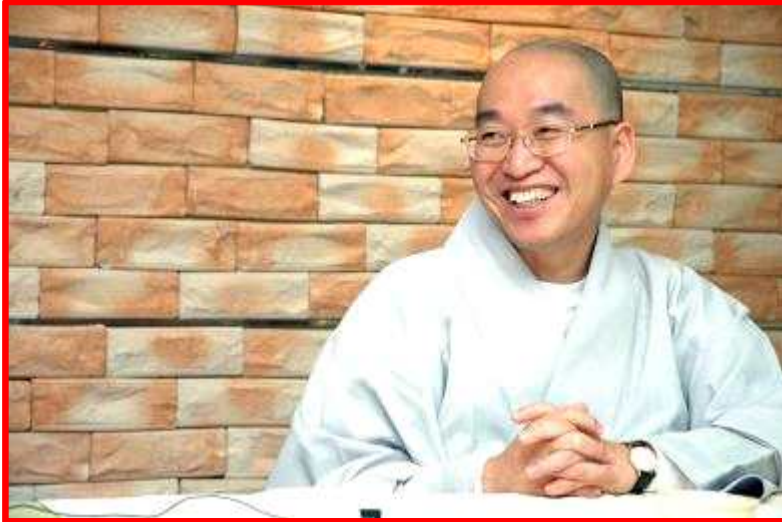
진정한 진보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커다란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증진, 북한의 개혁 유도, 인도적 지원의 찬성,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압박정책에 반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북한정권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좌파가 친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진보가 친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해의 문제 역시, 북한의 좌파세력과 남한의 우파 세력이 화해해야 합니다. 또 남한의 좌파도 남한의 우파와 화해해야 하고요. 현 상황은 남한좌파와 북한의 좌파가 화해한 것이니, 반쪽의 화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좌파와 남한의 우파가 화해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야 진정한 민족의 화해가 올 수 있습니다.

## 신정부의 대북정책,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2008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 기조와 다른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남북관계의 개선속도가 늦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변화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더라도, '북



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세 가지 축은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르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한다고 남북관계는 제쳐두고 6자회담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속도보다 더 빠를 수는 없어도 적어도 비슷한 속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북관계가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된다면 앞으로 분단 고착화로 갈 위험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은 선거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그동안 쌓아올린 남북관계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남북화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우리만 강경하게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정부에 소속된 사람들도 극보수는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보수가 남북관계를 풀면 국민여론이 통일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는 하지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쌓은 업적이라기보다는 정권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새 정부가 집권하여 남북관계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다시 정부를 비판해야겠지요.

한편으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대북인도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북한의 민중을 살려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식량이니,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은 서로 이익이 되도록 따져가면서 하면 되고, 군사적인 것은 확실한 상호주의 원칙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 명백히 반인륜적이고, 북한의 법에 비취보아도 좀 심하다 싶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이 반복적이거나,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북한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2008년 새해입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는 민족화해의 화두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서로 다른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풍요로워 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반찬이 여럿 올라와 있는 밥상이 풍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화엄’이라고 합니다. 화단에 핀 꽃들마다 그 색과 크기가 제각기 다르지만 어우러져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 듯이, 서로 다른 다양한 것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을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 공존의 이익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이 이익이나,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과거의 상한 감정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현실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평화와 공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로 간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남북통일이 꼭 성취되길 바랍니다.

#### <약력>

1969년 12월 경주 분황사에서 불심 도문스님께 입문(사미계 수지, 법명 法輪)

1988년 1월 정토포교원 개원, 월간정토 창간 및 발행, 한국불교사회교육원,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설립, 정토회 설립

1989년 문경정토수련원 설립

1991년 1월 서울 대성사에서 불심도문스님으로부터 비구계 및 보살계 수지. 전법계 수지. 법호 智光

1993년 12월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설립, 인도 JTS 설립

1994년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현 에코붓다) 이사장, 미국뉴욕 JTS 설립

1996년 (사)한국 JTS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998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1999년 (사)좋은벗들 이사장

2002년 (재)정토회 이사장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 고문

2004년 11월 (재)평화재단 이사장

## "北국내법 위반 인권유린 사례부터 제기해야" <전문가>

"체제불안 불식하며 실질적 인권개선 접근법" 주장

북한인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고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보다는 대화와 협력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연구위원이 27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분야 민간연구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에 기고한 '북미관계 정상화, 개방, 그리고 북한인권' 제하의 글에서 "북한이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체제불안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의 안보리 회부나 ICC 제소 등 일부 비정부기구(NGO)가 주장하는 방식은 "북한 당국이 개방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며 4대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자라는 점에서 유엔 인권체제의 틀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북한과 유럽연합(EU)간 인권대화나 북.미 인권대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양자 인권대화의 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과 북한 국내법을 기준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형법 등 북한 국내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을 촉구할 경우 북한도 '체제 위협'을 내세워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지원을 통해 경제적 인권을 신장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간다는 정부의 인권정책은 바람직하다"며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참여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 "평화협정 중국 참여 바람직 안 해" <전문가>

중전선언의 경우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나 평화협정의 경우 중국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일연구원의 조 민 선임연구위원이 8일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일분야 민간연구기관인 평화재단에 기고한 '10.4 공동선언: 한반도 평

화와 경제의 이중주' 제하 글에서 "평화협정에 앞서 종전선언 문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조 위원은 특히 "협상 테이블에 의자 수가 적을수록 협상은 진술하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쉬운 법"이라며 "종전선언은 1회성이지만 평화협정은 상설적 기구를 창설하는 협정으로, 중국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불필요한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한 남북한 합의는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조율돼야 할 사안이지만, 이번 합의(10.4선언)는 남북한 당사자를 원칙으로 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당사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합리적인 자제와 이해가 기대되며, 미국도 남북한의 입장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 "북한 빈곤퇴치 담당기구 설치해야" <민간단체>

북한의 구조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유엔이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마련한 새천년개발목표(MDG)와 유사한 '북한 빈곤퇴치문제 담당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용선 사무총장이 31일 주장했다.

이 총장은 평화재단에 기고한 '이제 대북 개발협력기구의 발족을 준비해야' 제목의 글에서 "10여 년에 걸친 대북지원의 역사는 동포애의 구현, 남북간 신뢰와 화해기반의 조성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역할에 그쳤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민간단체들의 대북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대북사업에서 북한의 개방 의지나 열악한 인프라, 남측 주체의 재원 규모와 전문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주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량, 건강, 복지 및 환경, 교육문제 등을 담당할 대북협력집행기구를 통일부를 중심으로 농림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 산하 전문기구와 정책전문가, 북한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사회문화 및 인도주의 영역의 초점은 그간 민간운동이 담당해 온 인도주의 지원과 연관된 분야"라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재난구호, 교육 등의 "분야가 이제 당국간 의제로 상정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보건의료와 환경, 교육 등은 국가 공공서비스 기능이 중요한 반면 농업, 축산문제는 시장과 연관된 접근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제는 전문성과 남북 통합적인 사고에 기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mailto:ks@yna.co.kr)



2007-12-11

"李는 사상누각, 鄭은 양꼬없는 찌뽕" <이경주교수>  
대선후보 평화정책 평가.. "曁은 美전략변화도 외면하니 반미?"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유화적인 국면에 들어선 만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금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인하대 법과대학의 이경주 교수가 11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평화재단에 기고한 '대선 보이콧? 평화와 대선' 제하 글에서 "핵문제는 최근 15년 사이의 '뜨거운 감자'지만 재래식 무기 감축이야말로 '기반 문제(basic issue)'"라며 "핵문제에 가려진 본래적 의미의 평화 의제는 다름 아닌 군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가 남.북한 사회의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한 것은 국제관계가 풀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지금이야 말로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의 평화구상이 논쟁적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핵문제마저도 행동 대 행동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이 핵불능화 및 폐기에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의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대선 후 종전선언이라도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점에서 서 있는데도 상위 후보들은 묵묵부답"이라고 이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평화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비핵 개방 3000'에 대해 "사상누각"이라며 핵포기를 전제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000불 올리겠다는 것이지만 "먼저 핵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인지, 난마처럼 얽힌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막연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후보의 '대륙평화경제론'은 "화해협력정책의 계승자라 자임하는 자의 평화정책치고는 양꼬없는 찌뽕 같다"고 이 교수는 비판하고 "국제정세가 유화국면으로 가고, 핵 불능화를 위한 액션플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에게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심지어 파리까지 기차로' 다녀갈 생각만 있고 진정한 평화의 기반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회창 후보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구상은 "실행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한없이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며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 급기야 핵불능화와 북미대화를 병행 추진기로 한 미국의 전략변화마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회창 후보야말로 반미세력 아닌가"하는 소리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mailto:ks@yna.co.kr)

---

 **연합뉴스** 2007-12-25

### "새 정부 대북정책 10.4선언과 연계성 가져야"<전문가>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국내법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10.4선언의 이행과 지속적인 정책 연계성을 갖고 실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민대 법과대의 박정원 교수가 25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평화재단에 기고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법제도화에 못지 않게 약속이행이 중요하다' 제하 글에서 "실사 전임 정부가 합의해 놓은 것이고 새 정부의 국정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존중해 주고,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조차 완전한 이행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당국자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는 역으로 남북 간 교류, 협력에 관해 각기 국내법 마련과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의사항 법제도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태도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도, 현 단계에서는 10.4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10.4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한 각기 법제도화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 간 합의도 북한 군부에 의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차제에 사업별로 한시적인 군사적 보장조치에서 벗어나 대북경제지원 및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남북경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mailto:ks@yna.co.kr)

---

 **연합뉴스** 2008-1-21

### "새정부 남북평화공존 제도화 목표해야"<기고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이 21일 제언했다.

조 실장은 평화재단 웹사이트에 기고한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남북한은 불안정한 정전체제 하에 놓고 있고, 더구나 군사정전위의 기능이 정지돼 있고,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서해상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하루 빨리



보다 안정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불량국가로 취급받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법과 규범, 관행 등을 잘 지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통일부가 외교통일부로 개편될 경우 민족 내부문제가 국제문제의 틀 속에서 다뤄질 위험성을 안고 있어 오히려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정략적인 대북접근을 배격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정책 결정을 강조해 온 만큼, 통일부 개편 문제도 이러한 원칙에 맞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며 체찍 없이 당근만 제시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경우처럼 절름발이 정책이 될 가능성"과 "군사문제에 대한 접근없이 경제주의에 치우쳐 있어 오히려 기존 대북정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세부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세부적인 계획'과 관련, "비핵화와 경협을 큰 틀에서 병행 추진하되, 비핵화의 세부적인 이행단계에 맞춰 남북정상선언의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와 속도를 재조정하고 이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맞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 VII. 함께하는 사람들

고 문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오 현   백담사 회주
지도위원	오재식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백낙청   재단법인 시민방송 이사장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윤여준   전 국회의원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도 법   생명평화탄발순례단 단장 김형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스티브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
이 사	김홍신   소설가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 사 장	법 루   정토회 지도법사
감 사	김기진   전 천안공원묘원 전무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연구위원

#### 1.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방안 연구 모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윤여준 전환경부장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2.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모임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길정우 중앙m&b 대표이사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교수  
이도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3.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모임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승룡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

### 4. 평화법제 연구모임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김성훈 김성훈법률사무소  
박서진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송상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  
정일예 수원지법 판사

객원연구원    이성용 | 요크대

사무국            정안숙 | 사무총장  
                      유정길 | 기획실장  
                      남연우 | 연구실장  
                      김정님 | 조사자료부장  
                      김기숙 | 총무부장

임경원 | 국제부간사  
장옥희 | 국제부간사

#### IV. 사업별 활동 보고

- 1) 평화정책 연구
- 2) 교육 활동
- 3)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섭조정 활동
- 4) 사이버 활동

V. 평화재단 발간물 목록

VI. 언론보도 및 인터뷰 기사로 보는 2007년 평화재단

VII. 함께 하는 사람들